

발간등록번호

11-1540000-000378-10

2011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 보고서’(이하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시행내용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관한 지원사업 등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분야 구조조정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아 '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1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성사업시행내용 보고서’는 ▲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제도개혁 ▲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2011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은 2011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배경, 시행내용 및 성과, 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고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으로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내용보고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으로 인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농림수산업 구조조성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림수산업분야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49
	제1절	2011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3	
	1.	농수산식품 부문	3	
	2.	임업부문	7	
	제2절	2011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9	
	1.	농업·농촌 부문	9	
	2.	임업부문	12	
	3.	수산업·어촌 부문	14	
	제3절	2011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5	
	1.	농수산식품 부문	15	
2.	임업부문	18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25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25	
	2.	산림조합 개혁	29	
	3.	수협개혁	32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35	
	1.	농산물 유통 개혁	35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35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36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41	
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43		
2.	임산물 유통 개선	45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59	
	1.	농지은행제도	59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65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	67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69	
	5.	농업핵심인력 육성	72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72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75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77	
라.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80		
마.	농업벤처 육성	82		
6.	독림가 등 임업인력 육성	84		
가.	전문임업인 육성	84		
나.	기능인 영림단 육성	85		
7.	어업인력 육성	87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89		
1.	농업생산기반 확충	89		
가.	대구획 경지정리	89		
나.	밭 기반 정비	90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2		
라.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93		
마.	수리시설 개보수	95		

목 차

제2절 채소산업	198	라.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58
1. 노지채소	198	마. 산림의 녹색담 기능 제고	261
2. 시설채소	199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64
제3절 과수·화훼산업	201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266
1. 과수산업	201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274
2. 화훼산업	203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274
제4절 축산업	206	나. 임업 기계화 촉진	276
1. 한우산업	206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280
2. 낙농산업	208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282
3. 양돈산업	211	마. 국산재 이용 촉진	285
4. 양계산업	213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288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14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관광 확충	289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216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289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219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291
8. 가축질병 방역강화	221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294
9.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23	라. 등산·트레킹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296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226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303
1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229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306
제5절 임업	231	사. 가로수 조성·관리	309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조성	231	아. 학교숲 조성	313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31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315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236	가.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315
다. 경제림 단지 육성	239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317
라.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241	다. 해외조림 확대	318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246	제6절 수산업	320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246	1. 연근해어업	320
나.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249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54		

목 차

	2. 해면양식어업 323 3. 내수면어업 326 4. 원양어업 329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361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333 1. 일반농산어촌개발 333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338 3.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339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341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341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342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44 제2절 교육여건 개선 347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347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348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50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52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352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354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354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55 다. 공중보건조사 농어촌 우선배치 356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358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358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360	

표 목 차

제1장		〈표 3-18〉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90	
〈표 1-1〉 2011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10	〈표 3-19〉 발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91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12	〈표 3-2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92
〈표 1-3〉 농수산물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18	〈표 3-21〉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94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19	〈표 3-22〉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95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19	〈표 3-2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96
제2장		〈표 3-24〉 연도별 논 및 수리담 현황	97	
〈표 2-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¹⁾		43	〈표 3-25〉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97
〈표 2-2〉 단기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46	〈표 3-26〉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98
〈표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48	〈표 3-27〉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98
〈표 2-4〉 최근 5개년 규제개혁 정책고객 만족도		53	〈표 3-2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100
제3장		〈표 3-29〉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원료지구 현황	101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60	〈표 3-30〉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102
〈표 3-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60	〈표 3-31〉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105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61	〈표 3-3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109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62	〈표 3-33〉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109
〈표 3-5〉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63	〈표 3-34〉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정책과제	113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중신형 기준)		63	〈표 3-35〉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단(황토고구마) 운영 모델(예시)	114
〈표 3-7〉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2011년)		63	〈표 3-36〉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116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실적('97년~'11년)		66	〈표 3-37〉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117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70	〈표 3-38〉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18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71	〈표 3-39〉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120
〈표 3-11〉 2011년 지역별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현황		73	〈표 3-40〉 주요 가축개량 추세	124
〈표 3-12〉 농어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76	〈표 3-41〉 2011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현황	128
〈표 3-13〉 농어업 법인 경영 실태		76	〈표 3-42〉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실적	128
〈표 3-1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81	〈표 3-43〉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129
〈표 3-15〉 제10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83	〈표 3-44〉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2011년)	131
〈표 3-17〉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88	〈표 3-45〉 농식품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	131
			〈표 3-46〉 1994~2011년 농식품기술개발 원료과제 성과활용 현황	132
			〈표 3-47〉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134

표 목 차

〈표 3-48〉 농림수산종합정보망 이용현황	134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 종	232
〈표 3-49〉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11년까지)	137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 보호 출원현황	233
〈표 3-50〉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142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234
〈표 3-51〉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142	〈표 4-8〉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2011년)	234
〈표 3-52〉 25개 수출전략 품목	143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235
〈표 3-53〉 수출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규모	144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238
〈표 3-54〉 2011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149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	240
〈표 3-55〉 2011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현황	154	〈표 4-12〉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98년~'11년)	242
〈표 3-56〉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154	〈표 4-13〉 1단계 숲가꾸기(1) 5개년('04년~'08년) 추진실적	242
〈표 3-5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158	〈표 4-14〉 2단계 숲가꾸기(1) 5개년('09년~'13년) 추진계획	243
〈표 3-58〉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163	〈표 4-15〉 2011년 숲가꾸기 추진실적	243
〈표 3-59〉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165	〈표 4-16〉 2012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245
〈표 3-60〉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165	〈표 4-17〉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246
〈표 3-61〉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166	〈표 4-18〉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1) 발생현황	250
〈표 3-62〉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172	〈표 4-19〉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251
〈표 3-6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실적	173	〈표 4-20〉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251
〈표 3-64〉 부처별 지원 현황	174	〈표 4-21〉 솔껍질깍지벌레 발생현황	252
〈표 3-65〉 여촌어항 관광개발 사업 개요	176	〈표 4-22〉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253
〈표 3-66〉 시·도별 여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177	〈표 4-23〉 산사태 발생 현황	255
〈표 3-67〉 여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178	〈표 4-24〉 그동안 주요 사방사업 시행 실적(2011년까지)	255
〈표 3-68〉 여촌관광모델개발 시범사업 내용	178	〈표 4-25〉 일반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계획	257
〈표 3-69〉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81	〈표 4-26〉 수목원조성·운영 현황	259
〈표 3-70〉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186	〈표 4-27〉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259
		〈표 4-28〉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260
		〈표 4-29〉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263
		〈표 4-3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264
		〈표 4-31〉 국유림 실태조사 결과	265
		〈표 4-3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266
		〈표 4-33〉 백두대간 보호지역 2단계 자원실태조사 현황	267
		〈표 4-34〉 남한지역 6대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및 계획	268
제4장			
〈표 4-1〉 화훼 생산현황	203		
〈표 4-2〉 우유 수급상황	209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210		
〈표 4-4〉 최근 5개년 우유급식을 변화	210		

표 목 차

〈표 4-35〉 백두대간 보호지역1) 사유지 매수 현황	270
〈표 4-36〉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271
〈표 4-37〉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272
〈표 4-38〉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274
〈표 4-39〉 임도시설 기본계획(요약)	275
〈표 4-40〉 2012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275
〈표 4-41〉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76
〈표 4-42〉 임업기계장비 보유 현황(2011년)	277
〈표 4-43〉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278
〈표 4-4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278
〈표 4-4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279
〈표 4-46〉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279
〈표 4-47〉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현황	280
〈표 4-48〉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282
〈표 4-49〉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현황	283
〈표 4-50〉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283
〈표 4-51〉 2011년 목재 수급 실적	286
〈표 4-52〉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290
〈표 4-53〉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현황(2011년)	292
〈표 4-54〉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292
〈표 4-55〉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292
〈표 4-56〉 등산인구 증가추이	297
〈표 4-57〉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297
〈표 4-58〉 전국 등산로 현황(2011년)	300
〈표 4-59〉 훼손등산로 정비 실적 및 계획	301
〈표 4-60〉 트레킹길 조성 실적 및 계획	301
〈표 4-61〉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2009년 기준)	307
〈표 4-62〉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308
〈표 4-63〉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현황(2011년)	308
〈표 4-6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실적	310
〈표 4-65〉 가로수 시도별 현황(2011년)	310
〈표 4-66〉 수종별 가로수 조성현황(2011년)	311
〈표 4-67〉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313

〈표 4-68〉 학교숲 조성실적	314
〈표 4-69〉 해외조림 추진실적	319
〈표 4-7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322
〈표 4-71〉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325
〈표 4-7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1년 기준)	325
〈표 4-73〉 뉴시어업권 현황	326

제5장

〈표 5-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334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335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336
〈표 5-4〉 20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내역	337
〈표 5-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338
〈표 5-6〉 하수도 보급률	339
〈표 5-7〉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예산 반영현황	340
〈표 5-8〉 2011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 집행현황	341
〈표 5-9〉 가축분뇨 처리현황(2010년)	344
〈표 5-10〉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실적	345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348
〈표 5-1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349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351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353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94-'11년)	354
〈표 5-16〉 2011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인력 현황	357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359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359
〈표 5-1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360
〈표 5-20〉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362

그림목차

제2장

〈그림 2-1〉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 유통비중	39
---------------------------	----

제3장

〈그림 3-1〉 제2회 생명산업대전에 곤충산업 체험관 조성	121
〈그림 3-2〉 전체 시스템 구성도	139
〈그림 3-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141

제4장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195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조사요령	233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233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237
〈그림 4-5〉 산림재해방지 조림	238
〈그림 4-6〉 경제림육성단지 입목생육 상황	240
〈그림 4-7〉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구축 및 산물수집	244
〈그림 4-8〉 산사태와 토석류	256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263
〈그림 4-10〉 산림탄소순환마을 개념도	291
〈그림 4-11〉 숲유치원 홍보현황	294
〈그림 4-12〉 지리산둘레길 전경	299
〈그림 4-13〉 5대 트레일 및 5개 명산 둘레길 구축계획(안)	300
〈그림 4-14〉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311
〈그림 4-15〉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312
〈그림 4-16〉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312
〈그림 4-17〉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327
〈그림 4-18〉 논 생태 양식 개념도	328



제1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제1절 2011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제2절 2011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제3절 2011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제1절 2011년 농림수산업 시책추진 방향



1. 농수산식품 부문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김고은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제위기,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개방경제 추세의 확대는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와 귀농귀촌, 농어촌 관광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위험관리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 추진된 주요 농정시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 성장과 농어가 경영안정

2004년 이후 40조원 수준으로 정체되어왔던 농림어업 생산액이 이명박 정부 초기 46조원에서 2011년에는 51.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이는 농어업을 1차 산업만이 아닌 2차, 3차 산업을 결합한 6차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한편,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농어의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까지로 늘리고 대상 재해도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화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를 도입하였다.

▣ 지속적인 농·수협 개혁 시행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 개혁을 통해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 등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차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였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조세·보험 특례 조치를 단행하였다. 아울러 수협 경영을 정상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의 부실수협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2011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11.6)을 수립하여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식품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식품산업은 매년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분야별로 식품가공 및 외식산업 활성화, 한식 세계화 등 식품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다양한 수출전략을 전개하여 국내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 결과 한식업체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농식품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9억달러이었던 농수산물 수출액이 2011년에는 77억달러로 31%나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R&D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추진하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전 부처 최초로 마련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활력 창출

정부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행계획(‘10년~’14년)’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에는 관련 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력 유인을 촉진하였으며, 농어촌 일자리 발굴과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1회 귀농·귀촌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범국민이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추진하여 1만명의 재능기부 신청자가 활동 중이다.

▣ 물가, 재해, 가축질병 등 농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2011년은 사상 최대의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등 가축 348만 마리를 매몰하는 등 축산업의 기반을 위협받았고, 2010년산 쌀의 생산량 감소, 7·8월의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증가, 배추·쇠고기 등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불안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이에 정부는 보유중인 쌀 공급, 돼지고기 무관세 도입, 과잉생산 된 쇠고기에 대한 군 급식 추진 등을 통하여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서민 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와 이력제를 확대하고 인증제를 통폐합하는 등 인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긴급 행동지침을 전면 개선하고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평시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 식량자급률 제고 및 해외 농어업 개발·협력

정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2006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7월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희농지 활용, 해외 농업개발과 국가 곡물조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식량 도입체계 마련 등이다. 아울러 현재 쌀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정을 통해 해외농업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고 곡물확보 능력을

증대시켰다.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 능력을 확대하고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어업협력사업을 개편하였으며, 개도국의 식량·산림문제 해결 및 국내 농식품 관련 기술과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하였다.

▣ 합리적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산자원 방류,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넙치, 전복, 참다랑어 등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양식시설 현대화, 양식어장 신규개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양식산업을 적극 육성하였다.

▣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한·미 FTA를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아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등 직불제도를 대폭 확충하였고, 시설 현대화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규제개혁 가속화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농어촌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유통구조개선, 어업제도 개선 등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수렴해 ‘농어촌 현장애로 100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개혁으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 임업부문

▮ 산림청 산림정책과 사무관 최은형

2011년은 산림의 역할 강화를 위해 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로서 우리나라는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품격 제고, 녹색 산림자원을 통한 국민행복지수 증진, 국제산림협력 주도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를 3대 전략목표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실현,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을 5대 핵심 정책과제로 정하여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첫째,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산림-강-도시 지역에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 숲을 105개소 조성하고, Post-2012에 대비한 REDD+(개도국 산림 전용 방지 및 산림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 화성·연천 등 2개소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 자급률을 15%까지 끌어 올리고, 기존에 농가주택에만 보급하던 펠릿보일러를 공공·산업용으로 확대하는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통해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양삼 등 특별관리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제를 도입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 복합경영단지 15개소를 신규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11.7)하여 임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뽕은감, 대추 등 11개 품목에 대한 임산물 재해복구비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임업인의 복지공간인 산림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국민 수요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치유 활성화와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 명품숲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가산림경관지역 100개소를 선정하는 등 도시 산림의 녹색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에서 녹색 일자리 4만5천개를 창출하여 취약계층 및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통령께 보고한 산림의 미래 비전인 ‘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 후속조치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청-산업은행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넷째,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DMZ 일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을 제정('11.4)하였으며, 특별 산림보호 대상

종 지정을 통한 산림생물종 관리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역대 최저의 산림 병해충 발생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을 위해 161개국 정부대표, 80개국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6,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여 창원 이니셔티브 채택 등 사막화 방지 주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산림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탄소배출권 선점 및 국제 산림협력 확대를 위해 그 동안 숙원이었던 해외 자원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국제 산림 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로 인명과 재산피해도 발생하였다. 2010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 등 도시·생활권 지역에서 4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봄철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가옥 16채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 대응은 산림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제2절 2011년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부문

▮ 정책평가담당관실 서기관 이정길

▣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11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8년차로서 당초 계획 13조 3,604억원의 108.2%인 14조 4,511억원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지난 8년간('04년~'11년) 「119조 투융자 계획」에 따라 집행한 금액은 90조 8,418억원으로 계획 (93조 6,301억원) 대비 97.0%가 집행되었다.

분야별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6조 3,411억원(43.9%),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에 2조 5,866억원(17.9%),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분야에 3조 3,501억원(23.2%),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2조 1,733억원(15.0%)이 투자되었다.

품목별로는 쌀에 2조 5,675억원(17.8%)이 투입되었으며, 지원대상별로는 농업인 등에 7조 1,648억원(49.6%)이 투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5월 수립된 농업·농촌분야 119조 투융자 계획은 2007년 12월 FTA 확대 및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보완되었으며, 금액으로는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증액되었다.



〈표 1-1〉 2011년 투융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예산(A)	2011년 집행내역				집행율 (B/A)
		예산현액	집행액(B)	차년이월	불용액	
합 계	133,604	151,847	144,511	3,455	3,881	108.2
[분야별]	133,604	151,847	144,511	3,455	3,881	108.2
농업경쟁력 강화	68,138	67,857	63,411	2,329	2,117	93.1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27,280	27,556	25,866	74	1,616	94.8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7,348	34,699	33,501	1,051	147	193.1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20,838	21,735	21,733	1	1	104.3
[품목별]	133,604	151,847	144,511	3,455	3,881	108.2
쌀	26,981	27,379	25,675	1,210	494	95.2
특작.원예	12,688	12,768	11,979	14	775	94.4
축 산	9,904	27,144	25,467	1,397	280	257.1
임 업	14,682	15,019	14,782	197	40	100.7
공 통	35,088	34,889	32,087	570	2,232	92.0
기 타	34,281	34,648	34,521	67	60	100.7
[지원대상별]	133,604	151,847	144,511	3,455	3,881	108.2
농업인 등 지원	75,555	75,936	71,648	594	3,694	94.8
SOC 사업	28,702	29,565	28,062	1,503	0	97.8
정부사업	29,347	46,346	44,801	1,358	187	152.7

●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년~'98년),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99년~'03년),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04년~'13년)에 따라 1992년~2011년간 국고기준 약 160조원이 투융자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채감도가 낮고 사업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 진전
 - 경지 3ha 이상 농가 : ('04년) 82천호(6.6%) → ('11년) 97천호(8.3%)
 - 양돈 1천두 이상 농가 : ('04년) 2.8천호(21.6%) → ('11년) 2.6천호(41.6%)
 - 한우 50두 이상 농가 : ('04년) 4.4천호(2.4%) → ('11년) 12.9천호(8.2%)
-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확대
 - 친환경인증 농산물 : ('04년) 461천톤 → ('11년) 1,852천톤
 - 안전성기준 부적합률 : ('04년) 3.8% → ('11년) 1.8%
 -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 ('04년) 20.0억달러 → ('11년) 53.8억달러

- 중·장기적인 농림예산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속 확충

(단위 : %)

구 분 \ 연 도	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발기반 정비율	57.9	70.5	74.4	77.6	81.5	85.2
수리답율	78.0	79.3	79.5	79.8	80.1	80.1(p)

- 농촌지역의 다양한 향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도농상생 토대구축 및 지역개발 촉진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04년) 76개소 → ('11년) 571개소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04년) - → ('07년) 4개소 → ('11년) 45개소
- 농촌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
 - 면단위 상·하수도 시설 등 확대로 생활여건 개선
 - ※ 상수도 보급률 : ('04년) 35.2% → ('11년) 65.0%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11년 33천명),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등 추진
-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등 경영 안정장치 강화
 - 직불금 비중 : ('04년) 8,675억원 → ('11년) 16,277억원

2. 임업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박도환

▣ 임업부문 투융자 실적

2011년 임업부문 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10년 16,208억원보다 3.3% 증가한 17,951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41억원, 농특회계 5,799억원, 혁특회계 81억원, 광특회계 2,757억원 및 책특회계 364억원이 편성되었다. 부문별로는 숲가꾸기, 조림 및 묘목생산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6,205억원을 투자하였고,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산림휴양 등산 증진 및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등 산림자원 이용에 4,466억원,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사방 및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4,373억원, 산림행정 정보화 등 기타 행정지원에 1,698억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회계·부문별 투융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2〉 회계별·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
계		16,208	16,742	534	3.3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7,149	7,741	592	8.3
	■ 농 특 회 계	6,432	5,799	△633	△9.8
	■ 혁 특 회 계	216	81	△135	△62.5
	■ 광 특 회 계	2,085	2,757	672	32.2
	■ 책 특 회 계	326	364	38	11.7
부 문 별	■ 산 림 자 원 육 성	6,112	6,205	93	1.5
	■ 산 림 자 원 이 용	4,387	4,466	79	1.8
	■ 산 림 자 원 보 호	3,967	4,373	406	10.2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742	1,698	△44	△2.5

자료 : 산림청, 2012년

▣ 임업부문 투융자 성과

●● 대·내외 정책여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조립 등 산림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11년 세계 산림의 해 지정, UN), 국내적으로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등을 규정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11.4.14 공포)

또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 인프라 확충 등 임업부문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 산림자원 협력 등 국내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투융자 성과

임업부문을 그동안 국토녹화와 산림자원화 기반조성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 단계로 발전해 왔으며, 기간별 성과는 아래와 같다.

- 1·2차 치산녹화기간('73년~'87년) : 국토녹화 달성
- 3차 산지자원화기간('88년~'97년) : 녹화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기반 조성
- 4차 산림기본계획기간('98년~'07년)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 ha당 임목 축적 : ('79년) 17.9m³ → ('00년) 63.5m³ → ('07년) 97.8m³ → ('10년) 125.6m³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ha당 평균 임목 축적은 125.6m³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산재 생산 및 활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목재 자급률은 15.2%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전년 보다 17천ha가 늘어난 1,560천ha로 국유림률 24.4%를 달성하였다.(추정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관련 사업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및 제조시설 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펠릿 원료 공급을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바이오순환림 조립을 확대 추진하였다. 임업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산물 수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작업임도 신설을 크게 확대하였다. 아울러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증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기능인 영림단 보강 등 임업기능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임업부문 녹색일자리는 경제위기의 회복기조에 발맞춰 내실화를 기하여 산림서비스증진 및 숲가꾸기 사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다.

3. 수산업·어촌 부문

■ 수산정책과 서기관 윤석홍

2011년 수산업·어촌부문 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7,419억원으로, 2010년 8,433억원에 비해 1,014억원(12.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 보면 바다목장 조성, 수협 경영정상화 지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등 일반회계에 3,663억원(49.4%), 수산연구개발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연근해어선 감척, 어촌관광 개발, 국가어항 건설, 바다숲 조성 등 농특회계에 2,894억원(39.0%),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인공어초사업,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 건설 등 광특회계에 862억원(11.6%)이 편성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은 2011년 5,569억원으로, 2010년 5,138억원에 비해 431억원(8.4%) 증가하였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산물 구매지원 사업에 1,079억원(19.4%), 우수 수산물 지원사업에 1,340억원(24.1%),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사업으로 1,328억원(23.9%)이 편성되었다.

제3절 2011년 농림수산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 농수산물 부문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신우식

▣ 예산편성 방향

●● 기본 방향

2011년 농수산물 예산은 쌀 수급안정·한-미 FTA 등 당면현안 해결과 함께 농림수산물분야 미래 성장 준비에 중점을 두고 첨단기술 개발, 생명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성장기반 확충, 농어업 체질개선 및 소득안정 지원 강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 농어촌 지역활성화 및 농어업인 복지 지원 내실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보조금 개편, 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 중점 편성방향

먼저 첨단기술 개발, 생명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고부가가치 생산·가공 등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산 자원조성 및 친환경 농어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농어업 체질 개선 및 소득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목 경쟁력 제고, 재해보험 확대 등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다.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단지 조성 등 기초 인프라 확충, 해외수출진진기지 구축 등 공



세적 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본격적인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 정주·생활 인프라를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농지연금 등 농어업인 복지·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 예산편성 규모

●● 2011년 예산의 전체 모습

2011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 전체 규모는 14조 8,644억원으로 2010년 대비 1.3%(1,906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6개 예산의 규모는 9조 5,328억원이며 8개 기금의 규모는 7조 371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 12조 1,980억원, 수산업·어촌분야 1조 2,988억원, 식품업분야 7,133억원 등을 투자하였다.

●● 부문별 규모 및 주요 특징

첫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체질강화 부문에 2조 3,209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지매매·임대차 등 영농규모화 및 원예·축산 등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생산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안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농어업인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투자 및 현장 중심의 농수산식품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2조 4,763억원을 편성하였다. 쌀값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공익형 직불의 지원 규모를 확대 조정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어업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을 강화하였다. 반면, 경영이양직불은 신규 이양면적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지원을 내실화 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통해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에 1조 6,536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농어촌 기초생활 정비를 위한 농산어촌 종합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넷째, 안정적인 농수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양곡관리 및 농산물 유통분야에 3조 1,130억원을 편성하였다. 공공비축용 추·하곡 매입 등 양곡관리를 위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논에 벼 대신 타작목 재배 유도, 농지매입·비축 등 쌀 수급안정 예산을 대폭 확대 하였다. 또한 주요 농수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확대하였다. 한편 규모화, 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과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시설 현대화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소비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안정 영농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예산을 2조 6,342억원 편성하였다. 새만금 등 대단위 간척지구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물부족 시대에 대비한 용수개발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1조 2,988억원 편성하였다. 수협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원양어업 활성화 및 어업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체계적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고 바다숲 조성 등 관련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확대하였다.

일곱째,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을 7,133억원 편성하였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관련 기술·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지원하였다. 또한 한식 세계화 및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등 공세적, 전략적 수출시장 개척,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2011년 농수산식품분야 예산의 부문별 재정배분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3〉 농수산식품부 부문별 재정배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예산 (A)	2011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지출(예산+기금)	146,738	148,644	1,906	1.3
◇ 예산 일반지출	96,210	95,328	△ 882	△ 0.9
◇ 기금 일반지출	50,528	53,316	2,788	5.5
I. 농림수산	142,350	144,051	1,701	1.2
□ 농업·농촌	120,808	121,980	1,172	1.0
○ 농업체질강화	23,776	23,209	△ 567	△ 2.4
○ 농가소득·경영안정	24,952	24,763	△ 189	△ 0.8
○ 농촌개발·복지증진	16,994	16,536	△ 458	△ 2.7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1,482	31,130	△ 352	△ 1.1
○ 농업생산기반	23,603	26,342	2,739	11.6
□ 수산업·어촌	13,571	12,988	△ 583	△ 4.3
□ 식품업	6,716	7,133	417	6.2
□ 기타사업비	1,254	1,951	697	55.5
II. 기본적경비	4,388	4,593	205	4.7

2. 임업부문

■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박도환

▣ 편성방향

2011년 산림예산은 첫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 뒷받침’, 둘째 ‘기후변화 대응 등 숲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자원 배분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뒷받침,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 및 산림생태계 보호 강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국제산림협력 강화 및 해외 산림투자 확대 등 다섯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예산규모

2011년 세입예산 규모는 7,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938억원) 감소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일반회계의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금이 전년 대비 47.5%(△764억원) 줄어든 데 기인한다.

아울러 2011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34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예산의 0.6%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41억원, 농특회계 5,799억원, 광특회계 2,757억원 및 책특회계 36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 혁신도시(원주) 이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62.4%(△135억원) 줄어든 81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1-4〉 회계별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
계		16,208	16,742	534	3.3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7,149	7,741	592	8.3
	▪ 농 특 회 계	6,432	5,799	△ 633	△ 9.8
	▪ 혁 특 회 계	216	81	△ 135	△ 62.5
	▪ 광 특 회 계	2,085	2,757	672	32.2
	▪ 책 특 회 계	326	364	38	11.7

▣ 부문별 투자실적

부문별 투자규모는 산림자원 육성에 6,205억원, 산림자원 이용에 4,466억원, 산림자원 보호에 4,373억원, 산림행정 지원 등 기타사업에 1,698억원이며 2010년 대비 증액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5〉 부문별 투융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
계		16,208	16,742	534	3.3
부 문 별	▪ 산 림 자 원 육 성	6,112	6,205	93	1.5
	▪ 산 림 자 원 이 용	4,387	4,466	79	1.8
	▪ 산 림 자 원 보 호	3,967	4,373	406	10.2
	▪ 산림행정지원 등 기타	1,742	1,698	△ 44	△ 2.5

부문별 세부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서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녹색 R&D 및 글로벌 산림협력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2단계 숲가꾸기 계획('09년~'13년, 125만ha)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산물수집을 확대하고 바이오순환림 조성을 확대하여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등 임목자원의 수집·활용 촉진을 위한 일괄시스템 구축, 숲가꾸기·조림사업의 내실화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 숲가꾸기 : ('10년) 3,132억원 → ('11년) 2,938억원
 - 숲가꾸기 산물수집 : ('10년) 63천ha, 363억원 → ('11년) 80천ha, 440억원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 ('10년) 3.2천명, 307억원 → ('11년) 5.0천명, 454억원
- 조림 : ('10년) 648억원 → ('11년) 661억원
 - 바이오순환림 조성 : ('10년) 6천ha, 229억원 → ('11년) 8천ha, 291억원
- 간선·작업임도 확충 : ('10년) 577km, 711억원 → ('11년) 678km, 839억원
- 임업기계·장비 보급 : ('10년) 546대, 54억원 → ('11년) 550대, 565억원

또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등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녹색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산림자원 협력·외교를 강화하였다.

- 산림과학연구(R&D) : ('10년) 316억원 → ('11년) 326억원
- 임업기술 연구개발(R&D) : ('10년) 128억원 → ('11년) 135억원
- 국제산림협력 : ('10년) 75억원 → ('11년) 153억원
 - UNCCD 제10차 총회 개최 : ('11년) 62억원

둘째, 산림자원 이용 부문에서는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인 소득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으며, 녹색웰빙 기반 확충 및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촉진 투자를 확대하였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산약초 특화단지 및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사업을 지속 지원하였다.

- 특화품목 등 산림경영 지도 : ('10년) 184억원 → ('11년) 197억원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10년) 536억원 → ('11년) 472억원

국가·지자체 자연휴양림의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형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하

는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을 본격 시작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훼손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험형 숲길 등을 확충하였다.

- 산림휴양·등산 증진 : ('10년) 463억원 → ('11년) 433억원
 -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 ('10년) 135억원 → ('11년) 135억원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 ('10년) 252억원 → ('11년) 281억원

아울러 목재자원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 투자를 확대하였다.

-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 ('10년) 145억원 → ('11년) 167억원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10년) 4천대, 46억원 → ('11년) 4,760대, 68억원

셋째, 산림자원 보호 부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산불현장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망사업은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방제 물량 등 여건 변동에 반영하였다.

- 산불방지대책 : ('10년) 524억원 → ('11년) 495억원
 -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 ('10년) 10천명, 291억원 → ('11년) 10천명, 271억원

- 사망사업 : ('10년) 1,830억원 → ('11년) 1,790억원

- 산림병해충 방제 : ('10년) 674억원 → ('11년) 685억원

또한 백두대간 및 산림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였다.

-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 : ('10년) 334억원 → ('11년) 619억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 ('10년) 251억원 → ('11년) 540억원

-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복원 : ('10년) 86억원 → ('11년) 214억원

넷째,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산림항공본부의 혁신도시(원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 국가산림통계 : ('10년) 53억원 → ('11년) 72억원
- 산림자원 정보화 : ('10년) 63억원 → ('10년) 75억원
- 산림항공본부 이전(서울 → 원주) : ('10년) 216억원 → ('10년) 81억원



제2장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제1절 협동조합 개혁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인기

▣ 시행배경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 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강화방안도 적극 반영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09.6.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09.12)하고, 국회에 제출('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10.2)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10.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10.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

품위 전체회의('11.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드디어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농협중앙회, 금융위 등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 국회의원 개별 방문 설명, 조합장·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토록 하였으며, 공제사업 역시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중앙회사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협법 개정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단을 구성('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사업구조 개편 부족 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이 같은 농협법 시행령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형식은 3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에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관련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출발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경제부문에 배정된 자본금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 산림조합 개혁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임원필

▣ 시행배경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 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11년 현재 전국에 142개 산림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 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78년부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880명)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경영 기술지도, 임업 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제도의 도입,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 마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과 산주와 임업인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1년 현재 135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여건 미흡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

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 실패 등 일부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는 2005년에 최초로 중앙회 소속 14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말 기준 자산은 2조 3,165억원, 부채는 2조 1,200억원, 자본은 1,9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결과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수협과 같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년 8월 3일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 시행일 이전에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여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에는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1차년도 예산 56억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사업을 5년간('08년~'12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35개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법인이 2007년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19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9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 미만인 6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 이상 2% 미만인 10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3개 조합을 합쳐 모두 13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였다.

2007년말 기준 6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대구조합 합병('08년), 전북표고조합 파산('08년), 고흥조합 신용사업 양도('09년)하였으며, 1개조합은 부실우려조합으로 편입('10년)되어 추가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2개조합은 경영개선으로 경영정상화('10년, '11년) 되어 2011년말 구조조정사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말 기준 부실우려 9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에 필요

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를 해당조합에 각각 조치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7개 조합은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 조합과 중앙회는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그중 2011년에 필요한 5개 조합의 경영개선자금 8억원(국고 7억원, 중앙회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이후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에 대한 부실조사 결과 13개 조합의 부실 관련자에게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앞으로도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와 경영개선 약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평가 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실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산림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조합원과 예금을 보호하고 산촌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간 국고 145억원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구조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무실사 결과 순자본비율 2% 미만 7개 조합을 2012년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 대상으로 지정하여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적기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우려조합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합의 경영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하는 등 부실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수협개혁

■ 수산정책과 사무관 하두식

▣ 시행배경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적용('14년부터)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정상조합에 대하여 사전에 부실예방 업무를 명문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11.8)된 후 2011년 11월에 공포(시행 '13.1.1)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은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시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 중앙회 조직·인력구조 혁신 추진

수협법 개정으로 지도·경제부문이 통합됨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인력구조 혁신을 위해 직무분석을 실시('10.11~'11.1)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11.5)을 마련하였다.

지도·경제사업 부문은 기획관리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인사·총무 기능을 분리 운영하기 위해

기획부와 총무부로 직제를 분리하였고, 경제기획부 업무 중 기획, 회계, 자금, 자회사업무 등은 사업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유통사업부에 통합한 후 유통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회장 및 이사회 업무 수행을 위한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하였고, 바다마트사업부를 자회사로 이관하고, 홍보실 및 안전관리실 부서장의 직급을 별급에서 1급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신용사업 부문은 ‘고객중심 독립팀제’ 도입을 위해 전략사업부를 폐지하는 등 10부 3실에서 9부 3실로 조직을 개편하고, RMC 수도권 영업점을 2개 지역(강북, 강남)으로 분리하고 RMC센터장이 현장 마케팅을 지원관리토록 하였으며, 여신관리부와 투자금융관리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실채권 사후관리 기능을 여신관리부로 일원화하여 부실채권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2개 일선수협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순자본비율을 산출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 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9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2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 명령)으로 지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이행목표 부여 등 적기시정조치를 시달함으로써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지도·지원 중심에서 유통·판매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5월)하였다. 중앙회는 전국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재편하여 산지 수산물 전국 판매조직망 및 소비자 직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회와 조합간 연합 판매 및 공동 구매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선수협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판장을 ‘위생품질 관리형 산지시장’으로 전환하고, 수산물 선별·가공·포장 등 상품화를 위한 시설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 향후계획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 및 국제회계기준(‘14년) 도입에 따른 신용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도·경제사업을 포

합한 중앙회 전반에 대한 사업구조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비율 및 경영상태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조합의 경영부실화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부실 발생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한 부실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절 농림수산물 유통 효율화



1. 농산물 유통 개혁

가.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 유통정책과 서기관 안형덕

▣ 시행배경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31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파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농가는 16천호, 모니터 요원은 2천명이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 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 수급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업대상 품목을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02년)과 감귤('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 농가의 사업참여 기준물량을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에는 사과, 배, 감귤, 단감을 대상으로 총 208천톤의 계약출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245천톤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시행 당시의 대상 품목(파프리카, 참다래)을 25개로 확대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조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에 적립된 자조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향후계획

향후 생산자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을 확대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정삼

▣ 시행배경

2010년 가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생산량 감소는 배추의 소비자 가격을 평년에 비해 최고 3.5배까지 올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세계 유수의 언론사인 TIME지는 2010년 10월 7일자 기사(Cabbage Crisis : South Korea Runs Out of Kimchi)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부족이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 배추값 폭등을 계기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등락하는 것을 막고 유통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채소류에 중점에 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마련('11.1)하고 지속 추진중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수급안정 토대 구축, 농협의 역할 강화, 도매시장 거래 제도 개선, 직거래 확대, 공정거래 제도 정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책의 목적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을 막고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유통비용을 감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농업관측 강화

농업관측은 파종전 재배의향 조사와 파종후에는 생산량 예측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심겨질 것이며, 심겨진 이후에는 얼마만큼 생산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수급안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배 의향을 조사하여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품목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 관측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예측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고 이를 피해감으로써 미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종후 재배면적이 확정된 후에는 기상의 변화가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측표본을 늘리고 관측정보를 보다 자주 전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품목별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결정한다. 계약재배¹⁾는 주로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물량 과부족시 정부의 출하 조절명령(시장출하 또는 산지폐기)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2010년에는 생산량의 8%에 대해 계약재배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12%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약재배의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먼저 농업인이 선호하는 포전거래 방식을 계약재배에 도입하였고, 계약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농협중앙회가 영농작업단을 운영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확작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기상이변 등으로 갑작스런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상시 비축을 추진하였다. 고추, 마늘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량의 3%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에 추가하여 소비량의 2% 정도를 국내산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1)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고랭지 감자 등에 대해 실시

연중 4기작(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을 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작기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급부족 예상시 미리 수매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수급조절을 추진하고 있다.

●●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강화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1994년부터 논의해 왔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금번 농협법 개정에 따르면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12.3.2 시행)하고 조합원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농협의 주요 책무로 하도록 하였다. 산지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앙회 경제지주가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것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등의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일례로 작년 고랭지 배추의 경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일반 도매시장 경로보다 33%의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농협은 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수집하고 농협 도매유통회사는 전국단위 물류센터²⁾를 활용하여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 수·발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협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다. 이러한 농협 직거래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생산량의 10% 내외에 불과한 계통출하 물량을 2020년까지 50%까지 확대하여 농협을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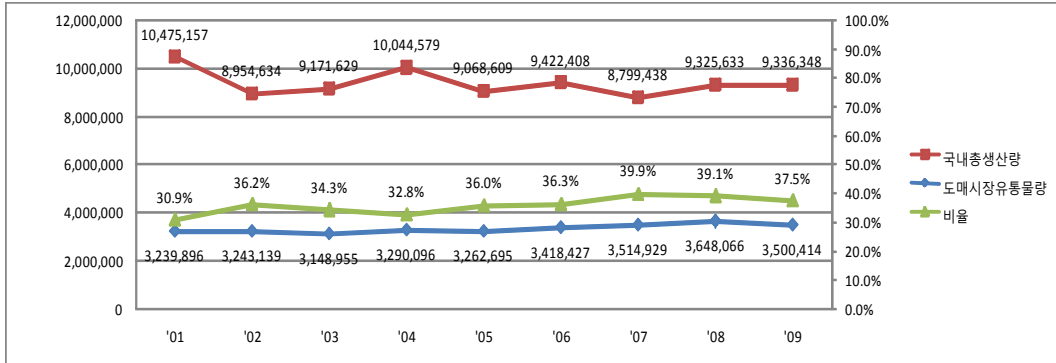
농업 선진국과 같이 산지(產地)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될수록 도매시장의 역할은 축소되고 소매시장이 중계 기구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 농협을 비롯한 산지가 제대로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도매시장³⁾이 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채소를 보면 전체 생산량의 40% 내외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생산량 중 자가소비, 감모 등을 제외하고 실제 유통물량을 생산량의 82% 정도로 가정한다면 절반 가까이의 채소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2) 전국 5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계획. 수도권(안성)은 '13년초, 기타 4개소는 '15년까지 완공할 계획

3) 현재 우리나라는 50개의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121개의 도매법인과 55개의 시장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림 2-1〉 채소의 도매시장 경유 유통비중



도매시장은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집하·분산·중계라는 유통의 순기능 외에 경매라는 일일(一日) 수요공급량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도 크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가·수의 매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도매시장 상장시 정가·수의 매매는 전자거래⁴⁾나 견본거래⁵⁾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하자가 경매와 정가·수의 매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분야 B2B시장⁶⁾ 개척

산지 조직화·규모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는 2009년 1월 문을 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들 수 있다. 사이버거래소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농수산물분야 기업간 상거래(B2B) 시장을 개척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9년 10월 B2B 시범거래를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1,755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하였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수산물분야 B2B시장 확대와 학교급식의 투명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2011년에도 B2B시장의 성장을 지속 이어가고 있으며 6,2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4) 거래할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매매방법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제도('07년 도입)
 5) 일정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의 견본(보관 농수산물 일부)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제도('09년 도입)
 6) 국가 전체 전자거래액('10년) : 824조원(B2B가 91%), 농수산물은 B2C분야 6,800억원(B2C의 2.7%)

●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 확대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의 확산을 위해 2011년 5월 정부는 ‘직거래장터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2009년에 개장한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과 2010년에 개장한 서울터미널 바로마켓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부산, 경남, 충북 증평, 옥천에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였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까지 전체 8개 지자체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고, 2012년부터는 매년 10개소 이상의 장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 생협방식의 직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계획

2011년 가을 배추가격 폭등시 생협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생협이 포기당 1만원이 넘는 배추를 2천원대의 평년가격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생협이 평년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수년에서 10년 이상 거래해 온 생산자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미리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생협의 소비자 회원과 생산자들이 매달 조금씩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협의 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생협방식의 직거래가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생협 회원수는 45만명 정도로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회원수 2,200만명으로 인구 대비 17%나 된다. 정부는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생협방식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산물 공정거래 제도의 정착으로 공생발전 추구

유통개선 대책의 마지막 분야는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제도 정착이다. 90년대 후반에 유통시장을 개방한 이래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산지 조직들이 불공정 거래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중에 있다. 먼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기 유통이 어려운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품의 감액이나 반품시 그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저가납품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2011년 5월에는 ‘대규모 소매업체의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산지에 배포하였다. 이 매뉴얼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이행까지 각 단계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 및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으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매 반기별 합동점검을 통해 산지

가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산지 방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들이 산지를 방문하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사례 및 거래 관행을 조사하여 평가 발표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 1월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급안정 인프라 구축, 계약재배 및 비축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효과와 사이버거래소의 B2B 확대 및 온·오프라인의 직거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의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2012년부터 시작되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강화하고 일괄 파레트화(palletizing),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의 물류효율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 소비자와 산지간 직접거래 활성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 시행배경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 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1년에는 42만명에 72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밖에도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 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1식품·1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 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소를 설치하여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B2B 개설 초년부터 거래목표(1,000억원) 대비 초과 달성(1,755억)으로 농수산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 향후계획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통합 홈페이지(싱싱장터, www.esingsing.co.kr)를 구축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B2C 거래를 증대하였으며,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로컬푸드 차원에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생산자 인근 인구밀집 지역에 정례 장터 개

설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류 확대 및 지역 생산물의 소비촉진, 소비지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안유영

▣ 시행배경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에 이어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희공간 및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경매 부조리,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효율화)을 개선하고자 농안법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표 2-1〉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¹⁾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00	2002	2005	2008	2010
물량(천톤)	6,130	6,411	6,628	7,257	6,873
금액(억)	61,549	69,965	85,203	97,216	123,196

주 : 1) 거래실적 : 공영도매시장(33개소) + 일반법정도매시장(13) + 민영도매시장(3)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0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화 시스템, 저온저장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3개소)을 대상으로 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3개소(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광주각화시장)를 선정하여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락도매시장의 경우 2009년에서 2018년(10년간)까지 연면적 547,0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2010년 시설현대화 건설기본계획수립, 1단계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1단계 공사와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오정시장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며, 임시판매장 조성을 건립하고, 1단계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광주각화시장의 경우 당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도매시장 유통인들이 사업기간 영업손해를 이유로 시설현대화를 반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다.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 범위 확대, 전자거래 시행, 유통주체간 거래규제 완화, 도매시장 기능 복합화, 도매시장 운영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2009년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제도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중인 농수산물은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견본거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 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 향후계획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유통시설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개선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울가락, 대전오정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중앙도매시장과 더불어 지방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천안도매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 유통 효율화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동등하게 규정,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을 위해 대금 정산조직 신설, 경매절차를 생략하고 직접적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 포전매매 서면계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농안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 임산물 유통 개선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심명진

▣ 시행배경

임산물은 대부분 가을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이 없어 수확 후 홍수출하가 불가피하여 시장가격의 불안정은 지속되었다. 이와 함께 다단계적 유통구조로 생산자는 저가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지속되었다. 또한 친환경 임산물의 수요에 대한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FTA 체결 등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의 임산물 유통체계 기반을 확충하고 원료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유통·가공분야 지원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임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임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 정보제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WTO 체제 출범, FTA협상 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 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 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 임산물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경수유통센터 4개소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64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2〉 단기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8년 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64	37,778	21	12,828	18	9,100	13	6,600	12	6,000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m³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어린나무가 62%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 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 조직의 유통 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 단지화, 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집중 지원하였다. 생산에서 가공·유통단

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을 통해 단기 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10개소('11년 12억원)을 지원하고,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에 대한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저장·포장라인 시설 지원 14개소('11년 8.4억원) 및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기계 장비 195대('11년 2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임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안정성과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소비자의 관심도가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 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2005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 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2011년말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39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였다.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현재 6개 품목(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 조경수, 산채류)에 대하여 산지 생산량,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전망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11년 6억원)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여 2008년까지 692개(11억원) 임가의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기 구축한 임업인 홈페이지 운영개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숲으로' 임산물 종합 홈쇼핑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표 2-3〉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등록연도	등록번호	품목	등록번호	등록연도	품목
2006 (8)	1	양양 송이	2009 (6)	21	울진 송이
	2	장흥 표고버섯		22	횡성 더덕
	3	산청 꽃감		23	악양대봉감
	4	정안 밤		24	영동 꽃감
	5	울릉도 삼나물		25	가평 잣
	6	울릉도 미역취		26	홍천 잣
	7	울릉도 참고비	2010 (6)	27	보은 대추
	8	울릉도 부지깥이		28	청도 반시
2007 (5)	9	경산 대추		29	정선 곤드레
	10	봉화 송이		30	거제맹종죽순
	11	청양 구기자		31	태백 곰취
	12	상주 꽃감		32	인제 곰취
	13	남해 창선고사리	33	덕유산고로쇠수액	
2008 (7)	14	영덕 송이	2011 (7)	34	진도 구기자
	15	구례 산수유		35	횡성 참숯
	16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36	담양 죽순
	17	영암 대봉감		37	무주 머루와인
	18	천안 호두		38	충주 밤
	19	문경 오미자		39	함양 꽃감
	20	무주 머루			

또한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식용 임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청정하고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GAP 인증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을 지원('09년 2억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임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지원(5개소, 1.5억원)하였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임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부정 임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향후계획

원료 상태로 유통되는 임산물의 다양한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유통·가공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등을 통한 임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유통·가격 등 다양한 임산물 정보제공과 국내 임산물의 차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3.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 수산정책과 서기관 강혜영

▣ 시행배경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사매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금결제와 영세 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유통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2년부터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하는 출하

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졌으나, 산지위판장의 시설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새로운 유통시설인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유통시설인 ‘시-푸드타운(Sea-Food Town)’ 조성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1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광특예산 세부사업인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23개소 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 위판장 건립(13개소, 52억원), 수산물유통 물류센터(3개소, 19억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3개소, 30억원) 및 전복 일류화 상품기지 개발(1개소 15억원)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중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특히 농특예산으로 수산시장(위판장,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더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유통시설 개선과 부족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3절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1. 농수산식품 부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유기혁

▣ 시행배경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규제는 주 규제 703개, 부수 규제 715개 등 총 1,418개이다. 2011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내수 확대의 폭 축소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우려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 추진, 녹색성장·첨단산업 등의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가속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진입 규제 등 정비 강화, 미래 대비 및 국격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선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등 4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농어업 부문도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농어업인 실수요자 등 현장 애로 규제 및 제도, 농어업 여건 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제도개선 사항과 그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규제개혁 추진은 농어촌 현장 방문 등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애로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 각종 규제건의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바다신문고’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규제개혁을 더욱 내실화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농어촌 현장 등 농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력 제고를 위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애로 및 규제사항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장·차관이 농어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정 확인 및 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 진천지역 벼 작황 점검



▶ 충남지역 농업인단체장 특강

* 장관 취임 이후 전국 10개 시·도, 42개 시·군 방문(총 이동거리 1만 743km)

어업인의 현장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일선수협 등에 ‘바다신문고’를 설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정현안 및 각 농어업인 단체의 불편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소통의 날’을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지자체, 어업인 대표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하여 어족자원 보호, 어업인간 갈등 해소를 통한 건전한 조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어업정책 추진 및 어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별 어업현장애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부산 등 9개 지역)를 개최하였다.

현장 여론이 잘 반영된 경제단체·지자체 건의과제를 최대한 수렴하는 적극적인 사고로 건의과제 64건 중 21건을 수용(33%)하여 규제개혁 및 전략과제 또는 자체 제도개선 과제로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한 법령 제·개정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 불요불급한 규제 등 논의의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였다

* 2011년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실적 : 12회(83개 법령)

●● 공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정비

농수산업 관련분야 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부터 수출·마케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도매시장법인·출하자·중도매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폐지
-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식품가공업체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가공업체 농신보 보증대상을 확대

●●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고령 및 한정적 매체 이용 등 농어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직접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여론 등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주요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총 1,525회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주요 또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하여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개혁효과 체감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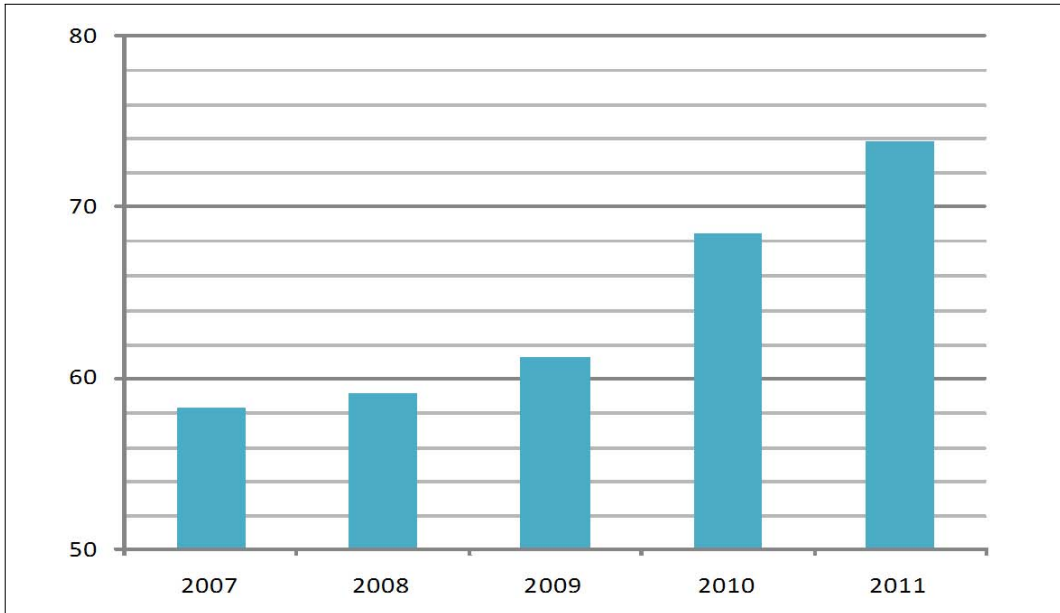
●● 규제개혁 성과

농림수산물분야의 현장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대국민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7년 58.3점에서 2011년 73.8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2-4〉 최근 5개년 규제개혁 정책고객 만족도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정책고객 만족도	58.3	59.1	61.3	68.4	73.8

대국민 규제개혁 만족도 추이



▣ 향후계획

2012년은 그 동안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4년 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2011년 중에 확정·발표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일선현장의 집행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농어업인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규제개선 과제의 효율적인 발굴과 정비를 위해서는 농어업 현장으로부터의 각종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산림 부문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장용진

▣ 시행배경

2011년말 현재 산림청 소관 규제는 모두 79개이며, 이 중 산림자원의 육성 및 토지이용 규제가 36개(46%), 산불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22개(28%),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규제가 21개(26%)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적, 환경적 가치, 즉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행정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국가로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산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규제개혁이 국정 최고의 어젠다(agenda)로 관리됨에 따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규제개혁 방향은 기업의 투자활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지분야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우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코너’ 운영, 규제개혁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개혁 순응도 및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최일선 국유림 관리소장을 ‘현장특임관’ 운영 등을 활용하여 농·산촌 주민 등 국민생활 불편 및 규제개혁 과제 18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이들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이용 분야에서는 산지 전용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에서 지역·지구의 지정·결정 협의시 적용한 보전산지 비율을 산지전용 허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에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시 협의구역에 경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다. 아울러 산지전용 허가·신고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산지전용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하였다.

중소기업 등 업계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사무실은 20~30㎡이상 보유가 의무화 되었던 것을 사무실 면적기준을 없애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법인의 종류별로 각각의 기술자,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되었던 것을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사립수목원 조성면적 기준 완화(3ha이상→2ha이상), 수목원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3개→6개), 등록 수목원의 연간 개방일수를 완화(180일이상→120일이상)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활동을 촉진하였다.

농·산촌 등 국민불편 분야에서는 산촌 주민이 산나물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도록 특정지역 산림을 '산나물 채취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산나물 채취를 허용하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시 5,000m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향후계획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기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산림규제개혁을 목표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수요자에게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을 향상하고 규제개혁 추진 기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장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기계화·현대화
-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 제5절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제1절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



1. 농지은행제도

농지과 사무관 서민정

▣ 시행배경

농촌 고령화 심화,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농지은행 제도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은행의 주요 기능으로는 농지유통화정보제공, 농지구묘화사업, 농지임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촉사업, 농지연금 등이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8.12.29.)에 따라 2009년 6월부터 영농규모화사업을 농지은행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2011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 농지유동화정보제공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를 구축(www.fbo.or.kr)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 농어촌종합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 농지은행 주요사업 연혁

연 도	1990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
사업명					농지연금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임대수탁			
	농지규모화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의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농지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에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1,491ha 1,305억원, 농지임대차 1,292ha 300억원, 농지교환·분합 4ha 6억원 등 총 2,787ha 1,611억원을 3,42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조 5,024억원을 지원하여 161,656ha의 농지를 규모화·집단화시켰다.

〈표 3-2〉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연 도	합계	1990~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 분							
면 적	161,656	135,649	7,855	5,863	5,220	4,282	2,787
금 액	65,024	52,179	3,400	3,204	2,512	2,118	1,6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특히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 규모의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 전업농을 선정하여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34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 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호에서 2011년 70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11년 5.4ha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쌀 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년) 2.5ha → ('05년) 4.2 → ('10년) 5.2 → ('11년) 5.4

이는 2011년 쌀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 1.14ha의 4.7배 규모이다. 또한 2011년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79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854천ha)의 44.4%로, 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들에게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15,923농가에 10,837ha를 임대하여 호당 평균 경영규모 0.7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3-3〉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 호, ha)

연도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가수	82,674	219	6,613	7,997	9,737	27,237	14,948	15,923
면적	47,832	110	3,372	4,277	5,162	15,956	8,118	10,83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 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는 우선적으로 매입해 갈 수 있도록 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있으며,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에 해당하는 저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손실을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의 지급으로 농가 부담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이 회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1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자금(농협)과 연계하여 상담과 신청, 자금의 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 위기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금액별로 선정기관을 달리하는 등 대상자 선정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표 3-4)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단위 : 호, ha, 억원)

연도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가수	3,878	183	444	490	635	1,148	978
면적	5,196	311	629	696	878	1,369	1,313
금액	9,070	422	953	1,195	1,700	2,400	2,4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지은행이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 이농·전업(轉業)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 농지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안의 우량농지를 시가로 매입함으로써 원활한 고령은퇴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매입 비축한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주어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해 주는 등 농업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711ha를 매입하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매입한 농지 1,206ha 중 1,182ha를 1,320농가(농가당 0.9ha)에게 임대해 주었다.

〈표 3-5〉 농지매입비촉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매 입			임 대		
	합계	2010년	2011년	합계	2010년	2011년
면 적	1,206	495	711	1,182	486	696
금 액	2,323	750	1,573	-	-	-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2년

●● 농지연금사업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의 면적이 3ha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표 3-6〉 농지연금 월 지급금 예시(종신형 기준)

(단위 : ha, 억원)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66만원	78	94	116

2011년에는 총 1,007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였으며, 총 72억원의 연금액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97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5세로 나타났다.

〈표 3-7〉 농지연금사업 추진실적(2011년)

(단위 : 호, 만원, m²)

가입 인원 (명)			평균 연금액 (만원)			담보농지(m ² , 백만원)	
계	종신형	기간형	계	종신형	기간형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1,007	380	627	97	90	100	5,371	159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2년

▣ 향후계획

농지구묘화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6ha 규모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2.5~4ha 규모 쌀 전업농을 중점 지원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비예산) 등을 활용하여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12년 사업목표를 12,000ha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수탁대상 농지 물색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연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영회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 유동화 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2012년 1,000ha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제도(농지법, '12.7 시행) 도입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매수 청구 농지를 매입하는 등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젊은 2030세대 창업농에게 농지의 매입과 임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농업·농촌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원활한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등 농업구조조정을 연착륙 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박영근

▣ 시행배경

2011년 전체 농가인구 2,962천명 중 65세 이상이 약 34%(1,000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 1,163천호 가운데 66%의 경지 규모는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 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토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25만원(연간 300만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 초기부터 한국농어촌 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 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타결에 대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 참여자

가 예상보다 적어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당초 1만ha의 경영이양 신규 사업물량을 3천ha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 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지방지 118회 광고게재, 안내문 21만매, 리플릿 16만매 배포, 정책홍보 만화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95천명에게 직불금 2,849억원(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8천ha를 전업농 65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3-8) 경영이양 사업추진실적('97년~'11년)

(단위 : 백만원, %)

예 산		경영이양실적			전업농 등 지원현황	
면 적	금 액	인 원	면 적	금 액	인 원	1인당 양수면적
100,798	419,092	94,684	67,918	309,995	65,090	1.04

※ 매매·임대차 중복지원자 “계” 제외(고령농업인 2,850명, 전업농 12,689명)

▣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ha당 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2년에는 사업신청 가능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 의향 조사, 고령 경영주 농가 증감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를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 시행배경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 주체도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 유통조직이 지역조합 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 브랜드화, 고정 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 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공동계산액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급의 용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 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다.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 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및 소비시장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 경영체 위주의 육성 정책에서 통합 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여 통합 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330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 마케팅 조직은 2005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공모를 통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 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조직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 활성화자금(대출기간 3년, 이자율 1%)과 무이자 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

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 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 선정, 공동 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 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 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 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상대평가를 통해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 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 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 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 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정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해서 2011년부터는 통합경영체 위주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좀 더 강화하여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 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 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 컨설팅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 유통조직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제 개선안을 마련(‘10.7)하여, 장기 정채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이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 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 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 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 유통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농업종합자금 제도 개선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서영주

▣ 시행배경

농업종합자금은 지역별, 품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 등 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 등 경영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산정하여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추진 경과

1999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에는 전업농 육성사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13개 시설사업 자금을 통합하였고, 2002년에는 농기업경영자금 및 전업축산경영자금 등 전업농에게 지원하는 2개 운전자금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대당 3천만원 이상), 자가 배합사료 제조시설 지원, 관광농원 개발, 농촌 민박마을 조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2004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대당 2천만원 이상),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객토자금,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2005년에는 농기계 구입자금(대당 1천만원 이상),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의 경우 인력 육성을 위한 집중관리 필요성에 따라 2007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사업은 능동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현황

지원조건은 연리 3%,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상환, 농기계 구입자금은 1년 거치 4~7년 상환이며, 지원규모도 최근 5년 평균 11,228억원 규모로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3-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단위 : 억원)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0,202	12,010	11,050	12,978	9,901
	56,141				

●● 지원성과

농업종합자금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조되고, 대출기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 결과 무리한 과잉투자 해소와 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불식된 것은 큰 성과중 하나이다. 아울러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일괄하여 지원하는 점도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3-10〉 기존 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기존지원체계	종합지원 제도
○ 지원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농협)
○ 자금지원	연1회 일괄 선정·지원	수시선정·지원, 사업평가 후 추가지원
○ 사후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향후계획

지금까지 불요불급한 평가항목 삭제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대출절차를 표준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더욱 간소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 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 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 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 징후 사전감지 및 농가에 경영진단 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업종 전망 및 동향 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업핵심인력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강효주

▣ 시행배경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부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 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 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 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 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농업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기하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후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영농기반 확장을 통해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 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인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던 인턴사업을 통합하였는데, 농산업인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해외농업인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09년까지 이전 연도에 선정하여 다음 연도에 자금 지원하여 선정과 지원간의 시차에 의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선정된 당해 연도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는 창업융자금의 신청 및 대출이 확보한 예산의 50%에 못 미쳤으나 융자금을 선정 당해 연도에 최소 4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40% 이상 사용한 자에 한 해 3년 동안 분할하여 잔여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융자금 대출을 확보 예산의 94%까지 지원하였다.

2011년 후계 농업경영인은 1,500명이 선정되었다. 이중 남성이 1,286명(85.9%), 여성이 211명(14.1%)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36명(29.1%), 30대가 591명(39.5%), 40대가 470명(31.4%)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99명, 전북 280명, 전남 222명, 경기 181명, 충남 121명, 경남 160명 순이다.

〈표 3-11〉 2011년 지역별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1,500	181	67	86	121	280	222	299	160	43	41
(%)	12.1	4.5	5.7	8.1	18.7	14.8	20.0	10.7	2.9	2.5

●● 후계 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후계 농업경영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1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500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저리의 장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농산업인턴제

영농 창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4세 사이의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으로 선도농가에서 현장 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40만원까지 지원되며, 2011년에는 2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 농산물 품목 개발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3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29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우수농업인 추가지원사업

후계 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 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 확보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으로 438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향후계획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약 2조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33천명의 후계 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시행배경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농어업, 농수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가,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등의 근거 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총 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법인의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도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군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를 종전 비농업인 3/4 이내에서 최대 9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0% 이상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한도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조직변경 근거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경영효율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운영 중인 농어업법인은 2000년 5,522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 수는 11,690개이며, 그 중 농업법인은 10,867개, 어업법인수는 823개로 조사되었고,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66.9천명,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4.9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3-12〉 농어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구 분 \ 연 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업법인 수	5,522	5,754	5,791	6,010	6,504	6,537	10,526	11,690
영농조합법인	3,852	4,293	4,410	4,624	5,075	5,597	8,107	8,724
농업회사법인	1,356	967	898	896	928	940	1,633	2,143
영어조합법인	314	494	483	490	501	768	764	800
영어회사법인	-	-	-	-	-	-	11	23

자료 : 통계청. 단, 2009년 이후 모집단 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2010년부터 이전 수치와 시계열 분석 단절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6.9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6.5% 수준이며, 사업 유형은 농업 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5.1%,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4.9억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39.8%, 농업생산수입 26.3%, 가공업 24.1%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는 법인당 자산은 12.6억원, 부채는 7.7억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57.2%로 전년(157.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농어업 법인 경영 실태

(단위 : 개, 억원, ha, %)

구 분 \ 연 도	2010	2011	증감률	구 분	2010	2011	증감률
결산법인 수(농업)	7,009	8,520	21.6	결산법인 수(어업)	594	676	13.8
자산	12.7	12.6	△1.2	자산	9.6	10.7	11.5
부채	7.8	7.7	△0.9	부채	6.4	7.1	9.6
매출액	1.7	1.7	△3.0	매출액	13	14	7.9
법인당 경지면적	11.4	11.3	△2.9	법인당 양식장면적	4.5	4.1	△8.9

자료 : 통계청,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보고서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6.5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65.4%이며, 사업 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46.1%, 법인당 판매액은 12.8억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23.4%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0.7억원, 부채 7.1억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5.9%로 전년(204.2%)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 향후계획

지속적인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농어업법인이 증가하는 동시에 경영지표도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에 대한 비용절감의 추진 및 농식품 모태펀드 등 창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 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어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군별로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점검을 위해 전국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법인이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업법인이 농촌 일자리 창출 등 농어업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등 농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 농업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손윤하

▣ 시행배경

FTA 등 급변하는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정예 농업인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습 위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체계를 정착시키고자 선도 농가 실습장, 전국 대표 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 교육장 확충과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과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0개 캠퍼스에서 88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하여 생산성 증대 및 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 학교교육 활성화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의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중심의 학교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2개 농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농고비전스쿨, 전국FFK전진대회, 학술대회, 농고멘토링, 우수학생 국외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농과대 영농정착 교육과정은 전국 11개 농과대학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운영으로 현장견학 및 체험, 현장실습교육(WPL), 인턴십, 진로탐색프로그램(Job Map 프로젝트), 학교별 연계수업, 우수학생 대상 국외연수, 지역 농고와 협력 등을 지원하였다.

● 공모방식 도입

농정 목표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전면 경쟁체계를 도입한 공모방식으로 교육 기관과 과정을 선정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2월 농한기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기에 농업교육과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등 분야와 추가 공모를 통하여 49개 기관 76개 과정을 선정하여 전문 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주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여성 농업인과 연계, 1:1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농업·농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 16개 기관 1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10개 기관을 통해 15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국외 시장개척을 선도하였다.

●● 교육운영 평가지표 개발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 국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강의평가/모니터링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다음해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장기 교육과정인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역량 수준과 변화를 측정하여 교육운영 성과 측정에 활용하였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지정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개발, 농업교육이 농업경영체 성공에 미치는 영향 실증 분석 연구, 농업교육 수요 및 운영실태 조사, 농고·농대 농산업분야 인식변화 조사분석,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교육 학위취득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인적자원지표 개발연구와 농업교육 전·후의 농업인 역량(능력 표준)을 점검하고 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통합 농업교육정보 서비스 구축

농업 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 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농업교육정보 서비스(AgriEDU)에 대한 보완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통합 운영체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기능 고도화를 실시하였다.

▣ 향후계획

농업 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을 내실화하여 기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장 57개와 전국대표 실습장 7곳을 지정·운영하여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실습교육장 등의 구축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AgriEDU) 기능 고도화 등으로 교육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교육 인적자원지표 통계조사, 농업교육훈련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정량적인 점검에 의한 교육성과 측정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획과제 공모, 자생적 학습조직 운영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농정 현안 및 중장기 농정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업 교육체계 개편으로 범농어업계 교육의 전문성 확대 및 체계적인 교육 운영의 기반을 확대하며, 성과 창출을 바탕으로 교육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교육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 및 농어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 농업인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조은지

▣ 시행배경

농어업 산업분야의 상업화, 규모화, 전문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 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 농가의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기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컨설팅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 및 법인을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 컨설팅, 농협 등 농업인단체의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분야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여 컨설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요소와 부실 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턴트,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고, 컨설턴트, 컨설팅업체당 사업량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평가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 실시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및 컨설팅 질의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생산기술 위주의 농어가 컨설팅을 축소하고 법인 및 조직경영체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11개 조직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11년부터 자부담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자율적 컨설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및 어업컨설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컨설팅 주체(지자체, 컨설팅업체, 경영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점검평가

2010년에 농어업 경영컨설팅을 받은 994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수행단계별 점검 및 평가를 실시·완료하는 한편 2011년에 컨설팅을 받은 934개(개별경영체 778개, 법인 및 조직경영체 156개) 경영체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하였다. 2010년 경영체에 대하여 수행계획이 불량한 415건에 대해 보완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컨설턴트 1명 자격정지, 컨설팅업체 4곳에 주의 조치, 60개 경영체의 부실한 컨설팅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다.

●● 컨설팅 후 농가소득 증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컨설팅 대상 농업경영체의 10%(150개 경영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 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 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컨설팅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22.9%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3-14〉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 연 도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량(개소)	220	1,000	1,009	1,080	1,250	1,448	994	934
사업비(백만원)	1,710	8,000	8,640	8,640	9,750	11,200	10,080	9,916
국 고	671	4,000	4,400	4,400	5,000	5,600	5,040	3,111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어촌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농업 경영컨설팅은 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가·법인·조직경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2011년 평가점검단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은 33.6%, 순이익은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부터는 FTA 피해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 농업벤처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허영희

▣ 시행배경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 기업이다. 농업벤처는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8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 실현 제10회 농업벤처창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 2006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농업벤처 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 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켰다.

〈표 3-15〉 제10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강동연	7백만원	기능성 황토죽염
우 수 (3)	윤선주	5	효소추출공법을 이용한 과일음료
	이종우	5	쌀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쌀호두과자
	정진근	5	참두릅 묘목과 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장 려 (6)	김영남	2	미강을 활용한 미강유
	김지한	2	기능성현미 ‘활활미’(活活米)
	목영래	2	컨트롤러가 포함된 양돈/양계/공장/일반건축용 인공지능 환기팬
	이중근	2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흑미 차(茶)음료
	제해수	2	뿌려먹는 분말고추장
	허병문	2	알로에(사포나리아) 발효액 이용 건강음료 및 화장품

▣ 향후계획

2012년부터는 예산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농식품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6.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

가. 전문 임업인 육성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주무관 박재신

▣ 시행배경

우리나라 전체 산림 6,369천ha 중 68%에 해당하는 4,338천ha가 사유림으로, 소유 규모는 1인당 2.1ha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또한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을 선발하여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자금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통해 임업의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전문임업인 선발 배경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을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장기수 조림을 위한 임야 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문 임업인은 2011년에 본인 사망 또는 자격 포기자 등 17명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로 독립가 40명, 임업후계자 433명, 신지식임업인 2명을 선정(선발)하여, 독립가 510명, 임업후계자 4,158명, 신지식임업인 63명을 합하여 총 4,731명을 선정(선발)하였다.

●● 전문 임업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 임업인에게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국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리 1.5~3.0%, 상환기간 15~35년으로 융자지원 하였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업 경영능력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하여 임업 경영에 대한 교육과 경영 실적이 우수한 전문 임업인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 임업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 향후계획

전문 임업인의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지원확대, 융자조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세제감면 등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기능인 영립단 육성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김종세

▣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어린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 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 영립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 영립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업 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1,022단 8,859명을 조직(국유림관리소 141단 1,619명, 산림조합 392단 4,306명, 산림사업법인 489단 2,934명)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16〉 최근 3년간 입업기능인 영림단 조직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837	7,941	911	8,226	1,022	8,859
국유림 영림단	143	1,854	139	1,686	141	1,619
산림조합 영림단	392	4,275	396	4,284	392	4,306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302	1,812	376	2,256	489	2,934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입업 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입업 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개단 240명의 영림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림단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통해 입업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 1,647점(170백만원)을 신규 영림단에게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입업 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 및 현장 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입업 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입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 영림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사업 등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의 확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 기계와 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며,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 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 수준 향상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7. 어업인력 육성

▣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명준

▣ 시행배경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수산경영 기술지도와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금을 용자로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업경영인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서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착수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수산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기술 및 교육 등 각종 수산관계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3% 장기저리(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로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신용도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는 5천만원, 전업경영인은 7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81년부터 2011년까지 19,757명에게 5,202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3-17〉 수산업경영인 육성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년까지		2011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9,757	520,211	18,772	469,741	985	50,470
어업인후계자(1981년부터)	16,498	339,455	15,772	307,685	726	31,770
전업경영인(1992년부터)	3,068	162,741	2,852	148,291	216	14,450
선도우수경영인(1995년부터)	191	18,015	148	13,765	43	4,25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11년)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2011년에는 985명에게 5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업경영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할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어촌지역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창업자금 2억원과 주택구입비 4천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05명에게 112억원이 지원되었다.

▣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 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전업경영인의 경우 대상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집행대상사업을 당초 양식어업, 어선어업, 가공분야에서 유통분야로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지속적인 어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귀어·귀촌에 대한 창업자금과 주택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기계화·현대화

1.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시·도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국고 2조 4,005억원을 투입하여 119.7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하였다.

〈표 3-18〉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1년 까지		2012년 계획		2013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19.7	70.6	3.3	72.5	46.6
사업비(억원, 국고)	37,632	24,005	63.8	776	65.9	12,85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나. 밭 기반 정비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

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개발, 농로 개설, 밭 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국고 1조 7,294억원을 투입하여 93.7천ha를 착수하였다.

〈표 3-19〉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1년 까지		2012년 계획		2013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10	93.7	85.2	3.7	88.5	12.6
사업비(억원, 국고)	20,563	17,294	84.1	822	88.1	2,4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 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 자율편성)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1년까지 국고 1조 9,417억원을 투입하여 목표 연장 35천km 중 23.6천km를 완료하였다.

〈표 3-2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1년 까지		2012년 계획		2013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3.6	67.4	1.1	70.5	10.3
사업비(억원, 국고)	29,689	19,417	65.4	834	68.2	9,4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향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농업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배수개선 등 기타 기반정비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조래청

▣ 시행배경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 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까지 국고 3조 7,187억원을 투입하여 153.4천ha를 완료하였다.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1년에는 배수개선사업 62개 지구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5천ha로 조정('09.7)하였다.

〈표 3-21〉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분	목표	2011년 까지		2012년 계획		2013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5	153.4	66.0	4.2	67.8	74.9
사업비(억원, 국고)	75,610	37,187	49.2	2,500	52.5	35,92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3,492지구(국가관리 208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1,562지구(국가 162, 지방 1,400)를 완료하였다.

▣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배수개선사업 18개 지구, 방조제개보수사업 30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마.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조례청

▣ 시행배경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상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누수가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2〉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69,313	17,531	7,529	18,116	2,721	23,416
30년 이상	39,471	16,648	2,783	14,804	2,353	2,883
30년 미만	29,842	883	4,746	3,312	368	20,533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400지구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80지구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0.3천km를 구조물화 또는 친환경 수로 등으로 정비하였다.

〈표 3-23〉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지구)

구 분		총계획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이후
사업비		109,323	52,971	2,600	53,752
사업량	수 원 공	4,330	2,090	80	2,029
	수로정비	15.9천km	5.9천km	0.3천km	9.7천km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농촌용수 개발사업

▣ 농업기반과 서기관 한준희

▣ 시행배경

농촌용수 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영농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등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중인 지구는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984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 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788천ha(80.1%)이고, 수리시설이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 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96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20천ha(52.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3-24〉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구 분 \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10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984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788
	(B/A)%	76.6	77.9	79.2	80.1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20
	(C/A)%	36.6	39.0	44.1	52.9
수리불안전답(D)	천ha	269	249	225	196
	(D/A)%	23.4	22.1	20.8	1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66개 지구(30천ha)에 1,729억원을 투입하여 1개지구 0.1천ha를 준공하였고, 2012년에는 71개 지구(30천ha)에 2,100억원을 투입하여 6개지구 2.1천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3-25〉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995년~2013년)	사업량(천ha)	107.5	61.4	2.1	44.0
	추진율(%)	100	57.1	59.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31개 지구(1.1천ha)에 279억원(국고 174억원, 지방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14개 지구 0.4천ha를 준공하였고, 11개 지구 0.3천ha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33개 지구(0.8천ha)에 163억원(국고 113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하여 17개 지구 0.3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6〉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소 규모 (03년~계속)	사업량(천ha)	11.0	2.3	0.3	8.4
	추진율(%)	100	20.9	23.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지표수 보강 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 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86개 지구(10.4천ha)에 810억원(국고 696억원, 지방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23개 지구 1.5천ha를 준공하였고, 18개 지구 1.2천ha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80개 지구(8.2천ha)에 698억원(국고 580억원, 지방비 118억원)을 투입하여 8개 지구 0.6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3-27〉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현황

구 분		총계획	2011까지	2012계획	2013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31.8	29.7	0.6	1.5
	추진율(%)	100	93.4	9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 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

은 53%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20% 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 충족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써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이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사.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

▣ 4대강새만금과 사무관 박재수,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 시행배경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일 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계(水系) 단위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1970년대부터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금강(錦江) 등과 같은 대단위 수계(水系)내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고,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3-28〉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 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특회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옹,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관리기금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시행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추진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307천ha를 추진하여 2011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지구 등 9지구 145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2011년까지 총 6조 1,593억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3,661ha, 경지정리 11,255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8,895ha 조성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의 농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여 2010년 5월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다.

이후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 차원에서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 4공구(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 축산단지, 말 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코팜랜드(경기도 주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 여건 등을 반영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11.3)하였으며, 방조제 내측 토지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착공한 방수제(7개공구)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11.3)하였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점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첨단산업 기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공유 토지·건물의 장기임대 허용 및 광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수립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3-29〉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5지구)			161,667		1,376,806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1970 ~ 19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1970 ~ 1977	37,657
영 산 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1972 ~ 19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1974 ~ 19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1974 ~ 1979	12,521
창 녕	경 남	창녕	2,269	1975 ~ 19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1975 ~ 19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1977 ~ 19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1978 ~ 19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1977 ~ 19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1978 ~ 1990	94,035
금 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1983 ~ 1990	101,000
삼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1975 ~ 19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1980 ~ 1996	185,630
영 산 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1976 ~ 1998	354,4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 향후계획

2012년에는 새만금 및 금강Ⅱ 등 시행중 9지구에 국고(농특회계) 736억원과 농지관리기금 2,847억원 등 총 2,734억원을 투입하여 홍보지구 배수개선 227ha,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191ha, 화옹·시화 방수제 35.6km 등을 부분 준공할 계획이며,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655ha 및 화옹지구 4공구 에코팜랜드(768ha)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하여 신규 착수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977년~1988년까지 미호천 인근 12천ha 용수 공급을 위해 백곡·원남·광혜·금왕·맹동 등 5개 저수지를 축조한 미호천Ⅰ 지구에 이어 청주·청원·천안 일원 4천ha의 농경지에 용수 공급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착수한 미호천 II 지구가 청원도수로, 남계·청원양수장, 청주시 무심천내 청주보 및 동·서부공구내 경지정리 1,417ha 등을 완료하고 2012년에 관개면적 857ha, 저수용량 759만톤에 달하는 오창저수지를 마지막으로 준공하고, 23년에 걸친 미호천 II 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준공식을 2012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표 3-30〉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9지구)	5개 시도	23개 시군	144,868	1989~2020	10,121,266	
금 강 II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군산·익산·김제	43,000	1989~2014	810,341	
미호천 II	충북·충남	청원·청주·천안	4,430	1989~2012	324,375	
홍 보	충 남	홍성·보령	8,100	1991~2016	437,464	
영산강Ⅳ	전 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2001~2015	783,947	
영산강Ⅲ-1	전 남	영암 · 해남·강진	13,160	1995~2015	624,644	
영산강Ⅲ-2	전 남	해남	7,840	1997~2014	411,582	
화옹	경 기	화성	6,212	1991~2016	875,531	
시화	경 기	안산·화성	4,396	1998~2016	429,136	
새만금	(외곽)	전 북	부안·김제·군산	41,000	1991~2010	2,949,008
	(내부)	전 북	부안·김제·군산	-	2009~2020	2,475,2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내측 토지를 농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에 착공한 방수제 공사는 2015년 완료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 이후 대규모 농업회사가 입주 예정인 농업용지 5공구(1,513ha)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협의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농업 전망 및 내부 농업용지 개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을 보완·추진하고, 새만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신시도 휴게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2. 농업의 기계화

▣ 시행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기계화는 농기계의 개발, 보급 촉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 5년마다 농업 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기계 구입비용의 80%를 저금리로 2011년에는 총 5,803억원을 용자 지원하였으며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7개 농업기계를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안전장치 부분에 대하여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의 이용 효율을 높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지역농협 673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의 보급 촉진과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논농업은 건조를 제외하면 거의 완전한 기계화를 달성하였으며, 지역농협 임대사업소를 통해 벼 재배면적의 약 15%인 130만ha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다.

다만 아직도 품목, 농작업이 다양한 밭농업 작물 재배에는 경운, 정지를 제외한 파종, 수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이 어렵지만,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기계화가 미흡한 콩·인삼 등 특화작목 및 조사료 등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거나 신규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하고, 발작물 전용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여 노령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에 기계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정부에서 발농가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농기계 임대사업과 2008년부터 농협이 운영해온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에는 고추, 마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고추, 마늘농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150억원을 국고 지원하되, 농협중앙회는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시설의 현대화

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괄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과정)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쌀 품질향상 및 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한 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 200, 민간 128)가 설치한 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 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 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벼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전국에 1,235개소를 설치하였다.

RPC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로 과거 농가가 직접 벼를 건조하여 과건(過乾)·급건(急乾)으로 벼의 품질이 저하되던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농가는 수확한 벼를 RPC에 입고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됨으로써 벼를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가의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농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함으로써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표 3-31〉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110	110	104	83	29	1,235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258	253	239	207	89	2,530

▣ 향후계획

2012년에도 건조·저장시설 29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국고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4개소, 63억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위성 증설시설 지원(10개소, 18억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5개소, 8억원)할 계획이다.

나. 원예·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 원예경영과 이덕민 사무관

▣ 시행배경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작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절실하다. 또한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국내산 원예·특용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제어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해마다 기상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표준모델을 도입하여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도면 48종을 개발·보급해 재해경감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원예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증개축 및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의 시설원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제공

2007년 4월부터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예·특작시설 관계 전문기관에서 조사·개발한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맞는 설계도·시방서 48종을 개발하고 농업기술 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여 재해경감 기반을 조성하였다.

- 시설원에 품질개선

원예 전문단지 중 설치된지 10년이상 되어 노후화가 심한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선정하여 단지 증개축과 함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840ha에 대해 1,338억원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기존의 내재형 규격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규격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폐기하고, 품목·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강도 변화기준에 맞는 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보완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원예 전문단지 이외에도 일반 원예시설과 고추 비가림 시설까지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다. 축산시설 현대화

▣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박홍식

▣ 시행배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994~1999년까지 축사의 신개축, 개보수 및 자동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업 규모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되었던 시설의 노후화, 사육환경 변화 및 FTA 확대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노후한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2010년부터 모돈 번식 전문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HACCP 인증 의무화로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 향후계획

FTA 등 개방에 대비하여 축산농가가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축사시설에 대해 2017년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축종별 전업농 이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 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적용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축사 현대화시설자금 지원 예산 : ('09년) 99,539백만원 → ('10년) 114,728 → ('11년) 163,255 → ('12년) 276,000

아울러 사육두수 과잉 등 수급이 불안한 축종은 수급 안정 시까지 축사 신개축 등의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4.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시행배경

우리 어촌은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 어촌의 생산소득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 생활환경 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2013년	8,795억원	230개권역	국비 70%, 지방비 30%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등

▣ 시행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 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원 중 2011년까지 6,926억원(국고지원 4,083억원)을 투자하여 181개 권역은 완공하고 27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9%)중에 있다.

〈표 3-33〉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8까지	2009	2010	2011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 업 량	174(12)	10(13)
	사 업 비	600,850	25,831	26,457	151,890

주 : ()내는 계속 지원대상 포함 권역수임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어촌어항법에 따라 새롭게 수립되는 ‘제3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14년~’18년)’에 맞추어 ‘제3차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생산과 휴양·관광 산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복합 생활공간’으로 어촌을 추가 개발·조성할 계획이다.

제3절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1. 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임영조

▣ 시행배경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09년 4.9조달러에 이어 2010년 5조달러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⁷⁾. 이것은 2009년 기준으로 식품시장이 IT시장 3.5조달러, 철강시장 0.5조달러에 비해 약 1.4~10배 큰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식품시장은 향후 연평균 3.6% 성장하여 2012년에는 5.4조달러, 2015년에는 6조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6.4조달러가 될 것이다.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식품시장은 133조원 규모이다. 2001년 70조원이었던 국내 식품산업은 10년간 약 63조원이 증가하여 89.1% 성장하였다. 이것은 식품산업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4% 성장한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식품산업은 농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을 2007년 12월 27일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11월 13일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9월 28일에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과의 연속

7) 세계 식품시장 매출액(Datamonitor 추정) : ('02년) 3.3조달러 → ('09년) 4.9조달러

성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9월 수립·발표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7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245조원, 농식품 수출액 200억달러,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소비자 정보제공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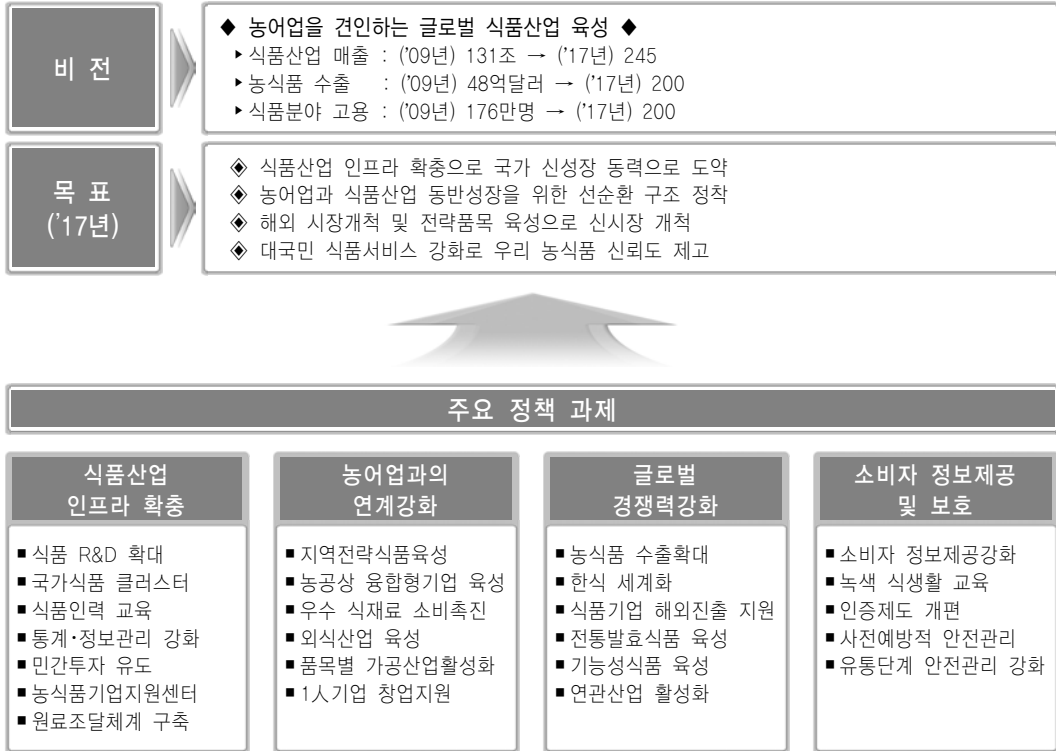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R&D·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식품산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R&D 투자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R&D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D 지원 방식을 공급자 위주에서 식품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기관별 목표관리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전문인력 10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복수 시군 단위 식품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외식산업 육성, 품목별 가공산업 육성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등 식품산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및 한식 세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 식생활 교육 활성화, 인증제도 개편,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표 3-34〉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목표·정책과제



▣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농어업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서기관 조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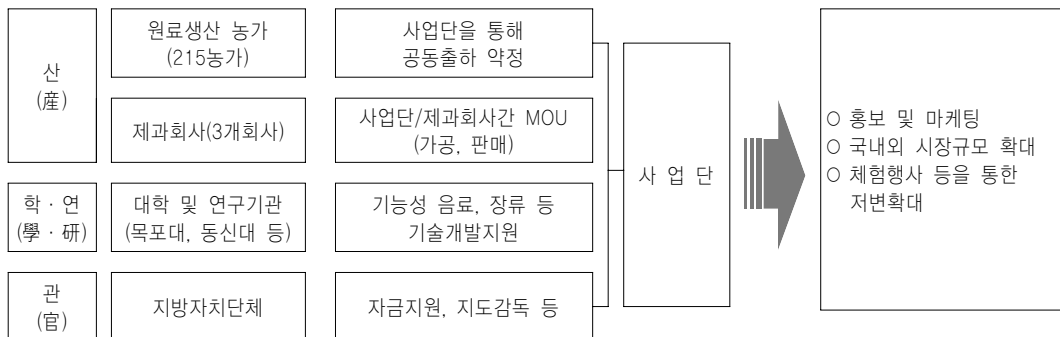
▣ 시행배경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 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며,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본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특산물을 R&D를 통해 고차 가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표 3-35〉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단(황토고구마) 운영 모델(예시)



지원분야는 사업단 컨설팅, 인력양성,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분야’와 사업단 자체 공동브랜드 개발, 상품 개발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⁸⁾은 3년동안 20개 사업단에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 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업단 간의 경쟁체제 확립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단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단에 대해 국비를 추가지원('08년 18억원, '09년 15억원, '10년 23억원, '11년 15억원)하였다.

20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의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 및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하는 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22개 본 사업단⁹⁾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지역 단위의 분산·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 경제권 단위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사업명을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12개 사업단¹⁰⁾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신규 사업단 선정 시부터 기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을 식품산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13개 사업단¹¹⁾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즉, 기존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에서 지역 특화품목을 광역화하고, 식품가공업과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업을 2·3차 식품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8) 시범사업단(20개) : 안성마춤, 포천 전통한과마을, 하이록한우, 백두대간농업포럼, 영동포도,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아산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한산모시, 장수사과, 정읍환원순환농업, 임실 낙농(치즈), 보성녹차, 함평 과학농업, 전남 친환경쌀, 경북한우, 풍기인삼, 경남친환경쌀, 하동녹차, 경남양돈, 제주 감귤

9) 본 사업단(22개)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에스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10) 광역사업단(12개) : 팔당클린 농식품, 산우리 재래돼지, 육품정 육우,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청보리를 활용한 참예우, 청보리 녹색산업, 녹색한우 명품화, 전남 딸기신산업, 감 고부가가치, 청정 약용작물, 제주 넉치, 우리밀 산업화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13개) : 미역다시마, 한국명품김치, 경기막걸리세계화, 경기북부양돈산업, 유기쌀가공식품, 친환경농식품, 명품김세계화, 비빔밥산업, 복분자, 유자, 약선가공식품, 명계부가가치, 제주콩

▣ 향후계획

2012년에는 2009년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단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 개시 전전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전년도에는 사업계획 진단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성과 평가, 사업관리 강화 및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표 3-36〉 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발전 단계	지역농업 가치발견 	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 발현
발전 목표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전략식품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핵심 활동	- 특성화 전략 선택 -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 주체간 역할분담 -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 핵심 인재(人才)육성	-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 신사업(新事業)도입
지원 사업	- 품목육성 정책 -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 생산유통기반 구축	- 클러스터 구축지원 - 지역특성화교육 - 브랜드육성	- R&D추가 지원 - 패키지(Package)지원(생산→마케팅)
지원 체계			

3. 종자산업의 육성

▣ 시행배경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종자업체가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전북 김제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11.4)하였으며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11.6~12)하여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종자 개발을 위한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10년 간 연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상세 기획을 2012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종자산업법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종자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한 종자산업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품종보호 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하고, 식물신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한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이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고로 국내 종자업 등록 업체수는 2011년 기준 987개로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37〉 연도별 종자업 등록현황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뽕	기타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71	33	189	257	139	126	28	99
2009	819	37	173	250	121	110	30	98
2010	950	35	197	283	152	130	30	139
2011	987	43	196	300	160	130	31	127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신품종 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게 되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유전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명자원통합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의 정책과는 별도로 종자수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1년 기준 종자수출액은 33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의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최근 5년간 품종보호 출원 건수가 세계 8위 수준일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품종보호 등록은 3,833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8〉 작물별 품종보호 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종자 업계	국가	계	개인	종자 업계	지자 체	국가	기타
화훼류	1,180	254	76	392	445	13	1,029	32	997	0	2,209	286	1,073	392	445	13
식량작물	652	16	17	50	517	52	3	1	2	0	655	17	19	50	517	52
채소류	565	7	433	30	73	22	14	0	14	0	579	7	447	30	73	22
과수류	171	65	23	14	66	3	1	0	1	0	172	65	24	14	66	3
특용작물	139	1	13	12	110	3	1	0	1	0	140	1	14	12	110	3
버섯류	57	14	3	24	14	2	3	2	1	0	60	16	4	24	14	2
사료작물	18	0	0	0	18	0	0	0	0	0	18	0	0	0	18	0
계	2,782	357	565	522	1,243	95	1,051	35	1,016	0	3,833	392	1,581	522	1,243	95

유전자원 확보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유중인 농업유전자원은 307천점(11년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용형질 특성평가는 15%('09년) 수준에서 18%('10년)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계획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육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확대(10ha, 270억원 → 54ha, 750억원)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예산부처에 요구할 예정이다.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내에 'GSP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상세 기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게 되며, 종자산업법과 식품신품종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법 분리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분양을 일부 실시중에 있으나, 2014년까지 '농수산생명자원 통합 DB' 구축을 완료하여 농수산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검색부터 분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정재원

▣ 시행배경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충, 그리고 학습애완·관광상품용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의 곤

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표 3-39〉 국내 곤충산업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원)

활용분야	대상 곤충 종류	시장 규모(추정)	
		2009	2015
학습·애완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종	400	540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가위벌, 꿀벌	540	880
천적곤충	무당벌레,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등 34종	230	300
지역행사곤충	나비류, 반딧불이	400	560
사료용, 의약용	동애등애, 풍뎅이유충, 거미 등	-	700
합 계		1,570	2,98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0년.

▣ 시행내용 및 성과

●● ‘2011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에 2015년까지 5년간 1,10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 1,570억원의 곤충산업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1년~’15년)’에 대한 ‘2011년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시설 조성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곤충생산단지와 곤충체험학습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하는 등 곤충농가 및 곤충산업체를 육성·지원하고자 한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의 식약용 원료 사용을 위한 약리성 및 안전성 연구개발’, ‘곤충유래 고기능성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개발’ 등과 같이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다양한 곤충자원의 확보와 유전적 특성평가를 통해 곤충산업 소재로 제공할 계획으로 곤충자원의 분포 및 서식환경조사수집·보존 및 표본자료 DB구축, 곤충의 가치평가 및 유용곤충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강화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관련 대학·연구기관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곤충산업 육성 교육과정을 농업연수원과 농촌진흥청의 교육기관에 개설할 계획이다.

- 제2회 생명산업대전 개최를 통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2011년 10월 13일부터 15일 동안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생명산업대전’ 행사를 통해 ‘기존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산업’이 ‘곤충 등 동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인 미래 첨단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 제시와 산업화의 발전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1〉 제2회 생명산업대전에 곤충산업 체험관 조성



▣ 향후계획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1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무궁무진한 미개발 유용 곤충자원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인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산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기존 시장이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위주로 편중되어 공급이 과잉되는 등 곤충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사료곤충의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곤충사료화에 대한 기획 연구를 실시하고 곤충자원을 이용한 사료소재로서 산업화의 길을 개척하여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후 곤충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화의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5. 종축산업의 육성

▣ 시행배경

가축의 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가축 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중장기(5년, 10년) 가축 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 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 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 개량 부분에서는 첫째, 한우 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 혈통이 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호 내외로 총 72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7,146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했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63개소(농가 59, 도센터 4)를 선정하였고, 2011년엔 9개소(농가 8, 도센터 1)를 선정하였다.

둘째, 2010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사업을 통해 암소 개량에 의지가 있는 한우농가 및 사업단을 중심으로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육질조사 및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우수한 암소 개량집단을 구축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011년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10,620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199,758두에 대해 암소 검정(초음파, 친자확인 등)을 실시하는데 2,1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사업참여 농가를 12천호(200천두)까지 확대하여 한우 암소 능력검정 및 평가로 한우농가 고능력 암소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계획교배에 의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표 3-40〉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한 우											
- 1등급이상 출현율(%)	29.8	35.2	33.3	35.9	47.9	44.5	50.3	54.0	56.7	63.1	62.4
○젓 소											
산유량 (kg/305일) 검정농가 (초산우)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9,556 (8,554)	9,598 (8,553)	9,563 (8,527)	9,638 (8,584)	9,672 (8,652)
○돼 지(듀록, ♂)											
- 일당증체량(g)	645	654	648	644	638	640	650	647	657	678	673
○닭											
-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85	297	307	320	320	312	318	319	319	321	-
- 육용계 체중 (6주.g)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1,974 (5주)	1,950 (5주)	1,991 (5주)	-

그밖에 2011년에는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8두와 보증씨수소 20두를 새로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52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2,293천두 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젓소 개량 부분에서는 검정을 받는 낙농가 3,287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24,492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검정비 총 2,124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젓소 보증씨수소를 1두 선발, 4두 도입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6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젓소 정액 353천두 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젓소 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돼지 개량 부분의 성과를 보면 듀록 수퇘지의 경우 농장검정 성적을 기준으로 일당 증체량이 2000년 663g에서 2011년 673g으로 1.5% 증가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추진중인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의 우량종축 선발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듀록 수퇘지의 등지방 두께의 경우 2000년 13.0mm에서 2010년 11.7mm으로 1.3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 부분에서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0년도 279개에서 2010년 321개로 15.0% 향상되었으며, 2002년 이후 산란지수는 317개 수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1년 닭경제능력검정소 매각 이후 닭 개량 부분에서의 성적은 집계가 중단되었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종돈장,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돼지 개량은 규모 있는 종돈장의 경우 자체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종돈장은 종돈을 수입한 뒤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고, 검정을 통해 종돈장의 우량 종돈의 선발·계획교배의 자료를 제공하고 양돈농가에는 종돈 선택지표를 제공하여 양돈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닭 같은 경우는 원종계를 수입하는 종계장에서 닭경제능력검정소에 검정을 의뢰하여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현 검정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변 여건이 열악하여 매각 처분하고 이전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종축장(종돈·종계장)의 청정화 및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종축장(종돈·종계장)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 종축장 인증을 시작하였다.

▣ 향후계획

저비용 고효율의 가축 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 개량 부분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 개량체계로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의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 검정두수를 500두(보증씨수소 20두 선발)에서 2013년까지 800두(보증씨수소 30두 선발)로 확대하여 선발 강도를 강화하고,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농가를 12천호(200천두)까지 확대하여 수소 중심의 개량에서 암·수 동시 개량으로 개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젖소 개량 부분에서는 산유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수명 연장 등 효율성을 고려하여 낙농가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량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검정 농가의 혈통비율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7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지원은 종전과 달리 보증씨수소 선발 등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까지 청정 육종농가 20호를 선정하고 고능력 수정란(300개/년)을 이식하여 2017년까지 보증씨수소를 확대 생산(5두/년)하고, 국제적으로 실시하는 종자소 유전평가(인터벌)에 참여하여 국내 환경에서의 한국보증씨수소의 객관적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고효율 개량, 유전자원 자립화 및 국산 정액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 개량의 경우 청정화된 종돈장을 대상으로 종돈장별 최우수 종돈을 선발하고, 그 종돈의 정액을 여러 농장과 공유, 유전적 연결을 도모하여 국가단위 평가를 통해 우량종돈 생산을 위한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종돈장 및 우수 정액 처리업체 인증을 통해 청정·우량종돈(정액)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검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돈장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정책사업을 검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 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닭능력검정소 매각에 따른 검정소 신축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한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을 종축장 전문화 지원으로 변경하여 전문 종축장(10개소 이내)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참여 전문 종축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등을 개소당 6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6.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수산정책과 사무관 강거영

▣ 시행배경

식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소비도 증가하여 조리가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고급화 및 다양화, 건강 지향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품질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으로, 수산물 가공업계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FTA 확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다양한 수산가공품의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보급 및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국내 수산물 가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자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106개소, 221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6개소, 21억원) 및 수산물 공동 가공시설(3개소, 19억원) 등 총 115개소에 대해 국고 261억 38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 소비자들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식품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총 7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3-41〉 2011년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국고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지역	사업개요	'08예산	'09예산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이후
합계	7개소	1,522	9,734	8,759	14,360	16,750	34,847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08~'12)	1,522	3,250	1,000	5,350	-	-
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09~'12)	-	500	1,000	1,000	2,450	-
여수	수산물종합센터('09~'13)	-	1,984	2,000	2,000	5,000	3,516
영광	염산항화도바다매체타워('09~'14)	-	500	1,000	1,000	1,500	1,000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건립('10~'13)	-	-	250	1,760	1,000	1,990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09~'14)	-	3,000	2,359	3,000	2,000	8,641
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11~'14)	-	-	-	250	4,500	7,75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그리고 우수한 수산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을 10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11년말 기준 친환경 수산물을 약 19,231톤 출하함으로써 식품 안전성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생산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다.

〈표 3-42〉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출하실적

구 분	인증 및 출하 실적		
	2010년	2011년	증(△)감
인증건수(건)	21	47	26
인증업체(개소)	18	37	9
인증품목(개)	3	4	1
출하실적(톤)	3,536	19,231	15,695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 인증 대상품목 : 넙치, 무지개송어, 뱀장어, 굴, 홍합, 전복, 흰다리새우, 김, 미역, 툇,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또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성벌교 꼬막, 완도 전복, 기장 미역, 장흥 키조개, 완도 넙치 등 11개 품목이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표 3-43〉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록자
제1호	'09. 2. 25	보성별교꼬막	보성별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제8호	'10. 8. 20	완도김	완도김영어조합법인
제9호	'10. 8. 20	완도넙치	완도넙치영어조합법인
제10호	'11. 1. 18	장흥김	(사)장흥무산김생산자협회
제11호	'11. 5. 13	장흥매생이	(사)장흥정남진매생이생산자협회

자료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2012년

아울러 2012년 1월 1일부터 현행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인증표지를 ‘초록색 사각 표지(logo)’로 단일화 하였으며,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수산물 가공업이 등록 및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 대상품목의 확대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품의 발굴 등 수산물 인증표시제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 농식품기술개발 추진

▮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관 안형근

▣ 시행배경

세계적으로 농림업 분야는 기술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농림업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제한을 많이 받아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은 농식품업 관련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림업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FTA 확대, 세계 곡물가 변화 등 글로벌 농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한 발 빠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업을 IT·NT·ET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의 육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 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 식품개발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융복합연구센터(구 농업연구센터)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농림기술개발 사업’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등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을 구성(‘11.3)하여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2011년 사업 대상과제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고, 생명산업 육성대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 연구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 산업화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44〉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2011년)

구 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 용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 시행내용 및 성과

●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식품부는 성과활동 조직 및 인프라 선진화, 성과지향적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성과활용 기본계획’을 수립(‘11.6)하여 매년 계획에 따른 성과활용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565개 과제에 8,15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계속추진과제 379개에 763억원, 신규선정과제 158개에 371억원 등 총 537개 과제에 1,134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신규로 연구전문대행(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조직을 선정해 지원(10억원)함으로써 농림분야 사업의 민간 R&D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45〉 농식품기술개발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연 도		2011			
	1994~2010		계속과제	금액	신규과제	금액
합계	4,565	8,152	379	763	158	371
기획과제(지정공모)	218	1,971	131	428	56	213
일반과제(자유응모)	4,347	5,842	248	335	102	158
사업관리비	-	368	-	-	-	27

* 해당사업 : 농림기술개발사업(‘94년~‘10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10년~),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11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11년~),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11년~), 융복합연구센터지원사업(‘11년~)

●● 완료과제의 성과활용 현황

2011년까지 농식품 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3,864과제이며, 이 중 805과제(20%)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 활용에 391과제(10%), 기술 교육 및 컨설팅에 1,169과제(30%), 지식기반 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 타 연구 활용)에 1,151과제(30%)가 활용되고 있다.

〈표 3-46〉 1994~2011년 농식품기술개발 완료과제 성과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농산업 기술사업화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성과활용 추진증	성과 미활용	합계
과제수 (%)	805 (21)	391 (10)	1,169 (30)	1,151 (30)	20 (1)	328 (8)	3,864 (100)

▣ 향후계획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R&D 자금지원인 ‘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 장비 구입 등) 지원 프로그램인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개술이 현장과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실용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 운영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기획을 계속할 예정이다.

2.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통계담당관실 서기관 이대형, 사무관 최재웅

▣ 시행배경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서도 초고속 통신망 구축, PC보급, 정보화 교육 등의 정보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현상은 농어업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 정보화 사업은 1차 기본계획('02년~'06년)과 2차 기본계획('07년~'11년)을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정보화 선도그룹을 육성하였다. 또, 농어업경영체의 스마트화를 확산하고 사이버직거래 시스템을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및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구축을 통해 축산업 선진화를 촉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간의 정보화 기반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 육성은 물론 영농의 과학화를 통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 사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농정 실현 및 스마트 IT인프라 전략 등을 포함하는 3차 농림수산식품 정보화 기본계획('12년~'16년)을 수립하였다.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 수단이 열악한 농어업인들에게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 활용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표 3-47〉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단위 : 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어민 정보격차 지수	66.2	58.3	50.2	45.4	42.1	39.7	38.2	36.4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농어민 정보격차 실태조사

또한 19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농림수산종합정보망(www.okdab.com)을 통해 전국의 농수산물 가격유통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정보 및 지식정보 서비스(www.okdabCEO)를 꾸준히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으며, 동호회를 통한 활발한 회원활동으로 농업인 및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교류가 촉진되었다. ‘옥답’은 농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대표 포털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신지식농업인, 사이버농업인, 농업경영CEO 등의 농식품 분야 경영리더 대다수가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옥답은 농업·농촌의 정보화 선도자 그룹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3-48〉 농림수산종합정보망 이용현황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회원수	238,252	257,646	269,113	282,094	285,598
연계기관 수	51	65	72	72	85
동호회 회원수	26,301	36,905	40,860	42,229	44,28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

2010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농수축산 분야별 IT융합 모델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스마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경영정보시스템(ERP 등) 구축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장부 소프트웨어 등을 보급하여 농작업의 기록 관리를 통한 과학적 영농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농가경영장부 소프트웨어를 후계농업인 및 농업마이스터 과정 등의 영농전문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중에 실습을 통해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률을 높였으며, 농가경영 장부 및 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농수축산 IT융합 모델화 사업과 결합하여 융합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중간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등의 유통구조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구제역 등 위생·방역 상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시행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하여 한우 소비의향이 증가되었다. 첨단 IT기반의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 정보의 현행화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활동 지원이 가능해져 방역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을 증진하였다.

또한 그간 쌀소득, 친환경, 조건불리 등 직불제 사업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신청을 차단하고, 농림사업간 DB검증 등을 통해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6년간 총 7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등 급변하는 IT환경에 부응하여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IT융합 기술을 접목하여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모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농림수산물 IT융합 확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어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생육환경 분석이 가능해지고, 주변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어업 경영 및 유통을 효율화하고, 생산 및 유통 이력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앞으로도 각 농림수산물 사업 및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조·용자사업 이력정보를 통합·연계하고 농어업경영체 DB를 중심으로 농림수산물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등 부정·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격이 있는 농어업인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격여부 등도 맞춤형으로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3. 임업 정보화 촉진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서기관 황의식

▣ 시행계획

정보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이용 기회 증가에 따라 식물자원 정보관리가 고부가가치 창출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림생물 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를 위하여 1998년부터 국가 식물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추진 등으로 산림생물 자원의 역할 증대 및 정보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림생물 정보의 선진화 요구에 따른 산림정보화 시행계획('10년~'14년)에 의해 산림청내 및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산림생물 정보망 개발 및 생물 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으며, 국립수목원 등 식물 보유기관 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국내 식물표본관 15개소의 산림생물 표본정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표준 식물목록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의 국가표준 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미 구축된 산림생물 자원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 생물자원 정보포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해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의 DB 영문화와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림생물종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전국 57개 기관에 산재된 식물 및 곤충 표본정보에 대한 DB 구축과 기 구축된 국가 생물종 이미지 정보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정보 변환작업을 수행중이며, 검색 기능 및 서비스 강화, DB 성능 향상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도화 작업을 수행중이다.

2011년까지 산림생물 정보 DB 식물·곤충도감, 표본, 종자, 수목원 보유식물, 균류, 포유류 등

19종류 386만건을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록된 세계 239개 기관 중 18위, 아시아 1위 수준이다.

〈표 3-49〉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2011년까지)

(단위 : 만점)

합 계	식물자원	곤충자원	균류자원	조류	포유류
386	219	166	1.5	4.4	0.4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사립 수목원의 산림 유전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기본도면 및 식물 이력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42개소의 수목원에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국가 수목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13개 수목원의 식물 식재정보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DB구축을 시행중에 있다.

▣ 향후계획

산림정보화 시행계획('10년~'14년)에 의해 산림청 내 산림생물 관련 28개 대외 웹 사이트를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 세계 생물종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지침을 적용하여 국외 생물자원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국제 생물정보 관련 기구·기관 및 국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GIS) 기반의 분포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산림생물 정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Green of IT)하는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으로 '녹색정보화'를 제시할 것이며, 아이폰 등을 활용한 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고품질 화상정보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4. 수산 정보화 촉진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주성

▣ 시행배경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업인 정보화 교육을 수행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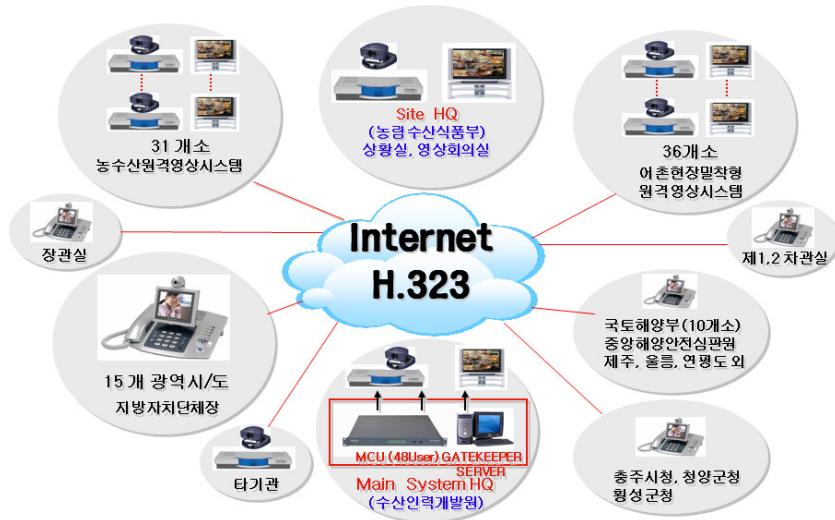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 상담 및 정보화 교육을 받고, 정부 정책 설명·홍보, 어업인 간담회 등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지방수산사무소('03년 완료)와 36개 어촌계에 농수산 원격영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교육 측면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1,345명에 대하여 원격영상 또는 집합, 방문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매년 어업인과 어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어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어업인 복지 포털시스템(행복海)을 구축하여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림 3-2〉 전체 시스템 구성도



▣ 향후계획

2011년 어촌지역 정보화 현황을 보면 컴퓨터 보유율 60.8%, 인터넷 이용률 38.9%로, 2010년 대비 각각 0.5% 및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 대비 농어민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화 격차지수가 36.4%로, 매년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09년 39.7%→'10년 38.2%→'11년 36.4%)

앞으로 어업인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과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5절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및 효율적 수입관리



1. 농식품 수출 확대

수출진흥팀 서기관 김민욱

▣ 시행배경

농식품 수출은 FTA 등 글로벌 개방화 환경에서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과잉 생산된 농식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한편 농식품 수출산업은 WTO 체제하에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농식품 수출은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의 HACCP, ISO, GAP 등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낙후된 국내 농식품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농식품 수출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신선농산물 수출은 휴대폰 수출에 비해 1.9배, 가공식품은 1.8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의 경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각각 휴대폰 수출에 비해 1.3배, 2.5배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식품 수출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0년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정책의 고용효과는 27,256명으로 분석되었다. 용자사업의 10억원당 생산유발 효과는 185.4~190.8억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사업 348.7~255.4억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용자사업에 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사업이 여타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측면에서도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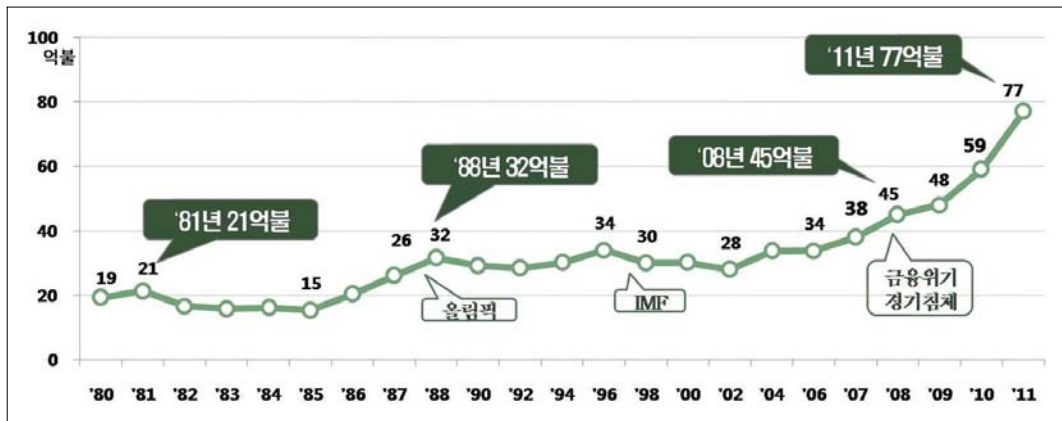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한 국가 위상 및 품격 제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식량안보 및 환경유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식품 수출은 2007~2011년까지 4년만에 두 배 증가한 77억달러를 달성하였다. 과거 20~30억 달러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춤하던 수출은 2007년 40억달러 돌파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호조세와 적극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전년 대비 약 18억달러가 증가하였고, 수출 증가율은 30.8%에 달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를 주도(44억달러, 수출비중 57%)하는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달성하였고, 수산물 수출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최초로 23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그림 3-3〉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년) 19억달러 ... ('07년) 38 → ('08년) 45 → ('10년) 58.8 → ('11년) 77

〈표 3-50〉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 연 도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A)	2011(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 합계	2,851.5	3,365.2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5,880.0	7,691.4	30.8
○ 신선농림축산물	522.4	550.9	608.2	535.5	597.1	675.0	739.3	873.9	1,015.6	16.2
○ 가공농림축산물	1,057.3	1,534.1	1,613.3	1,768.9	1,934.7	2,373.2	2,558.8	3,207.9	4,367.4	36.1
○ 수산식품	1,271.8	1,280.2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2,308.4	28.4

또한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도 2007년 라면, 오징어, 설탕, 참치, 껌, 커피 등 6개에 불과하였으나, 4년동안 인삼, 김, 음료, 김치, 제3맥주, 소주가 추가되어 12개로 늘었다.

●●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시장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억달러 이상 수출국이 2007년 8개 국가에서 2011년에는 11개로 늘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다. 중국, 아세안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목표로 수출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표 3-51〉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11년 수출액(백만달러)	2,373.7	1,189.4	600.0	242.7	305.5	261.2	1,032.3	360.9
국가별 비중(%)	(30.9)	(15.5)	(7.8)	(3.2)	(4.0)	(3.4)	(13.4)	(4.7)
전년대비 증가율(%)	26.1	51.1	15.7	3.0	25.3	23.6	43.4	8.5
4년 평균 증가율(%)	18.2	30.2	10.1	△6.1	21.0	27.6	31.8	13.7

* 1억달러 이상 수출국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07년 8개) +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 수출 성장동력 확충

2008년 '2012년 농식품 100억달러 수출 추진대책'에 따라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수출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11년에는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전략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스타품목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당초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25개 수출 전략품목을 지정하였다.

〈표 3-52〉 25개 수출전략 품목

구분	품목
신선식품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가공식품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수산식품	해삼, 굴, 미역, 김, 전복, 넙치 등 10대 양식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중요하다. 국제박람회 참석은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유망권역, 벤더 발굴, 미개척 시장 등 전략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로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종합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36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 지원 140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관측행사 개최와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대량 수출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홍보와 미디어 광고, 소비자체험 마케팅 등을 활용한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 농식품 수출 기반 강화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한도를 표준물류비의 35% 이내로 하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였다.

인센티브도 2009년 7,783백만원에서 2011년 10,435백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기본물류비(25% 한도)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해외 물류기반 구축, 수출보험, 안전관리 등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도 2009년 1,480백만원에서 4,004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해외 냉장·냉동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물류 기반구축 지원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2011년 5개국 20개소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바이어의 시장개척 의지 제고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한편 국내의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9개 해외 aT 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원예 전문단지는 채소·과실·화훼 등 안전·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개편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원예단지는 2011년 155개소이며, 수출비중은 2010년 40.41%에서 2011년 43.91%로 증가하였다. 원예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

로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단지 내 2011년 GAP 인증 농가는 1,814호로 16.3%를 차지하고, 안전지킴이 16명을 운영하고 있다.

〈표 3-53〉 수출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센티브	수출인프라
2009	7,783	1,480
2010	10,343	2,162
2011	10,435	4,003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출 선도조직을 2009년부터 결성하여 2011년 17개소를 육성하였다. 수출 선도조직은 공동 선별을 통한 품질관리, 안정물량 확보를 위한 농가의 조직화 및 과당경쟁 방지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수출 선도조직의 수출실적은 2009년 114백만달러에서 2011년 149백만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업체간 자율적인 수출질서 유지 등을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7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과당경쟁 방지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현재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 신규 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인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11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 수출로 인한 품질 저하,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국 및 미국의 현지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지에 대한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가공식품까지 패러다임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상위 품목도 대부분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 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매월 장관 주재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업체

및 관계기관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품목 육성을 위해 수출 전략품목 25개¹²⁾를 선정하여 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전략품목 집중육성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농식품 수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수산물 수출 확대

▮ 수출진흥팀 서기관 김민욱

▣ 시행배경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 수산물 소비증가 등의 여건 하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켜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 수출전략품목 : 신선(10개/ 딸기, 장미, 사과, 버섯류, 토마토, 김치, 인삼, 파프리카, 단감, 배), 가공(5/ 소스류, 막걸리, 조제 분유, 면류, 유자차), 수산(10/ 넙치, 굴, 김, 장어, 관상어, 전복, 해삼, 새우, 성어, 참치)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580억원을 투·융자하여 수출확대 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340억원을 저리로 128개 업체에 융자하여 833백만달러의 우수 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9회, 로드쇼 3회, 판촉전 1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체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광고 등을 위하여 4.5억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 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2대의 기기 구입비 6억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원을 투자목표로 2011년에는 토목공사비 등 24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할당 김에 대한 쿼터 미소진분 재분배,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 향후계획

수산물 수출은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반영 등을 적극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28.3% 증가한 2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1년 농림수산물 총수출은 76.9억달러이며, 이중 수산물 수출은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금액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2년부터는 중화권·아세안 등 급증하는 수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농림부문 수입관리 대책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강승규

▣ 시행배경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 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수입권 공매방식, 실수요자 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 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토록 하는 국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삼, 오렌지, 감귤, 밤, 대추 등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 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옥수수, 보리, 사료용 식물, 종자류 등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입 추천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무역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 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 여건 변화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 관세 적용 물량을 증량하

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은 농축산 원자재인 종돈·종계, 보조사료 등과 가공용 원료인 대두, 전분류(감자, 고구마, 밀) 및 수급 조절을 위한 녹두·팥 등 12개 품목이다.

▣ 향후계획

향후에도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여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노승환

▣ 시행배경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가 수입 등에 따른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하여 사료용 곡물, 농업용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11개 품목, 요소·농약원제 등 농업용 원자재 8개 품목, 제분용 밀·원당 등 가공원료 및 돼지고기, 마늘 등 서민 물가안정용 4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54〉 2011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

(단위 : 품목수)

구 분	계	사료원료 (버섯재배용 포함)	농업원자재	가공원료 등 물가안정
2011년	66	11	8	47
2010년	23	10	4	9
증감	43	1	4	38

자료 : 농림수산물부 다자협상협력과, 2012년

아울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 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2011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고추장, 당면, 찌쌀, 메주 등 4개 품목이며, 관세율은 고추장 45%, 당면 30%, 찌쌀 50%, 메주 13%를 적용하였다.

한편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WTO에서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긴급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땅콩·녹두·메밀 등 6개 품목(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물량을 초과할 경우, 땅콩·수삼·백삼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 긴급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향후계획

향후에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안정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를 지속 운용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농가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관세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4. 수산분야 수입관리 대책

▣ 원양정책과 사무관 이병웅

▣ 시행배경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11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4),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할당 (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 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125억원('11년)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1년 수산물 수입은 4,192백만달러로 전년 3,458백만달러 대비 21.2%(734백만달러)가 증가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조사를 확대하여 저가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 보호



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

가.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추진

■ 식량산업과 사무관 이상준

▣ 시행배경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 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 축산분뇨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97.12)」을 제정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년~’05년)·제2차(’06년~’10년)·제3차(’11년~’15년)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 활성화,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친환경 유기 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자원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우선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 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유기질 비료 2,500천톤(1,250억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켰으며, 토양개량제 800천톤(756억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등) 97천ha(122억원)를 조성하여 지력 증진과 농촌경관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541천톤(298억원)을 공급하여 양분의 과도한 투입을 방지함으로써 토양 환경을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시·군 단위의 친환경 광역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 농업지구(10ha)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7개소(누계 34개소), 집단화된 친환경 농업지구 28개소(누계 1,048개소)를 신규로 조성, 지원(365억원)하였다.

셋째,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친환경 인증 88천 농가의 72천ha에 대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305억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 307 농가에 대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금 30억원을 지원하였다.

넷째,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및 종합 운영방안을 마련(114억원)하였으며,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에 매취자금과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을 지원(연중, 332억원)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12회 468명, 80백만원)을 실시하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 가공식품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11년에는 친환경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가공시설 및 위생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을 지원(35억원)하였다.

〈표 3-55〉 2011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예산현황

사업명	친환경비료지원			비료 계정 적자 보전	녹비 작물 증자대	친환경 인증 활성화	친환경농 업 직불제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 센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친환경 소비지 유통 활성화	친환경 직거래 매취 자금	유기가공 식품 기반구축
	유기질 비료	토랑 개량제	맞춤형 비료						광역 단지	지구 조성			
예산액 (억원)	1,250	756	366	457	122	7	349	114	341	24	22	310	35

위와 같이 친환경 농업 육성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1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10.6%('01년 0.2%보다 53배 증가),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37,033억원('01년 1,500억원 보다 25배 증가), 화학비료 사용량 249kg/ha('99년~'03년 평균 375kg/ha 보다 34%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56〉 주요 항목별 추진 성과

구 분	연 도	'01	'05	'06	'07	'08	'09	'10	'11
		친환경 면적(ha)	4,554	49,807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유 기	유 기	450	6,095	8,559	9,729	12,033	13,343	15,518	19,311
	무농약	1,293	13,803	18,066	27,288	42,938	70,139	94,533	95,253
	저농약	2,811	29,909	48,370	85,865	119,136	117,306	83,955	58,108
친환경 농가(호)	4,678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유 기	유 기	442	5,403	3,235	7,507	8,460	9,403	10,790	13,376
	무농약	1,645	15,278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저농약	2,591	32,797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친환경 생산량(천톤)	87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	
유 기	유 기	11	68	96	107	115	109	122	123
	무농약	32	242	320	444	554	880	1,040	980
	저농약	44	488	712	1,235	1,519	1,369	1,054	749
화학비료 사용량(kg/ha)	343	376	257	340	311	267	233	249	
농약 사용량(kg/ha)	13.5	12.8	12.9	13.1	13.8	12.2	11.2	10.6	

▣ 향후계획

농업과 환경의 조화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제3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11년~'15년)의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2012년 6월 1일 공포하고 2013년 6월 2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친환경 농업지구 및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녹비작물 공급 확대로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 사용량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시('12.10 개장 예정) 및 전남 나주('12년~'15년)에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전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급식·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조합 간 상생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합동으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재포장업체 등에 대한 의무인증제를 도입, 2013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농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를 조성·운영하는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해소하고 '흙·물·생명살리기'를 위해 '농업환경 종합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환경 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토대로 농업환경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나. 친환경 생산단지 확대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재학

▣ 시행배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중심으로 1995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도입해 지원하였다. 이어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 대·소규모 지구 사업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친환경 농업 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비중 10% 제고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을 위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방안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04.2)하여 농업환경 개선과 경종·축산 연계 자원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는 단지별로 최소 600ha 규모로 조성되며, 2005년에는 기초조사와 설계 및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3개 지역(완주, 순천, 울진)을 선정하고, 2007년에는 6개 지역(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정책 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의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단위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 배양 등을 통해 토양을 개선하며 축산분뇨와 기타 농산부산물을 자원화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2010년까지 1,020개소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8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및 인증 농가 수는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확충을 지원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등 친환경 농업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5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2%로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6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 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기반 영농구조,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 친환경 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1년에는 광역단지 조성 신규 7개소와 2~3년차 사업 18개소에 국고 341억을 지원하여 농업환경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정착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시·군 단위의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600ha 이상)와 마을 단위의 친환경 농업지구(10ha 이상)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친환경 농업지구는 2011년말까지 1,048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2년에는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28개 지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총 1,3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은 2011년까지 34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원태

▣ 시행배경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29천ha를 대상으로 501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를 대상으로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를 대상으로 37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논 38천ha, 밭 33천ha 등 총 72천ha를 대상으로 87천 농가에게 30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3-5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 억원, ha, 천호)

구 분 \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급액	141	208	287	345	376	306
면 적	34,896	53,682	76,352	90,132	93,318	71,766
농가수	46	69	97	112	116	88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 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10.2%(172,672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0.2%에서 2011년에는 10.6%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 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 향후계획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0년 382kg/ha에서 2011년 249kg/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에는 73천ha에 4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면적이 2011년 보다 12천ha 정도 감소한 이유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지급단가를 50%수준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배경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생협 등),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급식의 필요성,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에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 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억원, 2008년 14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5억원을 조성하였

다. 2011년에는 13.6억원을 조성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 개척, 친환경 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360억원, 2009년 400억원, 2010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3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 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은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6년~'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25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4월 착공,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내 친환경 농수산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 향후계획

친환경 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광주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는 2012년 8월에 건축공사를 완료

하고, 10월 중순에 개장,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가 개장, 운영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대표가격 제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대량 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수취가격 제고와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농업환경오염 경감

가.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안전위생과 행정사무관 최정미

▣ 시행배경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기존의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 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 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 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7개, 권장 23개)의 농산물 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3-58〉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 실적

구 분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인증기관(개소)		31	38	43	45
GAP관리시설(개소)		316	417	484	565	606
인증 농가수(호)		16,796	25,158	28,562	34,421	37,146
인증 면적(m ²)		24,754	36,322	40,081	46,701	46,701
생산 계획량(톤)		331,421	419,842	434,047	509,931	642,165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2년

▣ 향후계획

정부는 GAP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들의 GAP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조직 단위의 집단인증제 도입을 통한 GAP 생산조직 육성, GAP 인증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농산물 우수 관리기준 개선 및 GAP 인증 분석비용 지원 확대, GAP 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GAP 시설 지정기준 개선, GAP 위생시설 지원 확대, 군납·학교급식 등 GAP 인증 농산물 대량 수요처 발굴을 통한 GAP 인증 농산물 소비 확대,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AP 교육·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친환경비료 지원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 시행배경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 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 더 사용되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 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업에 투입하는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인센티브를 통한 시비량 절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됨과 동시에 친환경 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화학비료 가격이 점차 인상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경지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화학비료 소비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화학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중 많은 편이고, 양분수지가 높아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소비량 감소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사후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유기질 비료 지원을 2006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 2008년 200만톤 1,160억원, 2009년 210만톤 1,218억원, 2010년 250만톤 1,450억원, 2011년 250만톤 1,25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3-59〉 연도별 유기질 비료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물량	1,200	1,350	2,000	2,100	2,500	2,500
금액	420	473	1,160	1,218	1,450	1,250

유기질 비료에 대한 국고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원단가를 1~3등급으로 조정하여 등급별로 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작물에 적합한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도록 개선하였다.

2006년 화학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면서 화학비료 총사용량(실증량 기준)은 1,272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32.2%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은 1,621천톤을 사용하여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1,471천톤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2009년 1,292천톤으로 12.2% 감소하였고, 2010년 1,105천톤으로 14.5%가 감소하여 오다가 2011년 1,110천톤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표 3-60〉 연도별 화학비료 소비 현황

(단위 : 실증량, 천톤, %)

구 분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물량	1,272	1,621	1,471	1,292	1,105	1,110
증(Δ)감		Δ32.2	27.4	Δ9.3	Δ12.2	Δ14.5

아울러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 작물별 적정 시비 기준 설정, 맞춤형 화학비료, 가축분 퇴비 등의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 차등 지원 등을 통한 유기질 비료의 품질을 강화하여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토양 지력 증진, 농업환경 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비료는 사용결과 효과분석 및 신규 비종 설계 등으로 고농도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3. 농업환경(토양) 유지·개량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윤식

▣ 시행배경

산성 토양이나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질은 1957년부터, 규산질은 196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국고 비율을 70%로 낮추고 지방비 비율을 30%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하여 토양 개량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농가 단위 신청제로 전환하고 살포 주기도 3년 1주기 공급으로 개선하였으며, 492천톤(규산 289, 석회 203)을 지원하였다.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알갱이 형태의 입상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전량 입상으로 599천톤(규산 366, 석회 233)에 이어 2010년에는 826천톤(규산 634, 석회 183), 2011년에는 822천톤(규산 535, 석회 287)으로 확대 공급하여 토양 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표 3-61〉 연도별 토양개량제 지원현황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 액	40,073	40,354	65,139	88,113	77,823
물 량*	549	492	599	826	822
- 규 산	290	289	366	643	535
- 석 회	259	203	233	183	287
- 패 화석(톤)	20,000	15,000	28,836	27,128	43,503

* 패화석 물량은 석회 물량에 포함

▣ 향후계획

2012년에는 토양개량제 739천톤(규산 472, 석회 267)을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토양검정 결과 등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맞춤형 비료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7절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



1.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최국일, 사무관 유재중·최원

▣ 시행배경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 주5일 수업 시행, 베이비부머(babyboomer) 시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를 활용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홍보 및 정보 제공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 체험관광을 홍보하고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도심(양재동 aT센터)에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72천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농어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 보급하였다.

●● S/W 및 협조체계 구축

도시 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S/W) 관련분야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11년까지 587억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571개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인력육성 및 사무장제도 도입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교육생 역량수준에 부합하는 초·중·고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멘토(mentor)제도 도입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10개 교육과정에 3,767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에 61개 마을('10년 79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11년까지 364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1사1촌 자매결연 운동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 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11년에는 8,741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등 611억원의 교류 성과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 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향후계획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시대의 은퇴, 1산1촌운동 확산 등 농촌 체험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가 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 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2011년 55개(총 571), 2012년 50개(총 621)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 관광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12년 3,265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농촌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 생활체험기 공모,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어업·농어촌 및 자연환경을 배울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1사1촌 운동'을 수록하였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시행중이다.

나. 향토자원 발굴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 농어촌산업팀 사무관 이동홍

▣ 시행배경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 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회계개편에 따라 광특회계 광역발전 계정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종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13개 사업

을 포괄보조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 당 3년 이내에 총 1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매년 30개소씩을 신규로 착수, 개소 당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62〉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사업량(개소)	139	19	30	30	30	30	* 목표: 2013까지 200
예산(억원)	1,169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주 : 2007~2008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 신규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2010년부터는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는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및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2,356억원을, 2011년에는 2,435억원의 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향토식품·특산물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등에 H/W분야와 S/W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6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분야별 지원실적

연도 \ 구분	계	농수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농수산물제조·가 공지원	체험·전시지원	농어촌체험· 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지원
2010	2,356억원	1,035	396	10	392	523
2011	2,435	848	501	13	547	526

▣ 향후계획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0개 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 수립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부터 종전의 13개 개별 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기존 사업의 물리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사업대상을 성격에 따라 ①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②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 체험·전시지원 ④ 농어촌 체험·관광지원 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내용에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단편적이고 1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를 보다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다.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산업팀 서기관 조병임

▣ 시행배경

농공단지 조성 지원제도는 탈농 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 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3-64〉 부처별 지원현황

부 처 명	지원내용	관련법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 경 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 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신규사업 11개소, 계속사업 32개소 등 102개소에 526억원을 지원하는 등 363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11년 6,02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598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38천여명, 생산액 49조6,811억원(업체평균 93.6억원), 연간 수출액 123억32백만달러(업체 평균 232만달러)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신규 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하여 신규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2017년까지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어촌·어항 관광 등 소득원 개발

▣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지혜

▣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 지원방안 강구 및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 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

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3-65〉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 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지자체, 수협 등	1998~2001년	60억원	2개소	융자조건(연리 5%등)	가족호텔, 휴양시설, 수산물판매장 등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지자체	1998~2005년	420억원	7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실내·야외전시관, 시청각실, 주차장 등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지자체	2007~2008년	54억원	1개소	국비 50%, 지방비 50%	고래전시관, 수족관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 계속	914억원	134개소	국비70%, 지방비30%	마을안내소, 사위장, 진입로, 화장실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	지자체	2004년 ~ 계속	-	계속사업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해안공원 조성, 수산물판매장, 해안산책로 등

▣ 시행내용 및 성과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 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 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추진하였다.

●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휴양단지를 조성하였다.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 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 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 삼척, 전남 완도, 경남 거제 등 7개소에

4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였다.

●● 고래해체장 복원사업

소실 위기에 처한 전통 고래잡이 역사현장 보존 및 고래박물관과 연계한 고래문화 체험 특성화 마을 조성으로 지역문화 계승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 남구 고래박물관 일원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고래해체장을 복원하였다.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 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 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134개 마을조성(총사업비 914억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북 경주 연동 등 전국 108개소에 71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3-66〉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년 까지	108	2	5	-	9	9	-	9	6	31	10	18	9
2012년 계획	7	-	-	-	-	1	-	2	1	3	-	-	-
해제	-15		-2	-	-1	-3	-	-3		-2	-2		-2
장래조성계획	34	1	1	1	3	3	2	6	0	6	2	5	4
계	134	3	4	1	11	10	2	14	7	38	10	23	11

●● 어촌관광 모델 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 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관광형, 어촌관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개발 18개소를 선정, 2005년부터 투자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12개소를 완료하였다. 2010년부터 광특회계 계정으로 지자체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표 3-67〉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별	목표	2008년 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34	95	7	3	3	7	34
	사업비	49,985	31,905	2,150	1,250	500	1,930	11,900
어촌관광 모델개발	사업량	계속사업	6(18)	-(11)	-(10)	2(7)	3(6)	계속사업
	사업비	계속사업	27,994	7,594	5,044	3,434	4,200	계속사업

* 국비기준, ()은 계속사업 포함

〈표 3-68〉 어촌관광모델개발 시범사업 내용

구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I 모델)	어촌관광단지형(II 모델)
개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2004~2013)	• 6개년(2004~20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지자체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사업대상지	• 7개소(20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11개소(20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무창포(충남 보령시) 아미도(전북 군산시),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7개소 1,089억원 - 개소 당 150억원 - 기본·실시설계비 29억원	• 11개소 702억원 - 개소 당 60억원 - 기본설계·홍보비등 36억원

▣ 향후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어항 관광개발은 이를 통해 어민들의 어업외 소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향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계획된 I 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완료하고 II 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총 134개 마을을 조성함과 더불어 마을별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영 수준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어항 관광개발 시범사업 18개소를 2013년까지 완료하고, 2010년 이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은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등 연안지역별 맞춤형으로 어촌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2. 농어업의 경영 안정화

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재해보험팀 사무관 양윤식

▣ 시행배경

최근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가뭄·홍수 등 기상이변 발생이 증가하여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 ‘루사(‘02년)’, ‘매미(‘03년)’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우박, 폭염, 태풍 등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차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과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 수준이 미약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 재해 위험(농작물 재해보험 손해를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그간 태풍 ‘루사’(02년) 및 ‘매미’(03년) 등으로 약 8만 8천여 농가에 5,074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고추·양파·콩·감자·시설수박·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시설딸기·시설토마토·시설참외·시설오이·대추’ 25개 품목에 품목개발추진단 등에서 연구·검토한 농작물 중 농업인의 보험 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풋고추·호박·국화·시설장미·복분자’ 5개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 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2012년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 벼 시범사업 지역을 3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 보험사업 운영비의 100%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3-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농가가입 기준으로 전년 대비 41.7% 증가한 67,654 농가였으며, 가입 면적도 2010년 51,550ha에서 2011년 86,604ha로 가입률 40.2%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2010년까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통합 운영. '10.1.1),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등 농어업 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69〉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상품목1)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20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추가)	25 (대추,딸기,토마토,오이,참외 추가)	30 (뽕고추,호박,국화,시설장미,복분자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419	29,174	32,538	45,884	47,745	67,654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81	51,550	86,604
	가입률(%)	23.4	24.5	26.5	28.5	31.4	36.0	40.2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50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49,371	50,783	49,280	49,063	53,351	67,732	91,547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5,877	5,171	7,274	3,383	8,734	13,851	28,311
	보험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90,330	13,263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12년

이를 위해 2010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통합하는 농어업 재해보험 법으로 전면 개정('09.3.5)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11년 6월부터 조직개편 등을 통해 통합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 향후계획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간 2011년까지 88천 농가에 5,0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3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농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정 재해(태풍, 우박 등)만을 보상하는 과수(사과·배·단감·감·굴·뽕은감) 품목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

할 계획이며,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유재형

▣ 시행배경

최근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 역시 늘어나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가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이차보전 대상 자금인 2001·2004년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년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 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에 대해 1,055억원을 이차보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91천원의 이차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36.9%)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6.7 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 3.2 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 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 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 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 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지제도 개선

▣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 시행배경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특히 상속 및 이농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임차농지와 임차농업인이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 임차농보호제도의 마련을 각계에서 제기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은 농업계 내·외의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되었는데, 2010년 1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민

단체, 국토연구원, 언론계 등 농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농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안을 기초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은 2011년 3월부터 7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1년 8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개정안은 국회에서 2011년 12월 29일 최종 의결되었다. 의결된 안은 2012년 1월17일에 공포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다.

전문가 토론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임대차계약 최소기간 지정, 임대차계약의 조정 등 농지임차농 보호제도 규정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요건 폐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제도 도입,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보완, 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제도 보완 등이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한 농지법 개정안중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집행임원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을 폐지하는 안은 비농업인의 투기목적 농지소유 우려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 주택을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시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던 것을 변경 또는 해제시에도 주민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최소한 3년은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차 계약증서를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중에 농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기간 등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대차 당사자가 임차료,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 당사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분쟁 확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농지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규정을 시행일에 맞춰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내용을 지자체 농지담당공무원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에서 농지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라.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주요원

▣ 시행배경

1996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기후변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暴雨), 폭설(暴雪) 및 장기성 냉·한해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 주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추진

산림재해의 대형화 다양화에 따라 2001년 ‘산림보험제도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02년에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 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산림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2011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대상에 산림작물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보험사업자 및 모집자에 산림조합을 포함하였으며,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T/F팀을 구성하여 단기 소득작물 등의 품목 확대 및 입목의 보험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추진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 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품목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 중에서는 최초로 ‘뽕은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으며, 이어 2007년에는 ‘밤’, 2010년 ‘대추’, 2011년 ‘복분자’를 보험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3년에 ‘표고’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70〉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임가, ha, 백만원)

구 분	연 도	2009			2010			2011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뽕은 감	1,037	615	525	1,322	854	901	2,094	1,511	1,580
	밤	48	221	29	-	-	-	12	35	5
	대추	-	-	-	139	108	188	811	430	713
	복분자	-	-	-	-	-	-	400	113	127

▣ 향후계획

2012년에는 산림작물을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임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예측, 표준금액 산정 및 보험요율 산출, 위험 분산방안 등에 대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뽕은 감, 밤, 대추 등 생산이 많은 단기소득 임산물에서 입목(立木)을 비롯하여 산림 소득작물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산림작물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제1절 쌀 산업

제2절 채소산업

제3절 과수·화훼산업

제4절 축산업

제5절 임업

제6절 수산업

제1절 쌀 산업



1. 제도개선

▮ 식량정책과 서기관 노영호

▣ 시행배경

WTO 출범 이전에는 국내 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 농업협정의 국내 보조 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 농업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DDA 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05.7.1 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05.7.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 쌀 판별능력이 부



족한 점과 MMA 밥쌀용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강화 등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수입쌀의 경우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제 운용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우리쌀 소비문화를 정착하였다.

한편 2005년 양정개혁 이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 설계와 목표가격의 장기간 고정('08년~'12년), 쌀 생산성 향상과 소비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대풍과 가격급락에 대비한 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9월 쌀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를 구성하고, ①생산조정 제도화 ②쌀 가공산업 육성 ③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2011년 2월에 마련하였다.

이 같은 대책 추진을 통하여 구조적인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악순환과 1차 산업 중심의 저부가가치 구조를 탈피하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첨단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1년 7월에는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항)을 개정하여 목표가격 산출은 새로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당초 3개 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과 새로운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당초 3개 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과의 변동비율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1만제곱미터당 쌀 생산량(기존 : 61가마 → 변경 : 63가마)을 변경하여 2014년산 쌀부터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향후계획

2011년 마련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생산조정제 추진('11년~'13년, 연간 4만ha에 콩·옥수수 등 타작물 재배), 산지 유통업체의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쌀 자조금 설치 등 실질적인 수단들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은 농업중앙회 신경분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00만톤(시장 점유율 35%)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되, 지역 농협은 생산·수집·가공을 담당하고 유통회사는 브랜드화, 가공·판매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협이 직접 생산·가공·판매까지 관리하는 가공·판매방식과 조합의 RPC로부터 판매만 위탁받는 방식 두가지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50개 목표)이 공동 출자하여 RPC시설 현대화, 대형 물류센터 설립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2. 효율적인 수급조절

▣ 시행배경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공비축제와 함께 시장가격의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서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0년에 생산된 쌀 4,295천톤과 이월재고 1,509천톤, 수입 327천톤 등 총 6,131천톤이 시장에 공급되었다. 이 쌀이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0월까지 기간에 5,179천톤이 소비되어 2011년 10월말 총 재고량은 952천톤 수준이 되었다.

2010년에는 등숙기에 태풍 곤파스가 한국에 상륙하여 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2008년, 2009년산 대풍작으로 인한 쌀 가격 급락에 대응하여 논에 타 작물을 1만ha 재배하는 영향으로 쌀이 2009년 대비 621천톤 감소한 4,295천톤이 생산되었다(단위생산량 : 483kg/10a)

한편 2010년 수확기에는 전년산의 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쌀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86천톤을 매입하여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340천톤을 매입하고, 태풍 피해를 받은 지역의 재해대책 차원에서 백수 피해 쌀 11천톤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2010년 수확기 이후('11년) 시중에 쌀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비축미 157천톤을 시중에 판매하여 수급 안정을 유도하였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도 전년 재고('09년산) 404천톤을 시중에 방출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쌀 산업의 발전은 생산과 수급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 한국은 식량으로 소비하는 쌀의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MMA 쌀 수입량은 매년 2만톤씩 늘고 있어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의 균형있는 수급조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3. 민간유통기능 강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11년말까지 총 7,190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1,235개소를 설치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RPC의 과다 설치로 RPC간 과당 경쟁·원료곡의 고가 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1995년부터 지원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고,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 유통 및 경영개선 정책으로 전환하여 들녘별 쌀경제 체 및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19년까지 고품질 쌀 브랜드(가공시설 현대화)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RPC를 지원해오고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 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 RPC에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기에 경영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2006~2007년 2년간 시범 추진 후 시행된 수탁판매사업을 통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38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19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4.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 식량산업과 사무관 문석호

▣ 시행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 비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7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였다.

첫째, 화학비료 사용 억제 및 유기물 사용을 확대하고, 둘째,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 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개발하고, 셋째,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 넷째, 적기 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지도·홍보하고, 다섯째,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여섯째,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였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 및 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

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 이앙,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에 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 브랜드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주목할만한 변화는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100ha 내외의 면적으로 규모화, 조직화하는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을 신규사업(12개소)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전문 컨설팅업체, 사업참여 경영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83개소를 지원하여 총 113개소의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였다.

〈그림 4-1〉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전략



▣ 향후계획

그 동안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우리쌀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경영측면에서는 쌀농가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탁형 계약재배 사업 결과를 집중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농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을 위해 고령화 및 영세농 위주의 인적 구성, 품종의 반복, 다수 생산자, 수확기 집중 매입 등으로 매년 수확기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장불안정 문제

의 근본적인 해결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12년에 ‘수탁형 계약재배’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육성하는 들녘별 쌀경영체와 계약재배를 약정한 RPC 2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들녘별 경영체 50개소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5. 쌀 소비 촉진

▣ 식량정책과 사무관 김전호

▣ 시행배경

쌀 생산량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정체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내 생산량과 의무 수입량의 증가로 쌀 재고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 쌀 수요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을 꾀하며, 주식인 건강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사업 초기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쌀과 밥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밥 중심의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식문화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을 선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10~2011년에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사이버 쌀 박

물관을 통해 쌀 소비 촉진관련 콘텐츠 개발, 쌀관련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CBS(기독교방송), 노컷뉴스, 교통문화선교회 등과 쌀 소비촉진 공동 캠페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10.11)하여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쌀 교과서 제작, 쌀국수 시범급식, 식습관 교육프로그램 시행 학교 선정 지원, 쌀 중심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 차세대 소비 주축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쌀 및 쌀 제품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및 쌀 가공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1.11)하고, 이를 통해 쌀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신세대 입맛에 맞는 쌀요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미라클 프로젝트’, ‘대한민국 쌀요리 경연대회’,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 대상 다양한 주식교육, 쌀밀가루 공급 본격 추진 등 ‘쌀 면류 대중화 사업’,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사업’, ‘쌀가공업대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추진본부를 전국 14개 지방 조직으로 발족하여 쌀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벤트 중심의 단기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지양하고, 사회 저변에 쌀 및 쌀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 가공제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익성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쌀 가공업체의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채소산업



1. 노지채소

▮ 원예산업과 사무관 김도범

▣ 시행배경

노지채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시행 초 배추·무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다.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협 등에 융자금(무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노지채소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를 위하여 계약재배 사업 주체에 기존의 농협 이외에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추가하고, 계약재배 사업 대상도 사업 참여 농협 이외에 가공업체, 김치제조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특히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관측 결과 예상가격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또한 계약방식도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취 방식을 추가하고, 계약방식 개선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 보장가격을 현실화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농가 스스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요 농축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와 농작물 생육정보를 결합한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 급변기(6~9월)에 농업관측 기동반을 배치하여 관측속보 발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자조금사업을 이관,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 향후계획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농협의 사업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산지 유통인의 법인화 유도, 김치제조업체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연차별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농산물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운용의 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2. 시설채소

▣ 원예경영과 사무관 이덕민

▣ 시행배경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의 기반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시설채소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향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에 따라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기 지원된 시설원에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전문가를 통한 시설원에 작물재배 및 관리기술·경영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지순회 지도 등을 통해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 생육에 적합한 48종의 내재해형 원예 특작시설 및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비닐하우스 36개, 인삼재배시설 10개, 버섯재배사 2개)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 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후 온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설원에 농가 경영비중 40%에 달하는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부터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6월 ‘농어업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시설원에 에너지의 4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농어업용 에너지 비용을 20% 절감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녹색 농어업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다겹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비롯, 기존의 경유 의존율을 감축하고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열과 목재펠릿을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간 지열냉난방시설 85ha, 목재펠릿난방기 138ha에 지원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지열냉난방시설이 수산 및 축산분야에도 확대 지원되었다. 2011년 6월에 수립된 농어업 에너지 합리화 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유류 의존도를 2009년 91%에서 70%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계획

한정된 자원인 석유 및 전기 냉난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스 등 지속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의 활용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시설원에 농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의 유류 및 전기 사용이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온실가스 절감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 시설농업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과수·화훼산업



1. 과수산업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기주

▣ 시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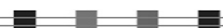
과실류는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소폭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과수농가 200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 이상 농가는 22.5천호인 11.2%이며, 대부분이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8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과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1인당 소비량도 60kg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FTA 확대로 수입과실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에는 그 동안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 진전이 미흡하고, 각 국가와의 FTA 확대와 국내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 갱신, 키 낮은 밀식 사과원 조성 등 생산시설 현대화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2000년부터는 그 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 종합 자금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2004년부터는 한·칠레 FTA이행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까지 8년간 FTA기금 1조4천9백억원을 조성하여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491억원(3,100ha)을 지원하였고,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171억원(1,158ha)을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 생산의 근간이 되는 과수 묘목에 대해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고품질 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에 7억원(3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지원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총 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83억원을 지원하여 3개소가 추가 준공되어 총 16개소가 운영됨으로써 산지 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산 과실의 품질 균일화와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4억원을 지원하였다.

●● 과수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서 재배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5,812ha에 대해 폐업지원금 2,377억원을 지원하였고,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나무 제거비용을 지원하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2010년까지 193억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경영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는 과원 매매·임대차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0년까지 2,0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276억원(304ha)을 지원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는 지난해 보완 수립한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비 627억원을 지원하여 4천ha 규모의 과원에 대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106억원을 지원하여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의 규모화와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각각 3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에 82억원을 지원하고, 브랜드 육성사업에도 13억원을 지원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화훼산업

▣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휴현

▣ 시행배경

현재 화훼 재배농가 수는 정점이었던 2000년 13천호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10천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8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재배면적은 2005년에 8천ha 수준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농가의 지방 이전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1〉 화훼 생산현황

구 분 \ 년 도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재배농가(호)	12,509	13,080	12,859	11,588	10,685	10,347	10,054
재배면적(ha)	5,156	5,891	7,950	7,073	6,639	6,829	6,833
생산액(억원)	5,090	6,649	10,105	9,043	8,640	8,510	8,215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꽃의 가치를 패션과 기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국민소득 및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내 화훼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게 생산, 유통, 소비, 수출로 구분하고 생산자단체,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왔다.

첫째, 고품질 화훼 안전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훼 전문 생산단지 중심 시설 현대화,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양액 재배 및 에너지 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처리, 저온유통 및 병해충 방제 등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또한 생산자단체, 수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화훼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우수 신제품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우량 종묘, 구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둘째, 화훼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기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선진국 수준의 화훼 종합유통센터를 충청권에 설립하기로 확정하였고, 고품질 화훼 유통을 위해 습식유통 시범 사업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생활속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스타마케팅, 꽃꽂이 생활플라워디자인 경연대회, 미스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등 꽃의 생활화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꽃 가꾸기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초등학교 5~6학년 10만명에게 소형 화분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분리형 개량화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단체에서 추진하는 화훼축제·이벤트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넷째, 화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화훼 선별장, 재배시설을 견학 하도록 하는 등 우리 화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주요 수출시장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한 결과, 지난해 일본의 원전사고로 화훼 수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91백만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향후계획

최근 국민들이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꽃을 가꾸고 즐기려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화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녹색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꽃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유망품목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화훼가 고소득 농산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화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 우수한 국내 품종 개발 육성 및 농가보급 촉진, 집단화된 화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 선진화된 화훼 종합유통센터를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훼 유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화훼류 표준규격, 유통시스템 등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화원의 역할 확대 및 전문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화훼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꽃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절화 중심의 수출에서 분화, 자생화 등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일본 위주의 수출에서 러시아, 중국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축산업



1. 한우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서금현

▣ 시행배경

한·미 FTA 등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준가격을 16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도말 가입암소 마리수 대비 84%가 사업에 참여하여 120천 농가, 1,069천마리가 가입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는 브랜드 경영체 등 10개소의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추진하여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송아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 한우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혈통 등록, 도체정보 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 유전자 보호 및 부정유통 시비 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는 한우 판별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1년에는 2010년보다 5% 증가한 983 천두를 판별하였다.

또한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도 중점 추진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0여개 한우 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중 광역 브랜드만도 12개이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 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 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우산업의 조직화로 시군 지역별로 한우사업단 162개를 인증하였으며, 시도 단위 광역사업단 9개소 및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등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한우농가 조직화 사업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기초한우사업단 10개소에 대하여 5억원씩 지원하였다.

더불어 유통개선 및 직거래 확대 대책은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직거래 장터, 브랜드 가맹점 등 직거래 확대,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 소비홍보 및 산지 소값 안정대책

한우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지원 상한액인 9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촉진과 교육·홍보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TV광고 제작·방영, 통화 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2009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08.7) 및 쇠고기 이력제('09.6)의 전면 시행으로 쇠고기 소비가 늘어 산지 소값이 한·미 FTA 협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사육 마리수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의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11년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216천톤)이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하였다.

▣ 향후계획

그간 산지 소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소 사육 마리수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1년부터 농가 자율적으로 사육 마리수를 감축하기 위한 생산자단체 결의대회, 저능력우 대상 농가 자율 도태 등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여 사육 마리수 감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소 사육 마리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량 송아지 공급을 통한 한우의 품질 고급화와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은 2017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낙농산업

▣ 축산경영과 사무관 우만수

▣ 시행배경

DDA, FTA 확대 진전에 따라 유제품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낙농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개방에 따른 가격 우위에 있는 가공유제품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과 국내 낙농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가격 경쟁력 열위, 수급상황과 무관한 가격결정 체계, 산업 주체간 협력체제 미 구축, 유업체 주도의 수급조절 체계 지속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 확립을 통한 유통의 합리화, 생산자 자율에 의한 원유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시장의 확대에 낙농과 유업의 공동노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안정 성장 실현을 위해 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사료값,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낙농가 생산비 증가로 원유가격 인상 폭을 두고 낙농가와 유업체간 힘든 협상 끝에 2012년 8월 16일자로 원유 기본가격 130원/ℓ 인상(704원/ℓ →834원), 체세포수 2등급 구간가격 조정(23.69원/ℓ →47.00원) 등에 합의하였으며,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포함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대책(안)중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던 우유가격 결정 구조 부분은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를 통하여 ‘원유 기본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우유가격 결정 체계를 제외한 대책(안)은 구제역 영향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급안정이 현안과제로 부상되면서 산업 주체간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수급안정화를 위해 체세포수 2등급 구간가격 조정, 쿼터 상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원유 부족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2011년 수급상황은 2010년 대비 18만톤이 적은 1,889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823천톤을 원유로 직접 사용(백색시유 1,324, 가공시유 159, 유제품 340)하고, 나머지 66천톤을 분유로 가공한 후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표 4-2〉 우유 수급상황

(단위 : 만톤)

구 분 \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생 산	226	223	218	219	214	211	207	189
- 수 요	311	308	312	310	304	311	325	359
· 시 유	161	154	156	158	158	157	154	148
(백색시유)	(135)	(132)	(136)	(138)	(138)	(140)	(138)	(132)
· 유 제 품	150	154	156	152	146	154	171	211

또한 경제상태에 있는 유제품 소비홍보를 위하여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우유의 우수성과 우유 음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유아, 청소년, 주부, 노인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실시한 낙농체험 관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국에 체험목장을 조성함으로써 2011년 26만명이 방문하는 등 도시민에게 우유와 낙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 체험목장을 학생들의 우유급식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우유 음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소년기의 우유 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우유급식 담당공무원 연찬회,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부대행사로 초·중고등학생 참여 경연대회, 우유급식 우수학교 선정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업체의 자율적인 학교 우유급식 발전사업비 거출(0.5원/팩)을 통해 지속적인 우유급식 확대 및 홍보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표 4-3〉 학교우유급식 우유소비량 현황

(단위 : 천명, 천톤)

구 분		연 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학교우유급식 학생수		3,867	3,938	3,768	3,849	3,762	3,654
유상급식		3,493	3,520	3,328	3,463	3,260	2,840
무상급식		374	418	440	386	502	814
연간 원유 총생산량(A)		2,176	2,188	2,139	2,110	2,073	1,889
연간 백색우유 소비량(B)		1,363	1,381	1,385	1,397	1,362	1,338
우유급식 연간 소비량(C)		149	152	146	148	147	142
대비율	백색우유 대비 (C/A)	10.9%	11.0%	10.5%	10.6%	10.8%	10.6%
	생산량 대비 (C/B)	6.8%	6.9%	6.8%	7.0%	7.7%	7.5%

〈표 4-4〉 최근 5개년 우유급식을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급식학생	급식률
초	2,996	76.8	2,889	78.4	2,798	80.5	2,682	81.3	2,534	80.9
중	567	27.6	518	25.4	622	31.0	628	31.8	630	33.0
고	353	19.5	339	20.6	416	21.2	432	22.0	469	24.1
특수	22	96.1	22	97.2	18	76.3	20	81.5	21	86.1
계	3,938	50.5	3,769	51.0	3,854	51.6	3,762	51.8	3,654	52.1

● 장기적 수급안정을 위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추진

FTA 등 시장 개방이라는 대외 환경과 다중 구조로 되어 있는 원유 수급체계의 불안요소, 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 대내 환경을 극복하고 낙농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은 크게 3가지 대책(수급관리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유통 개선 및 수요 확대)을 중심으로 9가지 세부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국 단위 수급관리 체계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수요 확대를 통한 국내 낙농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대책이다.

● 낙농산업선진화대책 주요 내용

첫째,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연간 20만톤 규모의 가공원료를 국제 경쟁가격에 공급함으로써 FTA에 따른 생산감소 피해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및 국내 조사료 재배 확대 로 사료의 자급률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낙농가 소득보전 등을 위해 우유생산비와 연동한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전자배송 및 물류표준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 확대를 위한 R&D 활성화,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확대, 학교 우유급식 제도개선 및 낙농 체험목장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구제역(FMD)으로 인한 원유수급 불안정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책(안)중 생산자와 유업체간 의견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 주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중재안을 마련하여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양돈산업

▣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 박홍식

▣ 시행배경

FTA 등 대외 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유류비 상승, 분뇨 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10년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2011년 12월 현재 817만마리로 전년 동기 988만 마리에 비해 17.3% 감소하였으며, 양돈 농가수는 6.3천호로 전년 동기 보다 감소하였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매몰 처분으로 2011년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2011년 할당관세 물량으로 삼겹살 15만 톤을 포함하여 돼지고기 26만 톤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모든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보모든 할당관세 물량을 2011년에는 31천마리를 배정하였다. 이와 같이 할당관세 물량 등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분이 크게 완화되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10년 연간 평균가격이 322천원/110kg이었으나 2011년은 471천 원/110kg으로 상승하였다. 아울러 한돈자조금과 자율 수급조절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돼지고기 수출 추진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을 수출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는 해외시장 수출 다변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비 등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향후계획

정부에서는 생산에서 가공·판매단계까지의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 농가를 선발하여 일반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연구과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 농가별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일화 작업과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양돈 농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열처리가공장 22개소를 육성하여 일본을 비롯한 홍콩, 필리핀, 대만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양계산업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성구

▣ 시행배경

2011년 양계 전업규모(3만마리 이상) 농가는 1,919호로, 전체 사육농가 3,403호 대비 56% 수준이며, 사육수 점유율은 84%로 규모화 및 전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2011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56만6천톤으로, 이중 수입량이 13만1천톤이다. 따라서 자급률은 77% 수준으로 2000년 80%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 수입국가는 미국(8만7천톤)과 브라질(2만5천톤)로, 이들 국가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 닭고기 수출량은 15,346톤으로, 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 등으로 2000년 1,710톤보다 9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축사에 대한 시설현대화, 가축 계열화사업, 계란 집하장 및 가공장 시설사업, 자조금 지원 등과 더불어 양계 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을 강화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가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111개소(14,334백만원)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 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괄 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계열화사업을 통해 4개소의 계열주체와 계열농가에게 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계란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조절 유도를 위해 계란 집하장·가공장 시설자금 100억원을 2개소에 지원하였다.

한편 그동안 육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으나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농가들은 사육경비 및 병아리 등 원자재 품질 등에 불만을 제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계열화사업 연구용역 실시, 관련단체 및 전문가와 계열화사

업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농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원입법 과정을 통해 지난 2012년 2월 22일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축산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간의 분쟁 등을 해소하여 상호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년 6월부터 양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고 2011년 소비홍보, 농가교육,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등에 기여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가축 계열화사업, 계란집하장 및 가공장 사업, 자조금 지원 등을 통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 규

▣ 시행배경

국제 사료가격 상승 및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조사료 공급을 위하여 논을 이용한 하계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함으로써 2011년에는 조사료 공급량이 558만톤 수준이다. 이중 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은 4,606천톤으로 약 83%를 차지하며, 수입산은 971천톤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2011년 조사료 자급률은 83%로, 전년(82%)보다 1% 증가하였다.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지원 강화 등으로 유희 농경지 이용이 증대되어 조사료 재배면적은 2010년 대비 6.6% 증가한 260천ha이다. 다만, 초지면적은 경지의 전용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10년보다 418ha 줄어든 38.9천ha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구입비, 종자구입비, 볏짚 처리비, 조사료 가공시설 등 예산지원을 2009년 819억원에서 2011년에는 1,065억원으로 대폭 늘려 겨울철 유희(논·밭)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의 일환으로 국내산 사일리지 품질 균일화 및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종·축산 농가의 상호신뢰 회복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사업비 지원단가를 유가(油價)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일리지 제조비는 2012년 60천원/톤(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경영체에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150백만원/30ha(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장거리 운송비는 60천원/톤(국고 50%, 자부담50%)을 지원하고 있다.

▣ 향후계획

기후변화, 개방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급여비율 개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1년 260천ha에서 2014년에는 370천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량 종자 보급 및 연중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종자 선택, 작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사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계·장비중 트랙터 장비 지원시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기본적인 곤포 장비를 갖춘 경영체에 보조 지원 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보조 대상 사료작물 종자는 국내 육성 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종자에 한하여 지역 농·축협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을 지원하고 쌀 수급조절과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논 및 간척지를 이용한 하계 사료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한 생산주체 육성 및 TMR 가공장 등 대량 사용처에 지원을 강화하여 국산 조사료 보급 확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조사료생산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2년부터는 하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단가를 확대 지원(40천원/ha)하여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수입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6.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 방역관리과 사무관 김정주

▣ 시행배경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토양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가축 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축 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 시설자금을 2010년 791억원에서 2011년 801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비 : ('07년) 424억원 → ('08년) 664 → ('09년) 754 → ('10년) 791 → ('11년) 801

또한 가축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축분뇨 해양 배출량을 2010년 107만톤에서 77만톤으로 감축하는 한편 자원

화율도 2010년 86.6%에서 87.6%로 끌어 올렸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분뇨가 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개정

그 동안 가축 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 위주의 법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으나 가축 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06.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규칙('07.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 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축 분뇨로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액비 부숙기간(6개월 → 4개월), 액비 살포 의무면적(돼지 : 640㎡ → 260㎡) 및 주거지로부터 액비 살포 거리제한(100m)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0.11.8)하였다. 또한 액비의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액비 살포 가능 지역에 골프장과 시험림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1.7.28)하였다.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4억원 이내에서 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 조직체에 대하여는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14,069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종 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 농가에 액비 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축산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액비 저장조 984기를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 (35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개별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가축 밀집 사육지역, 중규모(1천두~3천두) 농가가 많은 지역, 도시화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이 가축 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조직체에 대하여 1일 100톤 처리 기준으로 30/45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50개소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07년) 5개소 → ('08년) 19 → ('09년) 39 → ('10년) 56 → ('11년) 68

●●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 상황과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비용 및 기술상의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악취 제어·관리기술, 기능성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작물·계절별 맞춤형 퇴·액비 제조기술, 사용기준 및 살포 경지면적 기준 설정, IT를 이용한 개별 농가 및 국가단위 가축 분뇨 통합관리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가축 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12년 가축 분뇨 해양배출 금지 및 자원화 촉진 등을 위하여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축 분뇨 퇴액비에 대한 경종 농가의 신뢰도 확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비료성분, 부속도 및 악취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액비만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은 공동 자원화 시설과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매년 운영실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평가결과 3년 연속 '하'등급을 받는 경우 모든 정책지원을 제외하고, 불량 액비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액비 저장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슬러지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저장조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퇴·액비에 대한 경종 농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안전위생과 사무관 이성도

▣ 시행배경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축 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 규칙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 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오리 농장에서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로써 주요 축종에 대하여는 농장부터 축산물의 최종 판매단계까지 명실상부한 일관적 HACCP시스템(Farm-to-Table HACCP system)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성과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의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가들과 몽골의 축산물 위생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하여 HACCP제도 운용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심사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노력도 계속하였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 위반 농가나 긴급 도축, 주사 자국, 화농 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1년에는 총 128천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162두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검출률 0.13%)되었다. 이

는 2010년의 잔류물질 검출률 0.15%에 비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 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균의 오염 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 2010년 309개소에서 2011년 378개소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제기된 소비자의 우려와 관련, 이를 해소하고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립 불능 소 도축금지 및 보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부산, 난산, 산욕 마비, 급성 고창증을 제외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 불능 소에 대해서는 모두 도축을 금지하고, 광우병(BSE) 검사를 거친 후 폐기하고 폐기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향후 국내에 BSE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제기구(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인정받아 BSE 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감축하여 2011년 7월부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이와 함께 가축 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13.8)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축산물 HACCP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전문인력 확충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며,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농장 및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8. 가축질병 방역강화

▮ 방역총괄과 서기관 강대진·조옥현, 방역관리과 서기관 이기중

▣ 시행배경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 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미국, 일본 등의 광우병(BSE) 확산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국가 방역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국경검역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신고 및 소독 의무화 시행에 따라 해외여행 축산 관계자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되었고, 또한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확대 설치하여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검역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 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 공관을 통해 검역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 전용 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 안내방송, 리후렛 배포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 방역은 우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요 가축질병에 대해 국가 위기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발령되면서 단계별 방역조치가 추진되며, 예찰요원을 동원한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심축 신고를 위한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4060)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였으며, 축산관련 산업연수생 및 해외여행 축산 관계자에 대한 소독 강화와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국내 방역을 추진하였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2010년에 세차례(1월 6건, 4월~5월 11건, 11월~'11.4 153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매몰) 조치 및 전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소독·농장예찰 강화 등 국내 방역에 주력, 2011년 4월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과 2006년 말 국내 발생 이후 겨울철새 유입시기인 동절기(11월~2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2008년 4~5월 전국적인 발생으로 발생시기가 다변화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능동적 예찰 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국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발생지역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정하여 시·군 예찰팀을 구성, 매주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닭·오리·야생조류(철새 등) 등 국내 유입 가능 경로별 예찰검사 등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가의 주기적 소독 등 차단방역 능력을 제고하고 초동방역팀 운영 등 방역 능력을 강화하여 AI 재발방지 및 발생시 조기근절 체계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일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2건이 발생하였다. 이어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 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 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 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100% 실시, 검사물량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두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 불능 소'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기립 불능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였

고, BSE의 국내 발생에 대비, 머리·내장 등 특정 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하였으며, 동물성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 사용 및 이행 여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주는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446명('09년 151명, '10년 149명, '11년 146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해외 유입 질병 및 국내 상시 발생 질병 등 가축 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9.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 축산정책과 사무관 김재민

▣ 시행배경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 설치로 시작된 UR 다자간 농산물협상은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DDA, FTA, 쇠고기협상 등의 진행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축산물 수입확대 추세와 국민 식생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축산물 유통의 표준화, 규격화 및 가축개량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축산법에 근거하여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을 도입하였다.

사업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소와 돼지고기에 대해 등급화 거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00년)하여 도축되는 전량에 대해 등급 판정을 시행하고, 계란('01년)과 닭고기('04년)에 대해서는 업체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인 등급 판정을 시행함으로써 주요 국내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유통거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편의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은 현재 주요 4대 축산물(소, 돼지, 계란, 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축 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되어 도축된 후 도체상태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위생검사에 합격된 도체만을 대상으로 등급 판정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도체별로 시행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고 등급판정 확인서가 첨부되어 유통되게 함으로써 도체의 품질가치가 유통단계 및 소매단계까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의 도소매 가격이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차등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2011년 등급별 가격차등화는 한우의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과 최하 등급인 3등급 간 8,866원/kg으로 2010년 대비 48원이 상승하였으며, 돼지는 1+등급이 5,899원/kg으로 2010년 1+등급 4,220원/kg보다 1,679원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축산물의 품질 간 가격 차등화의 정착은 양축 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표인 거세율은 한우의 경우 2010년 88.2%에서 2011년 88.7%로 0.5%p,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구제역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63.1%에서 62.4로 0.7%p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돼지의 경우도 거세율은 2010년 98.1%에서 2011년 98.2%로 0.1%p 증가하였으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등급기준 개정, 구제역의 영향 등으로 68.9%로 전년에 비해 4.7%p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 판정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행되며, 엄격한 공정과정 심사결과에 의해 지정된 등급판정 시행 작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08년부터 학교급식법에 납품기준으로 축산물의 등급이 설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정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란의 경우 2011년 37개 시행 집하장에서 588백만개의 계란이 등급판정 되었으며, 이는 2010년 판정물량인 521백만개 대비 12.6%가 확대된 것이다. 닭고기는 2011년 27개 시행 작업장에서

53백만수가 등급판정 되었으며, 2010년 46백만수 대비 15.2%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계 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사업은 학교급식에 이어 대형할인점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에도 등급의 활용도가 확대되어 등급판정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 등급판정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등급 판정 이후 그 판정결과 및 연계된 가격정보 등을 신속하게 양축 농가와 유통업체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축산물의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시행 주체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된 IT인프라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며, 등급통계, 출하지원, 확인서 조회, 경락가격 조회, 돈육대표가격, 축산물검수시스템, 부위별 요리 방법, 축산물브랜드 등 다양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소비 정보를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산 축산물이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정보제공 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을 활용하는 이용자 수가 월 평균 2010년 206만명에서 2011년 224만명으로 8.4% 증가하였다.

또한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인 소, 돼지, 계란, 닭 및 말 등에 대하여 등급 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조사는 축산 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에 맞는 등급제도의 개선, 영농 활용 등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 해결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등급판정사업 현장과 축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소, 돼지 도체 등급기준, 시험사업 등을 통한 말 도체 등급판정 기준, 액란용 계란 등급판정 기준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리고기 품질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오리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등급 종류를 축소하여 변별력 및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종전 17개 등급으로 운영되던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7개 등급으로 단순화하였고, 소고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불가식 지방량 생산을 줄이고, 고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육량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을 육질 등급 전체를 나열하고 해당 등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등급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는 등 축산물 등급판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향후계획

국제적 경제 위기, 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국내 축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소비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축 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고기의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더욱 단순화하고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어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며,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등급판정 정보 내에 양축 농가 및 유통업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정보제공이 단절되지 않게 전산장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 판정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뒷받침하게 할 계획이다.

10. 쇠고기 이력제 추진

▣ 방역관리과 사무관 이종균

▣ 시행배경

유럽, 일본, 미국의 광우병(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 개량 등을 위한 정보 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 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의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에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는 한편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 축협 등 137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 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2009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 실시를 통해 식육 유통업체 등의 개체 식별번호 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 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 검증수단인 DNA 동일성 검사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 상담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소 사육현황을 조사하는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였고, 이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DNA 동일성 검사장비 및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한 이력정보 조회방법 개발, 이력제 예산 및 마사회 적립금을 활용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이와 함께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의무 대상 식육포장 처리업소를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

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산 귀표 개발을 완료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묶음 번호에 대한 이력조회 기능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이력제 대상 축종을 돼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표준안 및 시범사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 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제공, 전산 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식육 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성능 개선, 스마트폰, RFID 등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쇠고기 이력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에 도입하는 돼지 이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부 브랜드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1.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

■ 축산경영과 사무관 서금현

▣ 시행배경

축산 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대책’이 2004년 2월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 시행 내용 및 성과

축산물의 브랜드 사육비중은 2004년 한우 21.8%, 돼지 45.5%이던 것이 2009년 각각 42.4%, 62.0%로 크게 향상되었고, 2010년에는 한우 50.1%로 향상된 반면, 돼지는 구제역으로 매몰된 사육마리수가 많아 59.4%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지속적인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TA·DD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 ①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 광역화를 추진하고 ②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며 ③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2개소, 1,025억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대규모, 우수 브랜드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통합·규모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

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육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도축 두수중 1% 수준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08.12.22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집중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을 통해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 및 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축산물 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절 임업



1.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가. 산림용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박용빈·김진아

▣ 시행배경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종자의 개발과 이를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으로 육성하여 생산·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유전적 우수성이 증명되지 않은 종자와 묘목이 사용될 경우 임목의 생장 감소가 수확기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불량한 형질의 임목이 생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지가 확실한 우수종자를 사용하고, 우량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기반정비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림용 번식자원 인증규범(CFRM, Control of Forest Reproductive Material, Moving in International Trade)에 따라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 종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조약에 따라 2008년부터 신품종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 정착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산림분야는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는 Rubus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을, 2012년 1월 7일부터는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종으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본격적인 품종보호제도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품종(임산물)은 현재 약 7,462종으로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품종보호제도의 취지로 미루어 향후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신품종 출원 유도 및 개인 육종가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신품종 요건 심사 수행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2008년 8월 출범시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0건의 신품종 출원을 유도하였고,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1,012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종별 특성 조사요령(Test Guidelines)’ 110종을 개발하였고, 신품종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4-5〉 산림분야 품종보호 대상종

구 분	산 림 분 야
2008. 3. 1(15종)	뽕은 감, 산수유, 천마,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백운플, 별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2009. 5. 1(약 7,462종)	모든 산림식물(Rubus屬 제외)
2012. 1. 7. (시행예정)	모든 식물

자료 : 농림부 고시 2008-10('08. 2. 21), 2009-28('09. 5. 1), 2011-178('11. 11. 2.)

〈표 4-6〉 산림분야 신품종 보호 출원현황

구 분	산 림 분 야
2008(18)	밤나무(5), 표고버섯(3), 쑥(3), 감나무(2), 기린초(2), 별개미취(2), 백운풀(1)
2009(45)	표고버섯(10), 감나무(5), 밤나무(5), 곰솔(4), 음나무(3), 잔디류(3), 구절초(2), 대추나무(1), 등골나물(1), 먼나무(1), 부처꽃(1), 산양삼(1), 소나무(1), 억새(1), 인동덩굴(1), 주름잎(1), 주목(1), 좀개미취(1), 지리대사초(1), 털부처꽃(1)
2010(38)	표고버섯(7), 아까시나무(4), 헛개나무(3), 감나무(2), 곰솔(2), 구절초(2), 밤나무(2), 현사시나무(2), 개미취(1), 금평의다리(1), 대추나무(1), 돌나물류(1), 사스레피나무(1), 산사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소사나무(1), 우묵사스레피나무(1), 장수버섯(1), 좀개미취(1), 해국(1)
2011(29)	개미취(1), 곰취(1), 구절초(1), 기린초(2), 꾸지뽕나무(2), 대추나무(1), 두릅나무(1), 마가목(3), 말오줌때(1), 밤나무(1), 백화등(1), 산초나무(1), 상수리나무(1), 소나무(2), 어리병풍(1), 표고버섯(9)

자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출원등록원부, 2012년

〈그림 4-2〉 제정된 종별 특성 조사요령



〈그림 4-3〉 자생식물 재배시험 포지 조성전경



●● 산림생명자원 관리체계 구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책임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각 책임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2011년 2개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특성평가 및 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약 17천종, 89만점의 생명자원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DNA 분석 등 특성평가를 약 5만점 실시하였다.

〈표 4-7〉 산림유전자원 보유현황

(단위: 종, 점, ha)

구 분	종 수	보존점수
종 자	1,794	27,461
영양체	5,062	415,541
미생물	246	1,171
DNA	9	7,385
집단(현지내보존, ha)	15	2,745(40지역)
식물·곤충·미생물 표본	15,465	440,013
합 계	16,963	891,571(2,745ha)

자료: 2011년 농업유전자원 시행계획 - 기관별 유전자원 보유현황('11년)

●● 우량 산림종자 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검증된 우량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및 채종림(채종임분 포함)을 확대 지정하고, 채종원과 채종림의 우량 종자 생산 및 보급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품질 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등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8〉 종자 공급원 조성실적(2011년)

구 분	면적(ha)	대상 종	비고
채종원	738.5	60	
채종림	278.9	14	지정 · 변경('94~'11)

●●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영세한 묘목생산을 지역기반 종자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자 2002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우량·건전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클론생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표 4-9〉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실적

구 분	연 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관 정	120공	20	20	22	10	10	11	5	6	9	7	
간이온실	112동	16	14	17	9	9	10	8	12	15	2	
토양개량	410ha	-	96	98	62	51	12	35	42	10	4	
클론생산시설	11동	-	-	-	-	-	-	-	-	-	11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 향후계획

●● 품종보호제도 활성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육종가의 신품종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종별 특성조사요령(TG) 등 과학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품종 보호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산림청, 지자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 및 묘목시장에서 불법종자 근절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 대한 계도 등 종자유통 단속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규범(ABS, 일명 나고야의정서, '10.10 채택)」의 발효에 대비하여 3개 책임기관과 함께 산림생명자원 보존목록 작성과 조사·수집·보존·증식 및 Gene Bank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물질을 탐사하는 연구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다.

●● 우량 산림종자 공급원(채종원, 채종림) 확충·관리 및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는 채종원 등을 1,017ha(74종) 조성하여 관리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품질 표시와 유통·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조성 시설(간이온실, 관정시설, 토양개량, 클론생산 시설 등)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한 종묘생산업이 지역기반의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녹색성장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김인천

▣ 시행배경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급속히 황폐화된 산림을 녹화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1, 2차 치산녹화('73년~'87년), 3차 산지자원화계획('88년~'9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98년~'07년)에 따라 조림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08년~'17년)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자원육성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431만ha에 110억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여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대통령 2008.8.15. 광복절 경축사)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한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과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하여 2011년에는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 16천ha(38백만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3천ha(4백만본), 유희토지 조림 1천ha(1백만본) 등 총 21천ha(45백만본)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생산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 산림녹화 시기에 식재하여 벌기령에 도달한 리기다소나무림을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도시·

마을 등 생활권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고, 산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금강소나무 및 안면소나무를 고품격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충을 위한 바이오 순환림 조성 및 유희토지 조림 등 산림의 기능과 산주의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4-4〉 한국의 치산녹화



▶ '60년대 황폐한 산림('60년대 서울)



▶ 녹화된 산림(강원 황성)

조림수종은 목재 생산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백합나무 등 용재 수종을 기본 수종으로 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솟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과 같은 특용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생활권 주변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등과 같은 경관 수종을 식재하였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리기다소나무 등 생장이 빠른 속성수를 바이오순환림으로 식재하고, 조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1960~1970년대 치산녹화기에 심어진 리기다소나무는 벌채 시기가 지나 점차 노쇠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벌채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백합나무 등 경제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대체하고 있다. 리기다소나무림을 벌채할 때에는 산림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잔존목을 남겨두는 택벌식 벌채 또는 대상벌채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벌채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13천ha의 리기다소나무 등 불량림 수종 갱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종 갱신을 통해 숲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2011년부터 산사태, 산불 및 산림 병해충 피해지 등의 산림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조림을 위하여 산

림 재해방지 조림을 1천ha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조림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5〉 산림재해방지 조림



▶ 산불피해지 조림 전(강원 양양)



▶ 산림재해방지 조림 후(강원 양양)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 유휴지에 나무를 심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5년간 2,50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7,048ha를 조성하였다.

〈표 4-10〉 최근 3년간 조림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백만본)

구 분 \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면 적	64,613	21,919	21,515	21,179
본 수	128	40	43	45

▣ 향후계획

산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바이오순환림,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목재자원 공급 및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08년~'17년)동안 253천ha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목재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백합나무 등 속성수를 이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할 계획('20년까지 10만ha)이며, 매년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조림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제림 단지 육성

▮ 산림청 산림자원과 서기관 조백수

▣ 시행배경

우리는 일제시대와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헐벗고 황폐된 산림을 국민적 노력으로 불과 30~40년만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다.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만큼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면적의 59%('10년말)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으로서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1970~1980년대 국토녹화 이후 산지 자원화를 위한 조림 수종을 다양화하는 등 경제림 조성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녹화된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데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육성할 대상지가 구분되지 않아 집약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공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3년간('99년~'02년) 경제림 대상지에 대한 산림실태를 조사하여 2002년 7월 경제림 육성대책을 수립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조사하여 2003년 12월 전국 1,221개 단지, 245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를 선정하고 수치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림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경제림 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림 단지를 최종 정비하여 전국 450개 단지 292ha(국유림 105개단지 58만ha, 민유림 345개단지 234만ha)를 확정('05.9)하여 경제림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11〉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현황(2005년)

구 분	계	국 유 림	민 유 림
단 지 수(개소)	450	105	345
면 적(만ha)	292	58	234

경제림 육성 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경제림 육성단지별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여건과 임상, 산림기본계획 등 기존 산림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산림관리계획인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민유림 128개 시·군 345개 단지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며,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방안과 장기경영모형을 마련하고자 기초연구('07~'09년)를 수행하였다. 경제림단지 지정 익년도 부터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을 경제림단지에 집중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림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목재생산위주의 경제림단지를 목재생산 경제림단지와 소득수종을 포함한 일반경제림 단지로 재구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4-6〉 경제림육성단지 입목생육 상황



▶ 대관령경제림육성단지(금강소나무, 강원 강릉)



▶ 방장산경제림육성단지(편백나무, 전남 장성)

▣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1년 말 현재 15.2%로, 약 84.8%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92만ha의 경제림 육성단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림 육성단지 내 산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현재 292만ha의 목재생산 경제림단지를 목재생산경제림 150만ha, 일반경제림 150만ha로 재 구분하게 되면 수치지도를 제작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보급하고 단지에 포함된 산림을 필지별로 DB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종갑

▣ 시행배경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숲아베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개량, 산물 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으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온실가스 감축이행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숲가꾸기 산물의 바이오매스 활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98년~'07년) 기간내에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은 총 3,010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93%를 실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명(상시 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3,911천ha의 숲을 가꾸었다.

〈표 4-12〉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98년~'11년)

(단위 : 천ha)

연도	구분	실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3,911	3,475	436
1998		257	214	43
1999		283	154	129
2000		276	159	117
2001		229	134	95
2002		296	244	52
2003		346	346	-
2004		337	337	-
2005		348	348	-
2006		334	334	-
2007		304	304	-
2008		378	378	-
2009		523	523	-
2010		470	470	-
2011		460	460	-

※ 숲가꾸기 실적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속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을 포함함.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04.2.12) 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로 차등화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해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제도적, 법적 개선이 추진되었다.

〈표 4-13〉 1단계 숲가꾸기¹⁾ 5개년('04년~'08년)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천명, 천ha, 천㎡)

구분		연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 산			8,341	1,200	1,475	1,584	1,981	2,478
고용 인원	연인원		12,500	-	2,500	3,000	2,750	4,250
	상시인원		13	-	10	12	11	17
사업면적			934	179	184	179	176	216
산물수집량			1,723	179	240	274	380	653

주 : 1)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실적은 속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200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일자리 창출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09년~’13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125만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202천개 일자리 창출 및 산물 650만m³을 수집·활용할 계획이다.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 생태적인 숲가꾸기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표 4-14〉 2단계 숲가꾸기¹⁾ 5개년(’09년~’13년) 추진계획

(단위 : 천ha, 천명, 만m³)

구 분 \ 연 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면적	1,250	235	240	256	258	261
일자리창출	202	22	33	45	49	53
산물수집량	650	80	110	130	150	180

주 : 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은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사업의 큰나무가꾸기 추진 계획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2011년은 2,938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67천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19천명의 상시 녹색 일자리 창출과 130만m³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하였다.

〈표 4-15〉 2011년 숲가꾸기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천ha, 천명, 천m³)

구 분	계 획	비 고
• 사업예산	2,938	•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면적	267	• 인공림 숲아베기 위주로 추진
• 일자리 창출	19	• 상시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산물수집·활용	1,301	• 숲가꾸기 부산물의 산림자원화 활용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정책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 숲가꾸기 작업시 베어진 산물의 수집에 주력하여 펠릿 등 산림 바이오에너지 자원과 산업용재로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약도의 숲아베기를 실시한 임지에 대한 추가 작업을 실시하고 인공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비중을 확대하며, 숲가꾸기 설계 감리제도 확대로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둘째, 숲을 가꾸고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숲가꾸기 일관시스템을 확대하였다. 숲가꾸기 대상지역을 보다 집단화, 단지화하여 산물 수집과 연계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물 수집 및 활용계획을 반영한 통합 작업시스템을 정착하여 임업 기계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물 수집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 공급 등 산림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였다.

〈그림 4-7〉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구축 및 산물수집

숲가꾸기	· 10ha 이상 단위로 집단화
간벌률	· 20%내외 → 35%내외
수집률	· 20%내외 → 50%내외
수집방법	· 인력위주 → 기계화 수집 (0.8㎡/1인) (4.0㎡/1인)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셋째, 주요 도로변, 강변 등 가시권 산림의 집약적 숲가꾸기로 산림 경관을 개선해 국토의 품격을 제고하였다. 작년부턴 전국 단위로 확대된 ‘숲가꾸기 패트롤’ 현장 대응 조직을 활용하여 주요 거점별 숲가꾸기를 우선 실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창출하였다.

넷째, 숲가꾸기 현장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정례화하고, 숲가꾸기 담당자 실무교육 및 근로자 기술교육을 확대하며, 현장 소통을 위한 워크숍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현장 관리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정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시장공급 확대를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중심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5,300명을 상시 고용하였다. 경관 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주요 강 유역 등 수원 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생활권 산림을 정비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은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의 4년차로써 2,780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50천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가치를 제고하고, 17천명의 상시 녹색일자리 창출과 150만m³의 산물을 수집·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 4-16〉 2012년 숲가꾸기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천ha, 천명, 천m³)

구 분	계 획	비 고
• 사업예산	2,780	•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면적	250	• 인공림 숲아베기 위주로 추진
• 일자리 창출	17	• 상시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산물수집·활용	1,500	• 숲가꾸기 부산물의 산림자원화 활용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특히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임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립공원 등 법적 제한으로 방치되었던 산림에 대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숲가꾸기를 도입하여 경관·생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층림 가꾸기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다음 세대의 숲 조성에 대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후계림을 사전에 조성하여 숲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순환구조를 앞당기는 한편 산림내 수직적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생산량 증대 및 탄소흡수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도심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에 재해 예방 차원의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 지역의 산림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경기회복 추세, 농·산촌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로 유지하되,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2.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가.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림청 산불방지과 사무관 김기태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02년~'11년)연평균 427건의 산불로 1,173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 규모면에서 미국(77천건, 653만ha), 캐나다(8천건, 193만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불이 특정 시기(2~5월)에 사람의 활동(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64%가 산림이라는 점에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17〉 연도별 산불피해 현황

(단위 : 건, ha, 억원)

구분 \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건 수	599	271	544	516	405	418	389	570	282	277	427
면 적	4,467	133	1,588	2,067	254	230	227	1,381	297	1,090	1,173
건당피해	7.5	0.5	2.9	4.0	0.6	0.6	0.6	2.4	1.1	3.9	2.7
피 해 액	90	3	41	75	4	4	4	39	45	291	59

자료 : 산림청, 2011년 산불통계연보

▣ 시행내용 및 성과

일반적으로 봄철과 가을철 기상 여건은 그 해의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2011년 봄철은 강수량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봄철 건조특보 발령일도 85일로 예년 평균(69일)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기상 여건이 매우 불리한 해였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및 AI 방제가 산불 집중시기까지 이어져 일선 기관의 산불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발생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산불 발생 건수는 봄철 기준 251건으로, 예년 평균인 380건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피해면적 또한 예년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기적인 눈·비 등으로 기상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였던 가을철에는 최근 10년 중 산불건수 및 피해면적 최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총력 대응태세 유지

2011년은 봄철 절기가 늦어짐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0일 연장 운영(3.15~4.30)하여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하였고,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산림청, 지자체,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근무(3.22~5.15, 강릉)를 통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산불관리센터장에 해당지방 산림청장을 임명하고 헬기운 영권을 부여함으로써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명(식목일)·한식 전후(4.2~6)로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입산허가 중지,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등 조치를 통해 산불 발생 건수 기준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전국산불관계관회의’, ‘산불대응관계관교육’ 등을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 핵심대책을 직접 전파하고 산불 현장 진화 지휘체계 확립과 진화 역량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11.2)’에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보고하고 유관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산불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산불의 사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발견·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발생 및 피해면적 최소화에 기여하였다.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영방송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 예방을 홍보하였으며, 산불 위험정보를 실시간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농·산촌 이장, 군부대, 유관기관, 언론사 등 7만여명에게 발송하여 산불 조심기간 중 24시간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또 일반 국민과의 접촉이 많고 기동성이 우수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을 활용(14천명)하여 산불 예방을 홍보하고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교재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밖에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성능을 보강하고, GPS 단말기 5천

대를 특·광역시로 대상으로 추가 보급하였으며, 일반인의 산불신고 활성화와 산불예방 홍보를 위하여 스마트폰용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였다.

●● 산불 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산불 방지시설 확충

추수가 끝나는 10월부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 제거반(1,040조 7,984명)’을 구성하여 산림 인접 지역의 농산폐기물, 등산로 및 도로변 가연물질을 제거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소각금지기간’(3.15~4.30)을 정하여 논·밭두렁 불 놓기 허가를 일체 금지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낙엽 등 가연물질 제거와 병행하여 ‘산불방지 숲가꾸기’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문화재·전통사찰, 산림연접 주택지, 원전 등 주요 시설과 송전선로, 도로 및 철로변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492ha)하여 산불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다. 또한 사찰, 문화재, 휴양림 등 주요 시설물과 수목원, 금강소나무숲, 민통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가 필요한 산불 취약지역에 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에 대비하였다.

●● 지상·공중 진화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광역 산불진화대(6개대)의 시범 운용으로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간 균형과 시너지 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형 산불과 야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전국권역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수시설 및 진화장비 표준화를 통해 기계화 산불진화 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지상 산불진화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에 대형·초대형 헬기 가동 가능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위험 지역에 이동 배치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헬기의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헬기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운항 정보시스템(SIS)’을 도입하여 헬기 위치와 비행정보 등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산불대응 평가·분석

산불방지의 변화된 여건과 내부 대응역량을 반영한 종합전략으로서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12년~’16년)’을 수립·시달(’11.9)하였으며,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11.4)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재정비하는 등 장기대책 수립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간인,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산불 대응

과정의 문제점, 효율성, 현장지휘본부 운영체계, 상황별 조치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을 의뢰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화범 검거팀’, ‘산불 전문조사반’ 등을 운영하고 산불신고 체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함으로써 산불 방화범 검거율이 예년의 32% 수준에서 47%까지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 향후계획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대형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선진화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 및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11천명으로 확대하고 진화헬기 51대, 산불진화차 1,600대, 진화지휘차 278대, 기계화 진화장비 2,775대, 무인 감시카메라 950대, 감시원 신고단말기 22,000대 등 현대화, 첨단화된 진화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 병해충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사무관 안진수

▣ 시행배경

곤충은 지구상의 생명체 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약 150만여 종으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생물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곤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 병해충은 4,000여 종이며, 산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요 산림 병해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솔나방, 흰불나방 등 20여 종이다.

이러한 병해충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69천ha의 약 2.6%에 달하는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산림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신종 병해충의 발생 및 기존 병해

층의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와 교통의 발달로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산림 생태계에 위험이 되고 있다.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 지속적으로 예찰, 방제를 실행하여야 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산림 병해충 발생면적은 2010년보다 26% 감소한 167천ha이다. 주요 4대 병해충은 26% 감소한 103천ha이며, 매년 10% 이상 감소 목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18〉 최근 5년간 산림병해충¹⁾ 발생현황

병해충별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ha)		371,539	353,125	290,404	225,345	167,084
소나무재선충병		6,855	6,015	5,633	3,547	5,123
참나무시들음병		3,591	4,087	2,489	1,812	3,307
솔잎혹파리		179,585	183,229	155,897	113,123	82,125
솔껍질깍지벌레		47,207	41,210	32,497	21,855	12,524
흰불나방		22,107	19,687	15,478	13,325	13,016
잣나무넓적잎벌		3,397	3,941	4,576	4,865	3,365
솔나방		3,722	4,355	5,198	1,267	1,461
밤나무해충		53,707	51,411	41,464	31,629	21,207
기타병해충		51,368	39,190	27,172	33,922	24,956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주 : 1) 4대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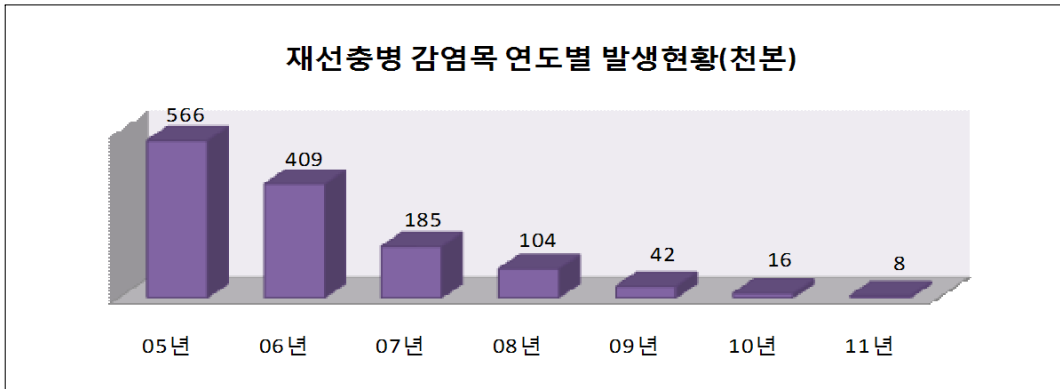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97년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2004년 경남·경북지역 및 중부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어 2006년 말에는 전국 6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05.5) 이후 집중방제 체계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방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6년 말에는 피해면적이 감소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어 2011년 47개 시·

군·구에서 피해면적은 5,123ha에 이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방법도 매우 어려우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으로 2011년에는 감염목 발생 본수가 8천본으로 대폭 축소되어 2005년 최고 발생 대비 99% 이상 감소하였다.

〈표 4-19〉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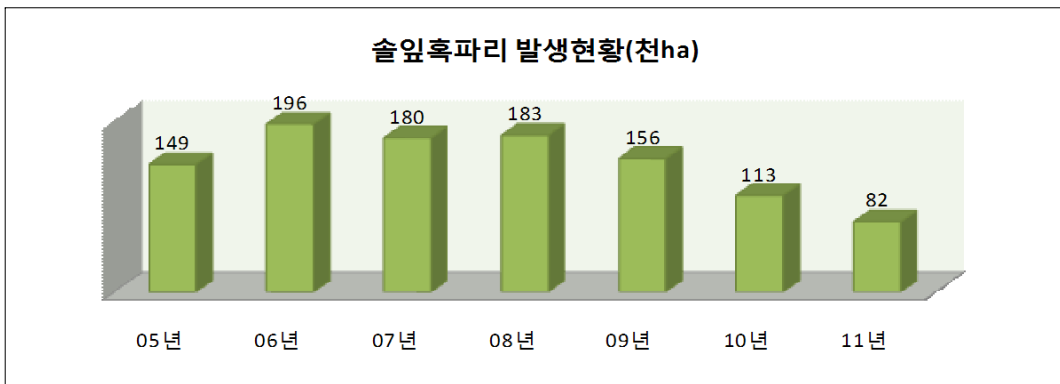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솔잎혹파리 방제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73천ha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6년 196천ha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예찰·방제정책 추진으로 2011년에는 82천ha로 전년보다 2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4-20〉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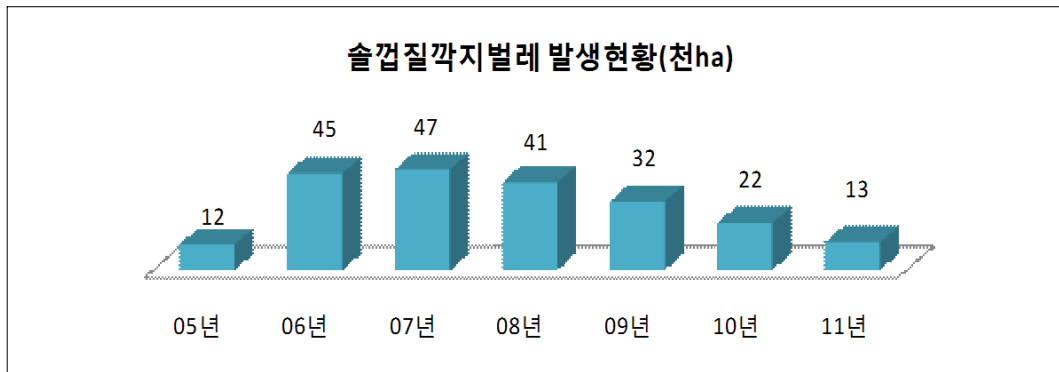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우량 곰솔(해송)림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발생량이 45천ha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충남 보령군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원면 모항리에서 신규로 발생되어 확산 우려가 있었으나 항공방제, 나무주사, 임업적 방제 등의 노력으로 32천ha의 발생에 그쳐 약 21%가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제방법으로 고도화하고 적기 예찰과 방제를 통하여 2006년 대비 7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표 4-21〉 솔껍질깍지벌레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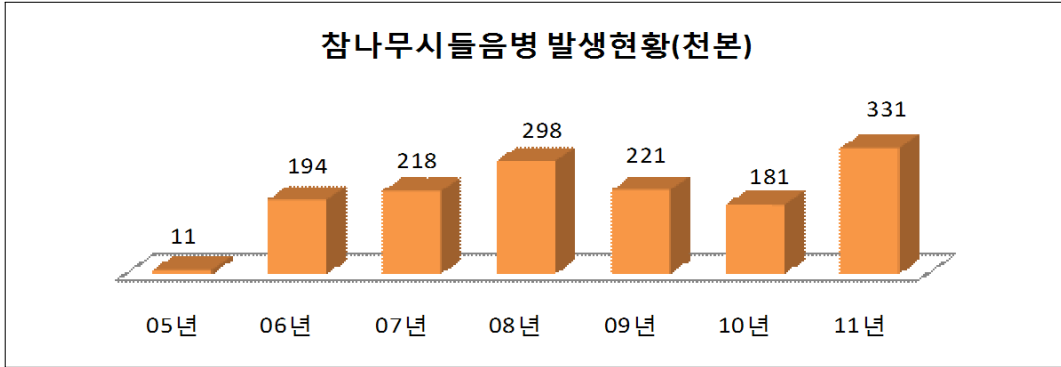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확산되어 2008년에는 298천본이 발생하였으나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끈끈이로트랩, 전기충격 도입, 유인목 설치, 소구역 모두베기 등 복합 방제를 실행하여 2010년에는 181천본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잦은 강우 등으로 매개충 밀도가 증가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대처하고,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는 등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제를 추진하였다.

〈표 4-22〉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향후계획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과 활발한 국제교류로 꽃매미, 아시아매미나방 등 새로운 산림 병해충이 빈발하고, 기존의 일반 병해충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타 지역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병해충별 생활사를 적용한 맞춤형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고, 임업적 방제를 통한 피해지의 환경을 병해충 발생 및 증식에 불리하게 조성함은 물론 피해 확산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방법을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제하는 사후방제에서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다. 병해충에 취약한 소나무림에 대한 재해 저감 등 임업적 방제 확대,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등 나무주사 실행 전 강도의 슈아베기를 실시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숲으로 만드는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하여 신속한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방제 작업 시 천공기 등 기계장비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존함을 감안하여 방제작업 착수 전 필히 안전교육과 작업요령 시연 등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사무관 김영환

▣ 시행배경

우리나라는 과거 황폐된 산림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녹화시켰으며, 이러한 산림녹화를 성공하게 된 이면에는 사방사업이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산림은 녹화되었으나 국토의 지형·지질적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토양은 화강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이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인해 재해발생 패턴이 대형화, 빈발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생활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피해 규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사방사업은 최적의 국가 방재시설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사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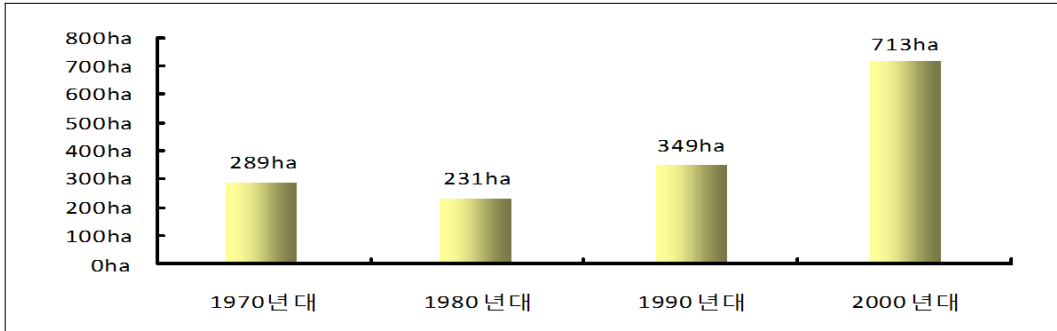
최근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계절성 집중호우 및 태풍이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에 231ha이었던 것이 2000년대에는 무려 713ha가 발생되어 급격히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산사태의 유형을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다량 발생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산사태는 천재지변이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복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 산사태의 예방·대응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재, 과학적인 대응시스템 미흡, 현장 중심의 실무자 대응 역량 강화기반 미흡 등 전반적으로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구 위주의 정책에서 사전 예방·대응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에 2011년에는 「산림보호법」개정을 통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산사태 예방 지원본부 구성·운영, 산사태대응팀 설치,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의 전달체계, 강우분석 등을 정밀화 할 수 있는 산사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23〉 산사태 발생현황



또한 사방사업은 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계류지역에 사방시설물을 계통적으로 시설하였다. 그 결과 사방댐 775개소, 산지보전 79ha, 산사태예방 42ha, 계류보전 124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 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3개소에 대해 시범실시한데 이어 2011년까지 총 84개소를 시공하였다.

〈표 4-24〉 그동안 주요 사방사업 시행 실적(2011년까지)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사업	해안방재림조성	해안침식방지
4,854km	5,054개소	84개소	59ha	61km

▣ 향후계획

사방시설은 도시생활권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 방지를 위하여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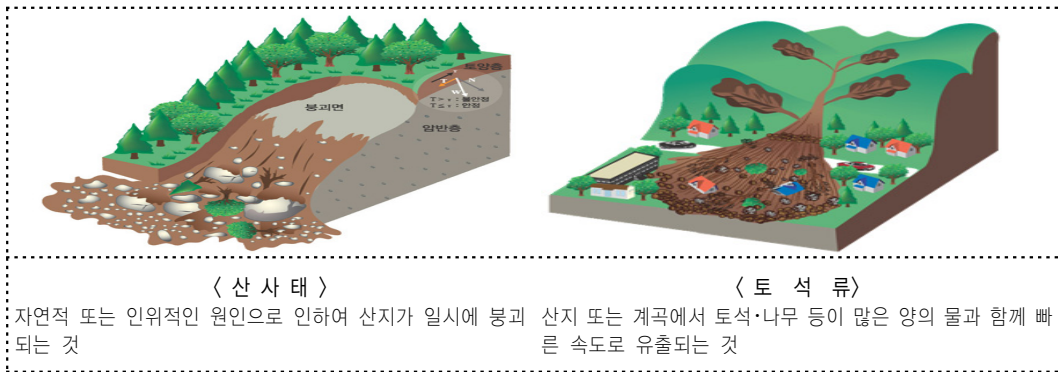
-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산사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고려, 적극적 대응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법적 기반에 따른 실천계획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산사태 대응을 위한 산림청 내 산사태방지과 신설 등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 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강화

산사태(토석류)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단계적(인명피해 우려지역, 재산피해 우려지역, 기타 피해지역)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산사태 예측(위험)정보 제공,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최우선 시행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8〉 산사태와 토석류



- 산사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산사태 예측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강우분석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의 기준우량 적용에서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5km격자)로 개편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우량을 적용하였던 위험예보도 강우량과 지질을 고려한 전국 10개 권역으로 우량지수를 차등 적용토록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 전달체계도 MMS, 유선·팩스, TV 자막 등 실시간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전송대상도 재난부서 및 기관장을 포함한 인원을 확대하는 등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추진하여 정밀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역량 강화

산사태 담당자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산사태 전문교육 실시, 산사태 예방·대응 실무매뉴얼 개발·보급,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산사태 관련 범국민 홍보 강화 등 취약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전국 황폐지 실태조사 결과 사방댐은 약 19.6천개소, 계류보전은 14천km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사방댐 26%, 계류보전 35%에 불과하여 향후 15년간 매년 사방댐 1,000개소, 계류보전 600km이상 규모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표 4-25〉 일반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계획

구 분	목 표	실 적	잔 량	연도별 추진계획			
				2012	2013	2014~2016	2017~
일반사방댐(개)	19,674	5,054	14,620	695	1,000	3,000	9,925
계류보전(km)	14,015	4,854	9,161	416	600	1,800	6,345

▣ 시행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보전·확보·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자생 식물자원의 보존과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생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최근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식물이 곧 자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청은 21세기 생물자원 확보 경쟁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자생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수목원 조성 및 육성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국부의 척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생물 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보전·이용 및 자원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을 적극 진흥 및 조성·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2001년 9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가 확립되는 등 수목원 조성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9년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감소하고 있는 고산식물 등의 안정적 확보

를 위해 경북 봉화군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을 시작하였다. 수목원은 2011년에 국·공립수목원 43개소, 사립수목원 16개소, 학교 수목원 3개소 등 총 62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표 4-26〉 수목원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연 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62	38	3	2	7	5	7
국립수목원	2	1			1		
공립수목원	41	22	1	2	6	4	6
사립수목원	16	12	2			1	1
학교수목원	3	3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국·공립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분야 역사서적 및 전통 산림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산림사료에 대한 전시시설과 식물·곤충·수석·화석·석엽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관, 각종 산림 관련 기록물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존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11년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재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천, 공주, 순창, 진주, 대구, 안동, 청원, 오산, 완도, 아산, 여주, 영광 등 총 13개소에 건립·개관 중에 있다.

〈표 4-27〉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산림박물관 건립	13	10	1	-	1	1	-

●●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림파괴 등으로 매년 열대우림 생물의 0.5% 상당이 멸종되고 있다. 세계 자원연구소(WRI)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전체 생물의 약 33%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종 감소로 자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생 식물자원 보존은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 측면을 벗어나 자생지조사 및 보존·증식·복원 등 보다 능동적인 보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특산 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 위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쟁력있는 숲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산림 식물자원의 자생지 내 보전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들의 현지 내 보존·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라생태숲 등 총 44개소의 생태숲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4-28〉 생태숲 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태숲 조성	44	20	5	7	5	4	3

▣ 향후계획

●● 수목원 조성 및 육성

국내 수목원은 식물종 보유 수량 및 특성화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 조성된 수목원을 특성화, 내실화한 보완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증식·보존·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 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목원이 위치한 권역별 특성, 중점 식물 수집종 및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조성된 각 수목원의 특성화,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에 온대중부권역의 향토 식물자원의 보존·증식·연구 및 도심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박물관을 국·공립 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 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기 조성된 산림박물관을 특성화, 내실화할 계획이다.

●●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를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 식물을 현지 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마.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 이종갑

▣ 시행배경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1/8수준이며,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강수 총량의 65%가 최상류 수원인 산림지역에 내리지만 산림내 저장량은 14%에 불과하여 홍수, 가뭄,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수자원 저장량 확대를 위한 녹색댐 기능제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4대강 살리기 추진계획에 따라 용수 개발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 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 기능 및 수질정화 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매년 추진하였다.

녹색댐 기능 제고를 위한 수원함양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임지 여건에 따라 침엽수 인공림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복층림, 혼효림으로 유도하였고 불량한 천연림에 대해서는 천연림보육과 개량사업을 실행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천연림으로 유도하여 수원함양 기능과 산사태 방지 기능을 높였다.

또한 산림청은 200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38개 댐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통해 녹색댐으로 조성하는 '녹색댐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29개댐 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녹색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표 4-29〉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숲가꾸기 대상댐	합계 (개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사업 착수	비고
탐진댐, 대곡댐	2	'02년	'02년	'03년	시범
안동댐, 임하댐, 소양강댐, 황성댐, 달방댐, 광동댐, 부안댐, 보령댐	8	'05년	'06년	'06년	-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 대청댐, 용담댐, 섬진강댐	8	'06년	'07년	'07년	-
밀양댐, 충주댐, 연초댐, 구천댐, 수어댐	5	'07년	'08년	'08년	-
주암댐, 주암조절지댐, 합천댐, 남강댐, 운문댐	5	'08년	'09년	'09년	-
충주댐	1	'09년~'11년	'10년~'12년	'10년~'12년	
기타 신규댐(12개)	11	'12년이후	'13년이후	'13년이후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향후계획

2012년에는 댐유역 숲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충주댐 충북·경북유역 등 39천ha의 숲을 가꾸어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유역 가시권 산림의 경관 개선을 위한 덩굴류 제거와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림 4-9〉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

① 홍수조절기능		o 나지 대비 홍수기에 28.4톤/일 · ha 더 머금음
② 갈수완화기능		o 불량림 대비 갈수기에 2.5톤/일 · ha 더 흘려보냄
③ 수질정화기능		o 질소 14.3ppm의 물을 1.7ppm으로 정화

바.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사무관 김학송

▣ 시행배경

국유림을 대부(貸付)하는 행위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빌려 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빌려주는 것으로, 이를 법률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행위라고 한다.

행정재산인 요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국유림의 대부행위와는 구분된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대부·사용허가 실적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현황은 2011년 말 현재 8,894건, 54,715ha로, 이는 2010년 대비 건수는 317건이 증가되고, 면적은 1,694ha가 감소된 것이다. 전체 건수는 전년도 대비 공용·공공용도 등의 사용허가에 따라 증가되었으나 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가 직영 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림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 지역 내 입목을 매수하여 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것이다.

〈표 4-30〉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현황

(단위 : ha)

구분 연도	합계		대부		사용허가		분수림(조림대부지 포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9년	8,562	59,005	3,524	7,129	4,605	24,257	433	27,619
'10년	8,577	56,409	3,469	6,989	4,761	23,794	347	25,626
'11년	8,894	54,715	3,521	6,374	5,083	24,295	290	24,046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중단, 타 용도 사용 등으로 대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지를 관리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는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894건 중 87.9%에 해당하는 2,543건이 ‘양호’, 214건(7.4%)은 ‘경고’, 137건(4.7%)은 ‘불량’ 판정을 한 후 ‘경고’와 ‘불량’ 판정을 받은 대부지 등은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대부지 등은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8건)한 바 있다.

〈표 4-31〉 국유림 실태조사 결과

(단위 : ha)

구분 연도	합계		양호		경고		불량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9년	2,833	32,640	2,425	26,702	250	4,448	158	1,490	취소 : 5
'10년	2,717	24,495	2,481	21,059	105	684	131	2,752	취소 : 11
'11년	2,894	29,216	2,543	14,823	214	13,811	137	582	취소 : 8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 향후계획

과도한 산지 전용을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광업, 스키장 등의 용도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 및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지 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 및 사용 허가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대부 및 사용 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2010년 7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유림을 활용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요존국유림에서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용수 종류 또는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사.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사무관 박영주

▣ 시행배경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이 곳은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 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4-3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구분	계	%	핵심구역	%	완충구역	%
면적(ha)	263,427	100	169,950	65	93,477	35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에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06년~'15년)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요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기존자료 분석과 현장분석을 통해 자연생태계 및 인문사회 자원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들 조사자료를 토대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향후 국토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백두대간 종합 정보시스

템 수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263천ha로,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 684km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백두대간 자원의 변화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물리적 환경, 동·식물상, 식생 등 자연환경, 산림자원,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것이다.

〈표 4-33〉 백두대간 보호지역 2단계 자원실태조사 현황

연 차	1연차('11년)	2연차('12년)	3연차('13년)	4연차('14년)	5연차('15년)
권 역 별	설악산권역 (향로봉~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보은~무주)	지리산권역 (거창~지리산)
조사거리	100km	157km	172km	154km	10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1단계('06년~'10년) 실태조사가 2010년 완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자원실태조사 2단계 1년차로 2006년 실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조사로, 설악산 권역 100km 구간인 강원도 고성군·속초시·양양군·인제군·홍천군 등 5개 시·군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64,333ha(핵심구역 51,887, 완충구역 12,466)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는 2년차로 태백산 권역(강릉~태백) 157km구간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 남한지역 정맥 자원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관리정책을 확대하여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의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과 생태적, 지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남한지역 정맥의 실태조사는 정맥의 보전·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가지친 큰 산줄기로서 백두대간과의 연계 생태축이고, 백두대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녹색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맥에 대한 명확한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산림훼손 압박에 노출되어 있다. 국토의 주요 생태축으로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남한지역 정맥 6개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생태적,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토의 중요 생태축이자 지역적으로 충청도를 대표하며 중요한 산줄기와 물줄기를 차지하는 중요 요충지에 대한 정밀한 자원실태조사 분석과 공간적 범위의 규명을 통해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현명한 관리방안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는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진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2개 시·도, 17개 시·군·구에 걸친 413.82km 구간에서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낙남정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34〉 남한지역 6대 정맥 자원실태조사 현황 및 계획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권역별	낙동정맥 매봉산(태백)~ 봉화산(부산)	호남정맥 영취봉(장수)~ 장계산(광양)	금북정맥 속리산(보은)~ 안흥진(태안)	낙남정맥 옥산(하동)~ 봉화산(김해)	한남·금강정맥 ·칠장산(안성~문수산(김포) ·조약봉(진안)~장계산(부여)
조사거리	418.4km	514.2km	413.82km	193km	311km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추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와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인문지리·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시설로 구성되며, 국민 홍보·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에 각 1개소씩 백두대간 보호 1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모두 6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시작하여 충청북도 괴산군에 2009년 10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개관 하였고, 2009년에는 경상북도 상주시의 폐교부지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 2011년 초에 개관하였으며, 2011년에는 강원도 양양, 전라북도 남원에 기본설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조성·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사업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2007년 백두대간 마루금지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의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에 위치한 고랭지 밭은 자연경관 훼손과 유기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 살포로 백두대간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 및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고랭지밭의 생태적 관리방안으로 백두대간 경작지 중 매도 희망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사유토지 등을 매수하여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기 설치 관리방안은 신규 훼손이 수반되는 곳은 개발행위 사전 협의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설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신청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발행위 사전협의 세부기준에 따라 엄격한 사전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이 아닌 해안지역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 지역은 자연생태계의 핵심축과 산림자원의 보고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을 지형, 식생, 인공구조물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복원모델 개발이 완료되었다. 복원 모델 주요 내용은 훼손지 복원방향 수립, 생태적 특성 평가, 복원 모델 개발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이다. 훼손된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2006년 3ha, 2007년 3ha, 2008년 10ha, 2009년 5ha, 2010년 10ha, 2011년 11ha 등 총 42ha를 복원 완료하였다. 2012년에는 17ha에 대하여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전북 장수 육십령 외 3개소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유토지 매수 추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005년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2011년말 현재 31,658ha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보

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 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결된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안의 사유토지 매수는 토지소유자의 매도 희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너무 높고, 현지 토지 소유자의 매도 불응과 토지 소유자가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인 경우가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격차가 크지 않은 토지나 현지인 소유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5〉 백두대간 보호지역¹⁾ 사유지 매수 현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연도	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1,857	11,348	76,399	267	2,362	12,014	1,590	8,986	64,385
2005	248	2,393	10,660	55	364	1,350	193	2,029	9,310
2006	468	3,397	14,189	108	566	2,459	360	2,831	11,730
2007	276	1,292	7,742	31	164	1,439	245	1,128	6,303
2008	157	1,296	6,862	20	106	666	137	1,190	6,196
2009	190	1,316	9,521	18	467	2,420	172	849	7,101
2010	518	1,654	27,425	35	695	3,680	483	959	23,745
2011	153	1,342	8,399	25	518	3,353	128	824	5,046

주 : 1) 보호지역 밖은 보호지역 연결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임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사유토지의 적극적인 매수를 위해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을 개정('08.9.19)하였다. 또한 토지위의 정착 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09.3.5)하여 2008년 기준 매수실적(1,296ha) 대비 2009년~2011년까지 매년 평균 1,473ha를 매수하여 1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수한 사유토지 중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은 2008년, 2010년 폐시설물 철거 및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복원사업을 통하여 백두대간 생태계의 조기 회복과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

백두대간의 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 정책추진에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백두대간의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백두대간 주민을 백두대간을 지키고 백두대간과 함께 살아가는 백두대간 보호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백두대간 주민이 백두대간의 보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의 농림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해 온 결과 주민의 임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 실시한 주민 소득사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주민 만족도가 82.7점, 2010년에는 88.6점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38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도 5,93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 기준 지원사업 유형별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은 안정을 이루며, 점차적으로 임산물 가공분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4-36〉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 연 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47,601	7,200	11,473	10,697	9,600	8,631	6,616	8,620
저온저장고	13,317	1,530	2,654	2,821	3,359	2,953	1,306	2,200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1,153	3,430	3,220	2,123	844	1,536	1,553	969
생산기반 조성(가공)	6,832	1,110	2,097	1,797	1,105	723	322	1,751
산채재배시설	7,036	718	1,535	1,194	2,482	1,107	728	969
농림소득장비(관수)	2,356	-	437	123	524	1,272	871	99
표고재배시설	3,307	412	959	1,205	403	328	346	240
임산물직판장·집하장	3,600	-	571	1,434	883	712	1,490	2,393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 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11년 까지 28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6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벌채를 유보한 소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표 4-37〉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	288	53	63	49	63	60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 향후계획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는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야와 대상 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산림자원의 변화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조사된 자료의 DB화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과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의 2단계로 2013년 조사대상지는 속리산 권역(봉화~문경) 172km 구간을 조사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산림 생태계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한지역 정맥조사는 백두대간 상 남한지역 정맥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원실태, 생태적 가치 및 훼손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 남한지역 8개 정맥에 대해 5년간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각 정맥에 대한 생태적 가치 분석과 인문적, 휴양적 가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정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정맥 보전의 기본방향 및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남한지역 전체 정맥에 대한 통합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자료의 분석과 식생, 동·식물상, 훼손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낙동정맥 418.4km, 2010년에는 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 포함) 514.2km에 이어 2011년 금북정맥 413.82km, 2012년 낙남정맥(193km), 2013년 한남·금남정맥(311km)에 대한 자원실태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백두대간 지역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의 홍보 및 체험을 통한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청소년 생태체험 교육 등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6개 도에 2015년까지 모두 6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백두대간 훼손지에 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2010년 공간정보 구축 결과, 전체 3,197ha(302개소) 중 농경지가 829ha(162개소)로 30%를 차지했으며, 대규모 개발단지 25%(818ha, 8개소), 도로 14%(455ha, 6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태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폐군사시설, 폐광산, 고랭지 경작지 등에 대하여 주변 식생 및 경관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복원·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이 통과하는 백두대간 마루금지역 중 현재 단절되어 복원을 필요로 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반도 남북을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연결 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 및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증진을 도모하여 산림재해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산림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 생태계의 고유 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사유토지 매수는 2005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지역 특성과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다.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보호지역에 둘러싸인 사유지와 개발 목적이 완료된 사유지, 보호지역과 연결된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 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 60,000ha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나 사유림 매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 소유자(사유림)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으로 산림 소유자의 불만 해소와 백두대간의 생태 및 자연경관 등의 보호로 자연환경과 경관의 자원화 도모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격차 해소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가.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함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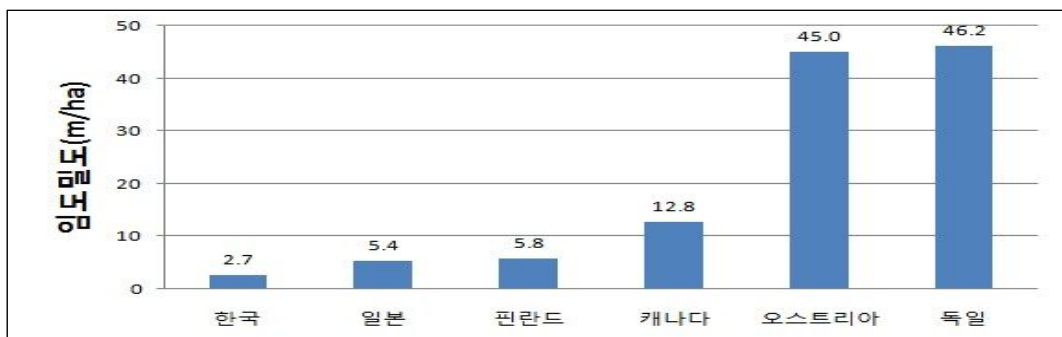
▣ 시행배경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림·숲가꾸기·임목 생산 등 산림경영·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이나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책·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국민보건 휴양과 산악스포츠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내 임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1년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7,145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임도밀도는 2.7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4-38〉 외국과의 임도밀도 비교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산림사업 물량의 확대와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등 목재 생산량 증가로 임도 시설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39〉 임도시설 기본계획(요약)

구 분		계 획		2010년까지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누 계
		계	민유임도				
사업량 (km)	계	16,572	5,779	16,572	5,779	9,190	31,541
	국유임도	4,842	1,478	4,842	1,478	2,130	8,450
	민유임도	11,730	4,301	11,730	4,301	7,060	23,091
사업비 (억원)	계	10,608	8,672	10,608	8,672	13,934	33,214
	국유임도	2,444	2,006	2,444	2,006	3,082	7,532
	민유임도	8,164	6,666	8,164	6,666	10,852	26,132
ha당밀도(m)		2.60	3.50	2.60	3.50	5.00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향후계획

임도망 구축은 제3차 간선 임도 설치계획에 따른 간선 임도와 목재 생산 등 산림사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임도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기존에 시설된 임도 중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구조적으로 이용이 불편한 노선은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자연적인 임도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풍수해에 의한 임도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를 이용한 휴양·여가·레포츠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도를 시설·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임도시설 계획은 <표 4-40>과 같다.

〈표 4-40〉 2012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획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664 (700)	155,716	119,792	23,949	11,975	()내는 구조개량
국 유 임 도	210 (100)	35,968	35,968	-	-	간선임도 75km 작업임도 135km
민유임도(보조)	454 (600)	119,748	83,824	23,949	11,975	간선임도 275km 작업임도 179km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간선 임도는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경영상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유림간 및 지자체간의 연계성 등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따라 임도망을 구축한다. 작업 임도는 일정한 유역을 경계로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최소 규격의 임도를 개설하여 저비용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도모하여 산림경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공조림지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 낮은 단비(73백만원/km)로 설치한 임도의 경우 일부는 재해발생 위험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같은 기존 임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해 방지 및 경관 유지를 위하여 구조개량을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로 만드는 등 유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표 4-41〉 구조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km)

구 분	임도시설 현황	총대상 물량	구조개량사업 실적					2012 이후	
			소 계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계	17,145	11,855	10,079	7,979	583	490	540	487	1,776
국유임도	5,126	2,758	1,994	1,565	102	90	132	105	764
민유임도	12,019	9,097	8,085	6,414	481	400	408	382	1,01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나. 임업 기계화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김종세

▣ 시행배경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 생산성 향상, 벌채작업 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 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사업의 경험부족 및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 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

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 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 기계화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임업 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하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8개 시·군)을 통한 기계화 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임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기계수(Operator) 양성 등 임업 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임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29,989대로, 지방산림청이 4,368대(15%), 지방자치단체가 17,068대(57%), 산림조합이 8,553대(28%)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업기계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계화 산물 수집의 사유림 확산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도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트랙터집재기 등 산물 수집 기계장비의 세트화 보급 및 기계화 영림단을 1개단씩 양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계화 산물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4-42〉 임업 기계장비 보유현황(2011년)

장비 구분	계(대)	지방청(대)	시·도(대)	산림조합(대)
계	29,989	4,368	17,068	8,553
임 도	427	92	59	276
임목생산	11,844	1,827	6,919	3,098
조림·육림	5,975	913	3,319	1,743
목재가공	1,042	105	602	335
산림보호	7,709	873	4,841	1,995
양 묘	990	184	506	300
행 정	2,002	374	822	806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표 4-43〉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 및 보유장비 현황

설치년도	기관명	소재지	보유장비
계	9개소		216대
2001	임업기능인훈련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타워야더외 8종 13대
2002	임업기술훈련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타워야더외 7종 11대
2003	임업기계훈련원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타워야더외 9종 11대
2003	순천시 산림조합	전남 순천시 연향동	타워야더외 8종 32대
2004	평창군 산림조합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HAM200외 6종 18대
2005	청주청원산림조합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북부집재기외 7종 29대
2006	산청군 산림조합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타워야더외 11종 74대
2009	남부지방산림청		타워야더외 8종 20대
2010	북부지방산림청		타워야더외 7종 8대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표 4-4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현황

(단위 : %, 백만원)

연도 센터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가동률	수수료
계	24.6	538	42.1	526	45.2	748	48.3	637	51.2	645
기능인	20.2	55	44.3	92	30.6	154	42.4	116	49.7	46
기술	25.3	91	30.7	52	43.9	86	45.5	54	54.9	83
기계	57.7	161	65.4	91	75.9	122	65.7	113	57.3	99
순천	21.7	87	44.1	59	62.9	150	60.3	119	50.7	111
평창	13.3	17	19.9	53	50.9	96	39.4	66	39.8	58
청주청원	16.6	55	40.0	89	18.6	51	30.8	84	26.8	74
산청	27.5	72	53.4	90	55.3	89	45.2	85	70.4	174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임업기계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 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 임업기계 대여 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산주가 임업 기계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지, 임업신문 등의 전문지 및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 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종을 2001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4-45〉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① 임업용 동력천공기, ② 임업용 약제주입기, ③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포함한다), ④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 단기를 포함한다), ⑤ 임업용원차, ⑥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⑦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⑧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⑨ 타워야더, ⑩ 포워더, ⑪ 목재파쇄기, ⑫ 톱밥제조기, ⑬ 동력임내차, ⑭ 밤수집기, ⑮ 자동지타기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또한 200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면세 석유류 공급량을 전년 대비 13% 이상 확대(4,269kl)하였다.

〈표 4-46〉 임업용 면세석유류 공급현황

(단위 : kl)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 고
계	2,812	2,524	3,522	3,522	4,269	
휘발유	2,532	2,264	3,240	3,240	3,837	
경 유	280	260	282	282	432	
윤활유	-	-	-	-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향후계획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능인영림단 교육훈련 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소별로 기계화 영림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으로 58단 695명의 기계화 영림단을 구성하여 산림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기계수(Operator)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 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노동부담과 생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위해서는 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화 산물 수집의 도입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임업 기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능인 영림단에서는 기계가 없으면 임목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숲을 잘 가꾸고 자연친화적인 임목 생산을 위해서 임업 기계화의 가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자 한다.

다.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김종세

▣ 시행배경

우리나라의 산림은 산림면적 비율로 약 53%가 Ⅱ~Ⅲ 영급에 속해 있다. 또한 I 영급까지 포함하면 약 59% 정도가 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면적에 대해 숲가꾸기 작업을 해 주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량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산림사업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임업 기능인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산림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임업 기능인 양성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기능인 영림단은 1984년에 국유림 산림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족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민유림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산림조합 소속 기능인 영림단이 구성되었고, 2000년에는 산림사업법인에서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여 활발하게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 기능인력은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서 2017년까지 20,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2011년까지 1,022단 8,859명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4-47〉 최근 3년간 임업기능인 영림단 조직현황

구 분	연 도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단수	인원(명)
계		837	7,941	911	8,226	1,022	8,859
국유림 영림단		143	1,854	139	1,686	141	1,619
산림조합 영림단		392	4,275	396	4,284	392	4,306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302	1,812	376	2,256	489	2,934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임업노동력 확보 및 후생복지

임업 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 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 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개단 240명의 영림단이 신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설 영림단에 대하여는 직업인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을 통해 임업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기계톱 등 산림사업 장비 1,647점(170백만원)을 신규 영림단에 지원하였다.

신규로 양성된 임업 기능인에 대하여는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 및 현장 위주의 체험식 적응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업 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 시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계속 증가하던 임업분야 재해율이 최초로 감소되었다.

아울러 전문 직업인으로서 임업 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능인 영림단에게 충분한 작업물량을 확보하고 시기별로 적정 배분토록 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임업 기능인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 기능인 교육에 참여하는 영림단원 1,00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육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국유림 영림단에게 조림·숲가꾸기·벌채사업 등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향후계획

산림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에는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산촌 인력 감소가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노동인력의 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산림사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제5차 산림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 및 체계화 등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산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입도시설의 확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 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효율적인 산림

사업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업 기능인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험식 교육 훈련, 기술수준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라.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관 김원수

▣ 시행배경

임업의 장기성(40~60년) 및 저수익성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말 임산물 총 생산액 5조 8,373억원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2조 8,489억원으로, 임산물 총 생산액의 49%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 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표 4-48〉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기임산물 생산액	15,467	17,081	18,328	19,267	19,849	20,090	21,464	26,576	28,489

▣ 시행내용 및 성과

●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엽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 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을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경수·분재 토양개량, 산양삼 이력제 지원, 친환경 밤 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생산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생산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 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생산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4-49〉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장뇌	수액
주생산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 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 복합경영 사업지 350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림 복합경영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지를 산림소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소 4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4-50〉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계		2008년까지		2009		2010		2011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산림복합경영		350	15,882	248	13,661	40	872	38	8820	24	529

청정 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 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에는 19개 단지에 대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 관상자원과 최근 청정 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대책 추진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11년, 39품목)하였으며, 2014년까지 꽃송이버섯, 산마늘, 목이버섯 등 61품목에 대해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0.2.4)하여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였고, 생산 적합성 조사, 생산 신고, 생산과정의 확인, 품질검사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2011년 7월 25일에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산양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 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를 추진하여 양양송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또한 임산물 명품화를 위해 2011년 14품목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향후계획

단기 임산물 소득원화 정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한-중 FTA 등에 대비 생산시설의 현대화, 집단화, 단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한편 단기소득 임산물 및 산지 약용식물 등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 국산재 이용 촉진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이준산

▣ 시행배경

그 동안 지속적인 국산재 공급 확대 노력으로 국내 목재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1년 목재 자급률은 15.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 목재 소요량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는 원목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 원유 및 운임비 상승, 자국 원자재 보호 등으로 수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원목보다 목재 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별기령에 도달한 주벌 임지의 부족, 대부분의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시기적 집중화 문제, 목재 신수요 증대(목재펠릿, 에너지용, 한옥 등)로 목재 산업체는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 목재는 대부분 간벌 소경재로, 섬유판, 펄프·칩 등 산업용재, 표고자목, 톱밥 등 농·임업용 자재, 루바·몰딩재 등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산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수입산 목재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목재 고부가 가치화 및 임도 시설 확충, 임업 기계화 등 산림 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산 목재 경쟁력을 증대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목재산업의 구조는 제재목 등과 같은 고급재의 용도는 건축 경기 등의 위축으로 감소하는 반면, 저급재 용도는 바이오에너지용 등의 수요 급증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목재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목 부산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비하고 웰빙, 국민건강 증진, 임분 구조개선과 목재산업 육성, 목재문화 확산, 다변화하는 용도별 목재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 수입 목재를 포함한 총 목재 수급량은 27,608천m³으로, 이 중 국산재는 2010년 대비 13.3% 증가한 4,210천m³를 공급하여 국산재 자급률은 15.2%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다. 특히 당초 용도별 공급 목표량의 111%인 4,668천m³를 공급하여 국내 산업용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4-51〉 2011년 목재 수급실적

(단위 : 천m³)

수요	공급	합 계			국내재 (원목)	수입재			자급율(%)	
		합계	원목	제품		소계	원목	제품	원목	총목재
계		27,608	8,240	19,368	4,210	23,398	4,030	19,368	51.1	15.2
제 재 용		5,533	4,024	1,509	505	5,028	3,519	1,509	12.5	9.1
합·단판용		2,782	450	2,332	-	2,782	450	2,332	0.0	0.0
펄프·칩용		12,563	1,022	11,541	1,022	11,541	-	11,541	100.0	8.1
보 드 용		3,201	1,705	1,496	1,644	1,557	61	1,496	96.4	51.4
갱 목 용		32	32	-	32	-	-	-	100.0	100.0
기 타		3,497	1,007	2,490	1,007	2,490	-	2,490	100.0	28.8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또한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목재유통·저장센터 8개소(중앙회 2, 국유림 6) 및 목재집하장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동해에 설치된 목재유통센터는 각각 낙엽송과 소나무를 주원료로, 원주재, 내장재, 판재 및 각재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직거래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목조주택, 건조·방부목 등 목제품 개발·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목재를 용벽, 목재 가드레일, 테크로드 등 친환경 국산재를 활용한 토목사업과 한옥 시범사업(3개소)으로 9억원을 들여 지방청 국유림에 설치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가 공시설 보안을 위해 5억원을 지원하였다. 목 가공시설 지원 4억원, 보드류 시설 현대화 지원 40억원, 유통센터 원료 구입 30억원, 국산 원자재 구입자금 50억원,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자금 40억원 등 총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에서 국산 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제품(HWP¹³)이 탄소계정에 포함되고 국내 임목 축적량 증가와 함께 목재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

13) HWP(Harvested Wood Products) : 산림에서 수확되고 산림 밖으로 운송되어 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목재 기반 물질

진흥을 위한 5개년('12년~'16년) 종합계획을 수립('11.12)하였다.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②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③목제품 이용 활성화 ④목재산업 진흥 기반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개 정책과제와 50개의 세부 단위과제를 마련하였다.

세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수변지역 등 비 산림지역에 포플러류의 속성수를 재배하여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목재에너지림 및 산업용재림을 조성하여 유휴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림 내 잔가지·지엽·후동목 등 임목 부산물 75,000톤을 수집·자원화 한다. 또한 녹화는 되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 갱신 60,000ha, 원활한 목재 생산을 위한 임도 밀도를 현행 ha당 2.6m에서 3.7m로 확충하는 등 국산재 생산을 확대하여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목재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향후계획

앞으로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 목재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국산 목재 공급량을 106% 늘여 445만m³를 공급, 자급률을 1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산업용재 적기 공급을 위해 용도별 목재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산 낙엽송 및 리기다소나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예산으로 8억원을 확보하여 국산재 이용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산 원자재 및 원료 구입 50억원, 목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4억원 등 총 16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훼손을 줄이고 지속적인 목재 공급이 가능토록 벌채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 벌채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임목 수확지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임업 기계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임목 수확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에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993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원자재 구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용자금리를 5.5%에서 4%로 인하하였고, 2007년부터는 목재관련 용자지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주로 국산재를 이용하는 분야(목가공 시설, 보드류

시설, 국산재 구입, 폐목재 구입)에 대하여 164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관련 행사도 적극 지원하여 목재의 우수성과 목재의 활용사례를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목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재 이용 캠페인, 목조건축 세미나, 목재 교실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바. 목재 재활용 촉진 기반 조성

▮ 산림청 목재생산과 사무관 이준산

▣ 시행배경

지속적인 국산 목재의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임목 벌채 감소, 자국 원재료 보호 등으로 인한 수입 여건이 악화되어 원목 및 제재 부산물이 감소하였다. 임목 부산물, 사업장 또는 건설 폐목재는 파티클 보드의 원료, 열병합발전소 등의 목질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며, 양질의 폐목재는 톱밥으로 가공하여 목재 펠릿 등 산림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하여 목질 자원은 순환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폐목재 감소와 수입 목재 감소 등에 따른 제재 부산물 감소로 인한 보드업계와 에너지용 바이오매스 간의 원자재 경합으로 산업용 원료의 부족난이 심각하여 목재 재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섬유판, 파티클 보드 원료인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40억원,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자금을 40억원 규모로 지원하여 목재의 재활용 촉진을 추진하였다. 목재 이용 연장을 위한 보존처리 목재 품질인증 및 친환경 보존처리 기술개발 등을 통해 목재 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도 전년에 이어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을 40억원, 임목·목재 부산물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4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지내에 버려지는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임목 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임업 기계를 통해 수집하여 공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그 동안 경제성의 원리로 방치해 둔 임목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녹색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저급재의 원료 경합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별채지에 버려지던 임목 부산물(가지, 후동목, 지엽) 등도 자원화 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법규 정비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살기 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가.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이광호

▣ 시행배경

국토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지역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생산기반의 미비, 생활환경의 열악, 인구의 과소화 등 도시 및 농촌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전락됨에 따라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 생태마을 조성(구 산촌 종합개발사업)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 사전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모두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까지 총 2,943억원을 투자(지방비, 용자 포함)하여 204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산촌 소득수준 향상, 인구감소의 둔화, 생활의 편리 등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촌 생태마을에 각종 운영·관리업무를 지원토록 하는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2010년에 116명, 2011년에 116명을 배치·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2010년부터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수산물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예산 편성권이 이관되었다.

〈표 4-52〉 산촌생태마을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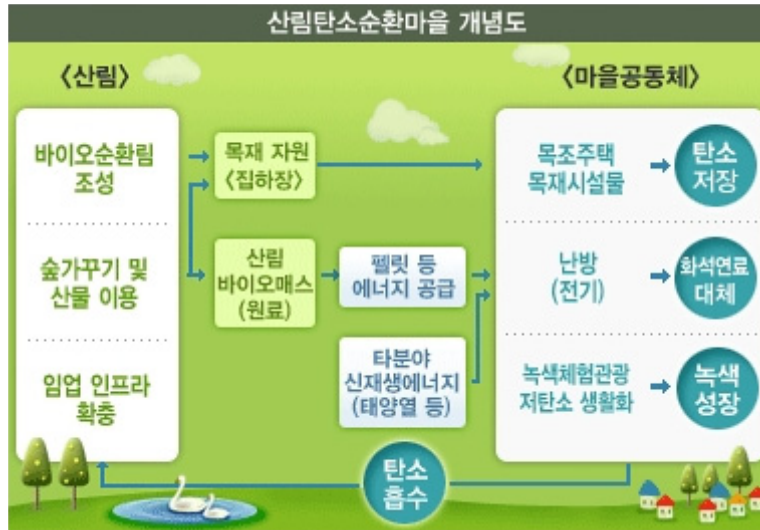
구분 \ 연도	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전설계	295	93	15	10	20	15	18	33	36	30	25
마을조성	240	47	12	34	15	10	20	15	18	33	36
투자비	339,574	85,059	24,327	26,852	16,225	20,364	25,683	29,391	31,392	35,059	45,222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 향후계획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 마을리더 및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산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와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시범 조성 중인 산림 탄소순환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4-10〉 산림탄소순환마을 개념도



나. 휴양공간 확충·서비스 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송준호

▣ 시행배경

산업화, 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등으로 급증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산림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깝고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자연휴양림은 2011년에 3개소(공유)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4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10,604만명에 이르고 있다.

〈표 4-53〉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현황(2011년)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조 성 현 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68	185,833	148	130,691
국유 자연휴양림	93	158,728	39	107,221
공유 자연휴양림	175	19,280	92	21,882
사유 자연휴양림	66	7,825	17	1,588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표 4-54〉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연 도	연 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01,464	58,841	6,264	7,627	8,691	9,437	10,604
국유 자연휴양림		30,918	16,910	2,048	2,361	2,759	3,258	3,582
공유 자연휴양림		61,461	36,166	3,718	4,749	5,191	5,356	6,281
개인 자연휴양림		9,085	5,765	498	517	741	823	741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체력 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1년에 9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6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1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 휴양시설과 2012년 조성계획 및 2017년까지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55〉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1년까지 운영	2012년 조성	2012년 이후
계	413	311	25	77
자연휴양림	180	148	21	11
산 림 욕 장	233	163	4	66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 및 휴양에 대한 관심 증 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앙단위 10년 계획인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첫째, 산림 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확립, 둘째, 자연휴양림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농·산촌 등과 연계 강화, 셋째 다양한 투자 주체를 통한 산림 휴양시설 확충, 넷째, 공·사유 산림 휴양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다섯째, 산림 휴양시설 운영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품격있는 맞춤형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 평가제도,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ISO 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휴양포털시스템 ‘숲에 On’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휴양정보, 마일지리 제공, 웹회원 마이페이지 제공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향후계획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산림 휴양수요에 맞춰 2012년에는 자연휴양림 4개소, 산림욕장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자연휴양림내 경관상으로 표현되는 하드웨어와 숲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통하여 산림휴양 정책이 산림청의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으로서 국민의 포지셔닝을 제고시키고, 한국형 산림휴양 시설의 모델을 구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다.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전덕하·권태원

▣ 시행배경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는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단체별로 유치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산림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12.7.26)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산림 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 교육시설의 설치·지정 및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의 양성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아들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하여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1년 2,692개소의 유아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약 24만명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산림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숲체험·교육의 과학적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제4회 숲유치원 국제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7.18)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다.

〈그림 4-11〉 숲유치원 홍보현황



▶ 국내 숲유치원 NHK 소개

회색도시 벗어나
대자연을 배운다



▶ 숲유치원 활동 소개



▶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등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주말산림 학교’, ‘방과후 숲교실’, ‘1校1숲 운동’ 등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2011년 초

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을 위한 대책으로 범국민적인 ‘숲으로 가자!’ 운동을 추진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수목원, 휴양림 등 산림시설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산의 날’ 행사는 제11회를 이어오면서 자치단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직접 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산림박람회, 숲올림픽아드, 우드락 페스티벌, 단풍 문화축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www.foreston.go.kr)을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산림문화휴양 포털시스템 ‘숲에On’은 국민들이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 생태마을 및 수목장림, 유·무형 산림문화자산 관련 정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즐기는 숲해설 서비스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숲에On’, 외국인을 위한 숲에On 영문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보와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자 수가 3년만에 평균 3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문화 자산의 지정·관리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산림내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산림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고,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림을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계획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숲체험원, 국가산림교육센터 등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당일·숙박형 등 유형별, 장소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화 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산림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시행배경

여가시간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보 여행을 비롯한 길 걷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공원 등 도시생활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그리 많지 않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등산로에서 이러한 수요를 일부 흡수하고 있고, 제주도 올레길이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길게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을 연결하면서 걷는 길에 대한 문화와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휴양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라마다 중장거리 도보길을 조성해 오고 있다. 산업혁명과 도시화 등의 변화를 먼저 겪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정부의 계획 하에 트레일(Trail)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걷기 열풍에 힘입어 자연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자연보도(自然步道)를 조성하였으며, 그 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트레일을 조성하고 있다.

트레일은 산책, 도보여행 등 걷는 활동을 주로 하는 여가를 위한 기반시설로, 선진 외국의 유명 트레일은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막대한 관광수입도 올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조사(한국갤럽, '10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약 40.6%인 1,500만명이 한 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증진할 수 있는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등산은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산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산행 습관, 등산관련 정보 부재 및 안전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등산로의 과다 이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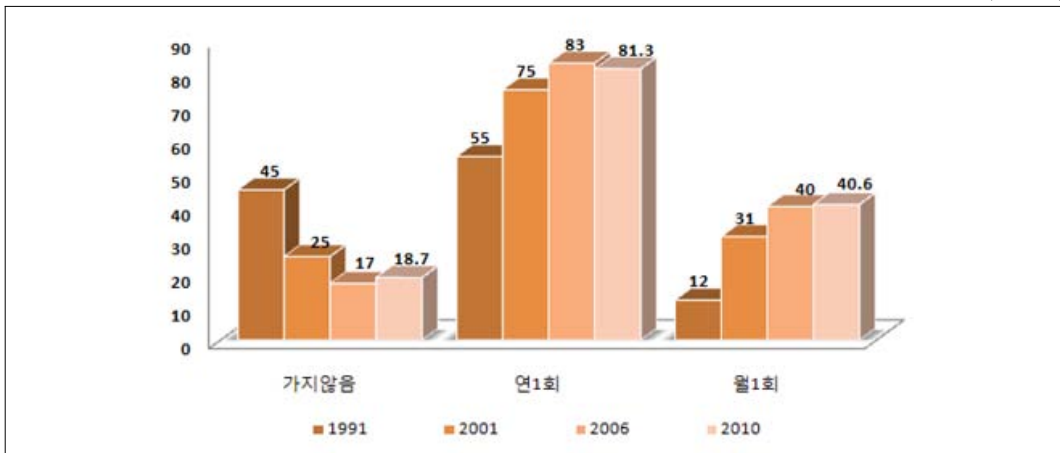
로 셋길 발생 및 등산로 주변의 훼손 증가 등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에서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행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4,440개의 산에 총 17,598km의 등산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등산로 가운데 훼손이 심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할 대상이 전체 등산로의 약 3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에서는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산행 수요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정비, 등산학교 운영, 등산로 DB 구축을 통한 등산로 정보 서비스 등 등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4-56〉 등산인구 증가추이

(단위 : %)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한국갤럽, 1991·2001·2006·2010)

〈표 4-57〉 최근 5년간 산악사고 증가 추이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조 건수	5,096	6,492	7,096	7,718	7,825
구조 인원	5,421	6,870	7,598	7,505	8,049

자료 : 소방방재청, 2012년

▣ 시행내용 및 성과

숲길정책은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산행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걷기 쉬운 다양한 길을 조성하고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숲길 중 등산로는 훼손지역을 매년 일정량 복원·정비하고, 트레킹길은 노선 선정과 연계하여 가치 있는 자원조사도 병행하게 되는데, 자연자원(명산, 유명 계곡 등), 문화자원(지역의 설화·생활상 등), 연결자원(옛길·고갯길 등), 기반자원(자연휴양림·산촌 생태마을 등)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 거리 20km 이상의 숲길에 방문자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주요 노선에는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가 등이 배치되어 다양한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며, 마을 고유의 역사·풍습,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백두대간 트레일과 DMZ 트레일 연결 지역인 인제구간을 2012년 100km를 조성하여 지리산까지 연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숲길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2년에는 숲길 기본계획('12년~'21년)에 따라 서부종단·남부횡단 트레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트레일 조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20km의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등산트레킹센터를 통하여 지역숲길 단체와 협력하여 지리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DMZ편치볼둘레길 등을 운영 관리하여 즐겁고 안전한 숲길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트레킹반, 여름캠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산행 인구에 비례하여 산악사고 증가를 차단하기 위하여 올바른 산행문화 및 산악구조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2007년부터 지리산 둘레를 따라 5개 시·군(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을 잇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 조성계획에 따라 그 첫 사업으로 2007년에 시범구간 21km, 2008년에 50km,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40km, 2011년에 63km를 조성하여 총 274km 환형의 둘레길을 2012년 5월에 통합 개통식을 하였으며, 현재 방문자 안내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은 산의 정상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밖의 산림과 마을이 어우러진 지역을 조망하며 지리산권역의 우수한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마을과 마을을 이

어주는 옛길과 고갯길 등을 복원하는 수평적 개념의 걷는 길을 가족 단위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는 길이다.

‘지리산둘레길’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의 산림생태와 문화·역사자원을 산림 휴양시설 및 등산로 등과 연계하고, 특히 지리산둘레길과 국립공원 탐방로와의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지리산권역의 통합 숲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림 4-12〉 지리산둘레길 전경



자료 : 산림청



트레킹길은 등정(登頂)이나 능선종주 등 수직적 형태의 노선은 지양하며, 가능한 임도, 옛길, 마을길 등을 발굴하여 마을과 마을을 수평적으로 잇고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성한다.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트레일과 낙동정맥 트레일, 동서를 잇는 DMZ 트레일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지역의 주요 산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보호지역은 가급적 노선에 포함되지 않게 하되, 전국에 산재한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자연부락 등을 거점지역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트레킹길을 확대·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11.3.9)되고 2011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등산로만 정의하던 것을 숲길의 종류를 확대 변경하여 등산과 트레킹, 레저스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는 길로 정의하였으며, 숲길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과 숲길 조성계획, 운영·관리,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 훈령인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령에 규정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년~'21년)」을 수립하여 숲길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3〉 5대 트레일 및 5개 명산 둘레길 구축계획(안)



5대 트레일 (계획)	'11 까지	'12	명산 둘레길 (계획)	'11 까지	'12
소 계	147	139	소 계	274	5
DMZ트레일 (600km)	46	-	지리산 (300km)	260	-
백두대간트레일 (1,840km)	-	30	한라산 (80km)	14	5
낙동정맥트레일 (600km)	101	109	설악산 (350km)	-	-
서부종단트레일 (1,200km)	-	기본계 획 수립	속리산 (250km)	-	-
남부횡단트레일 (700km)	-		덕유산 (200km)	-	-

자료 : 산림청, 2012년

등산로 분야에서는 2011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의 등산로를 조사한 결과 33,372km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대비 15,774km가 증가하였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등산로와 계획적으로 조성된 등산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숲길관리청에서 2007년부터 숲길조사 관리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등산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에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가 12,312km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6년 4,894km보다 7,418km보다 늘어난 것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4,416km를 정비하였지만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2010년에는 등산로 정비 매뉴얼을 개정·보급하여 이용자 안전과 등산 환경을 고려한 훼손 유형별 정비요령을 담아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다.

〈표 4-58〉 전국 등산로 현황(2011년)

관 리 주 체	산(개)	노선 (개)	연장거리 (km)	비고
합 계	3,368	9,797	33,372	백두대간등산로 684km (지리산 천왕봉 ~ 설악산 향로봉) ※ 관리 : 일반지역(산림청) 437km,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247km
산 림 청	307	860	4,149	
지방자치단체	3,046	8,668	27,554	
국립공원관리공단	15	269	1,669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표 4-59〉 훼손등산로 정비 실적 및 계획

구 분	총 연장	정비대상 (총연장)	정비실적(계획)					정비계획		
			계	'03년~'08년	'09년	'10년	'11년	계	'12년	'13년
사업량 (km)	총계	12,312 (33,372)	4,416	828 (-)	1,173 (779)	1,254 (790)	1,161 (790)	1,950	800	1,150
	- 백두대간 ·정맥	-	704	373	100	129	102	213	63	150
	- 산 림 서비스	-	3,712	455	1,073	1,125	1,059	1,737	737	1,000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2012년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트레킹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16km에 이르는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하였다. 그 대표적으로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연결하는 지리산둘레길 274km, 금강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중심으로 금강소나무숲길 40km, DMZ편치볼둘레길 47km를 조성하였고, 기타 한라산둘레길이 총 80km 중 19km, 낙동정맥트레일 210km를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지역숲길로 내포문화숲길, 서울둘레길, 무장애숲길 등이 연차적으로 조성 중이다.

〈표 4-60〉 트레킹길 조성실적 및 계획

연 도	합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21년
조성실적 (실적 누계)	8,097 (816)	21 (21)	50 (71)	75 (146)	244 (390)	340 (816)	332	7,035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리산둘레길을 운영함에 있어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역 숲길단체(사단법인 숲길)를 설립하고, 5개 시·군(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아우르는 공동협약을 통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립('08년)하여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과 등산 활동을 지원하는 홍보·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건전한 등산문화 보급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청소년·소외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등산교육을 2011년까지 17,01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숲길 조사업무를 하는 숲길조사 관리원 1,700명, 숲길안내 및 숲해설을 지원하는 숲길체험 지도사 504명을 고용, 숲길 업무에 투입하여 수집한 산행 정보를 토대로 100대 명산과 우리산 100을 출간하였으며, 숲길안내센터에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무분별한 산행으

로 인한 등산객의 산악사고 증가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 운영으로 189건을 구조하였다.

그리고 산림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시·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립 산악박물관을 건립을 추진 중 이다. 우리나라 대표 명산중의 하나인 설악산이 있는 도시인 속초시에 연면적 3,882㎡ 규모로 2014년까지 건립한다.

▣ 향후계획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등으로 기존의 건강 중심의 산행 활동에서 가족 중심의 체재형, 체험형 활동으로 산행문화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숲에서 생태와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주변 경관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는 복합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킹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등산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능선 종주 중심의 등산문화로 전국 유명산의 등산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압력을 분산하고 주능선 종주 및 산 정상을 찾는 수직적 등산문화를 걷기와 체험 위주의 수평적 등산문화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숲길정책의 전환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숲길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조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2011년 9월 10일 개정, 이의 시행에 근거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12년~’21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숲길의 근간은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지역 숲길을 연결하는 산림생태·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숲길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숲길을 우선 구축한다. 이 가운데 5대 트레일로 백두대간·DMZ·낙동정맥·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과 지리산·한라산·설악산·속리산·지리산둘레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전국을 하나로 잇는 기본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등산로 또한 백두대간 7개 권역, 정맥 9개 권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등산로로 지정·관리해 나갈 것이며, 특히 도시근교·마을 뒷산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에 대한 조성·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숲길의 보전적 활용 측면에서 전국적인 산림문화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숲길 주변 경관 관리, 숲길 인증제도 도입, 예약탐방제 확대, 숲길 바우처 제도 도입, 숲길의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숲길이 유지되도록 추진한다. 숲길 산행 서비스 측면

에서는 노선거리 20km 이상 숲길에 안내센터 설치, 이용자 안전을 위한 산악구조대 조직·운영,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등 이용자를 위한 산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숲에 On’ 사이트 유지관리 강화, 숲길 종류별 DB구축 등 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숲길관리청의 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 예산확보 체계 전환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한다.

숲길 기본계획은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길문화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기본계획의 목표로 첫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지속 가능한 숲길로 이용 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숲길을 지역사회 활력 증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숲길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마.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사무관 송준호

▣ 시행배경

수목장은 장묘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인공 시설물이 필요 없는 장묘방식으로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장사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묘지는 2천여만기로 국토의 1%에 해당하는 998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주택부지 면적(2,177km²)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묘지로 인한 산림 훼손 및 국토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의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문을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수목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방법이다. 수목장립이란 이러한 수목장을 하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나 실제로 수목장을 한 산림을 말한다. 이러한 수목장립 조성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의 수목장립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 수목장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5.25)으로 수목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수목장의 종류별 세부면적, 설치기준,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수목장립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산지관리법」 개정('07.7)을 통해 수목장립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를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수목장립의 허가면적 범위를 산지 일시 사용 신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0.5)하여 보다 쉽게 수목장립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유 수목장립(하늘숲 추모원) 조성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립 모델 개발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번지 일원 국유림 55ha 중 10ha에 2,009그루의 추모목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 수목장립을 조성하였다. 국유 수목장립의 주요 시설은 안내센터, 추모로, 추모광장, 수목장립 등이며, 추모목의 주요 수종은 소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등이다.

국유 수목장립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국유 수목장립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유 수목장립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공포('09.2.26)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국유 수목장립의 명칭을 '하늘숲 추모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사후 세계를 뜻하는 하늘나라의 숲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숲 추모원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위탁계약 체결 후 2009년 5월 20일 개장하였다.

●● 하늘숲 추모원 이용 만족도 조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하늘숲 추모원에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신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0.5.7~5.11)를 실시한 결과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81%가 사후에 본인도 수목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사망시 수목장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2.3%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수목장을 권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83.4%로 나타났다. 하늘숲 추모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7.7%로 나타났고, 불만족하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이나 운영관리의 공신력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숲 추모원에 수목장을 하게 된 동기는 가족이나 친지의 권유가 22.8%로 가장 많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22%,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좋은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7%로 뒤를 이었다. 수목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사후에 자연과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자연 및 국토의 훼손이 없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0.8%로 그 다음을 이었다.

●● 하늘숲 추모원 운영 성과분석

2012년 8월 현재 전체 추모목 2009그루 중 1,820본이 계약되어 90%의 계약률과 골분안치는 1,723그루(2,356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한 사람만 6만 8천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수목장림의 경우 공동목 보다는 가족목이 월등히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목의 경우 사용계약 완료시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앞선 것으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숲 추모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의 수목장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동목의 경우 분양률 제고를 위해 일부 가족목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수목장 관련 자료 발간

수목장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수목장 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정을 사진,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보는 수목장'이라는 행정 간행물을 발간('10.1)하였다. 아울러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을 발간('10.6.30)하여 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이 편람에는 수목장림 입지 선정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수목장림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해보고자 하는 민간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목장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무허가로 조성된 사설 수목장림으로부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집이라 생각된다.

▣ 향후계획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쉽게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수목장실천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수목장 실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목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수목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바.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김종근

▣ 시행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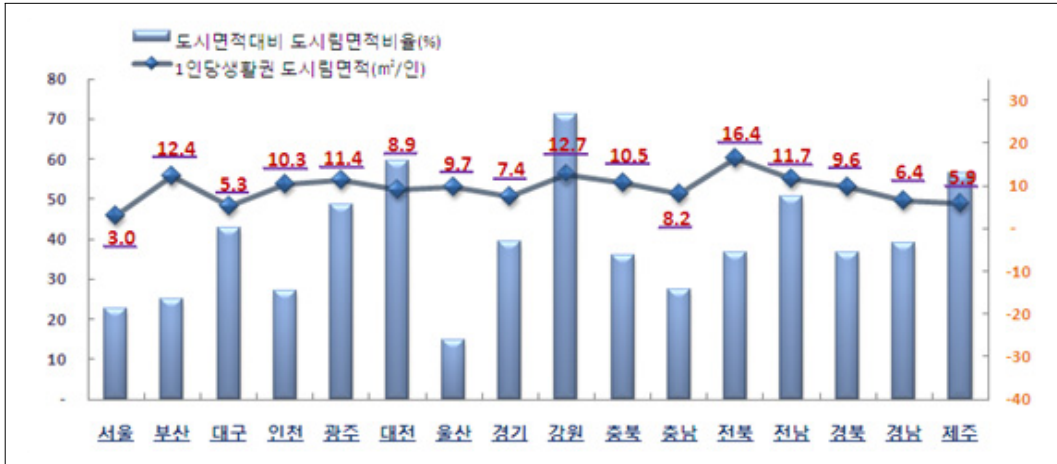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외의 경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6.78㎡로, 런던(27㎡), 뉴욕(23㎡), 파리(13㎡) 등 선진국 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웰빙문화 확산과 도시 열섬현상의 완화 등을 위한 도시녹지 요구도는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으로써 도시숲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심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녹색심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 내 녹색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숲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새로운 숲 조성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도시숲의 관리·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1〉 1인당 생활권 도시림면적(2009년 기준)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시행내용 및 성과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 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각종 개발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와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시켜야 한다.

〈표 4-62〉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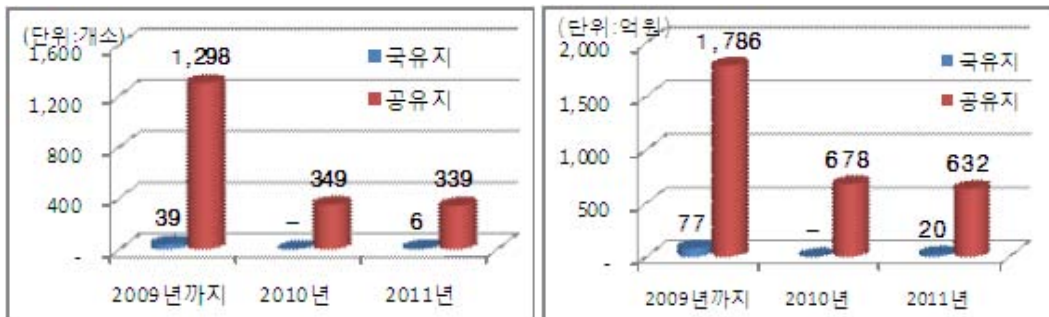
요소	형 태	종 류	기 능
핵	대규모 숲	산림, 공원 등	· 광역권 도시 경관·환경 개선 ·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 · 시민들의 당일 체재형 휴식공간
중거점	중·소규모 숲	학교숲, 녹지, 비오톱	· 근린권 도시 환경 개선 · 소형생물종의 서식처 또는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소거점	독립된 수목 또는 소규모 숲	정원수, 자투리 숲	· 직접적인 거주 환경 개선 · 생물종 휴식처 · 시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선 통로	선형의 폭과 넓이	가로수, 하천변녹지대 등	· 각 요소의 연결 요소 · 경관의 개선, 미기후의 조절 등 · 생물종의 이동통로, 생물 서식처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 외곽의 산림을 선적 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 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녹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11년까지 4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매년 사업을 지원하여 2011년까지 1,986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표 4-63〉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현황(2011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향후계획

도시숲 조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자체로 하여금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 녹지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시숲 조성 확대를 위해 산림서비스를 매수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부지마련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참여 도시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 가로수 조성·관리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정호영

▣ 시행배경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도시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 녹지이다. 가로수는 도시숲과 하천·공원 등 흩어진 녹지공간을 수림대로 연결하여 동물 이동통로 및 생물 서식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녹음을 제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며, 소음 방지 및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등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등 가로수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부속물로 관리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02.1.2. 산림청 예규499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여 왔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 충돌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에 대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개정·고시('11.12.6, 산림청 고시 제2011-68호)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도시의 선형 녹지축으로써의 녹지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표 4-64〉 최근 5년간 가로수 조성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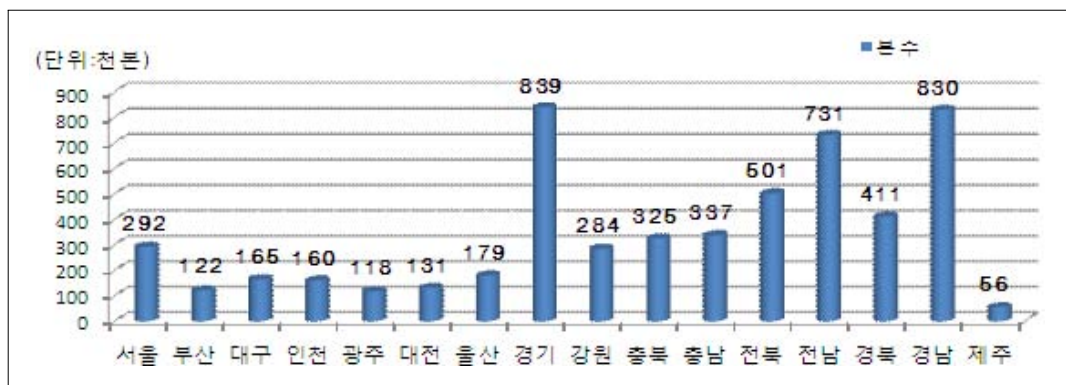
구 분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장거리(km)		1,150	1,478	1,300	1,008
본수(천본)		206	292	279	251	13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가로수 조성

전국의 가로수는 2011년말 현재 5,481천본(35,601km)으로, 2010년 대비 132천본(784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 22%, 은행나무 18%, 느티나무 6%, 양버즘나무 6% 등이다. 시도별 가로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경남, 전남이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65〉 가로수 시도별 현황(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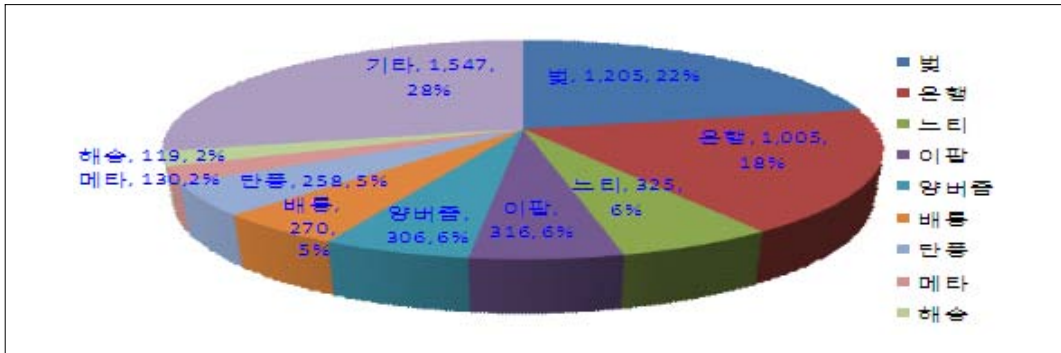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신규 조성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0km씩 증가하고 있으며, 조성시 가장 많이 식재하는 수

종은 벗나무 13.0%, 이팝나무 10.0%, 무궁화와 배롱나무가 각각 6.0% 순이었다. 은행, 양버즘, 느티 등 기존의 주요 수종의 식재가 감소하는 반면, 이팝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등의 식재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는 추세이다.

〈표 4-66〉 수종별 가로수 조성현황(2011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12년

●● 생육환경 개선 등 사후관리

가로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조성된 가로수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협소한 생육공간 및 부적절한 토양으로 뿌리 발달 및 생장이 극히 저조하여 가로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정상적인 수목생장을 도모하고, 투수층의 확대 및 관목식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4-14〉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가로수 수형관리 등 가로경관 창출

산림청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앞으로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그림 4-15〉 특색있는 가로수 가지치기 해외사례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도심상가 간판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 랜드마크화 방안이 행안부 주관 국민생활공감 정책과제로 채택('09.7)되어 가로수가 도시환경에 있어 하나의 요소를 넘어 도시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 미관과 경관을 살리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나아가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수행토록 ‘수형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등 경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6〉 가로수 수형관리 유형 모식도

자연형	준자연형	인공형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향후계획

산림청에서는 가로 녹지의 양과 질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로수의 관리주체가 되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 학교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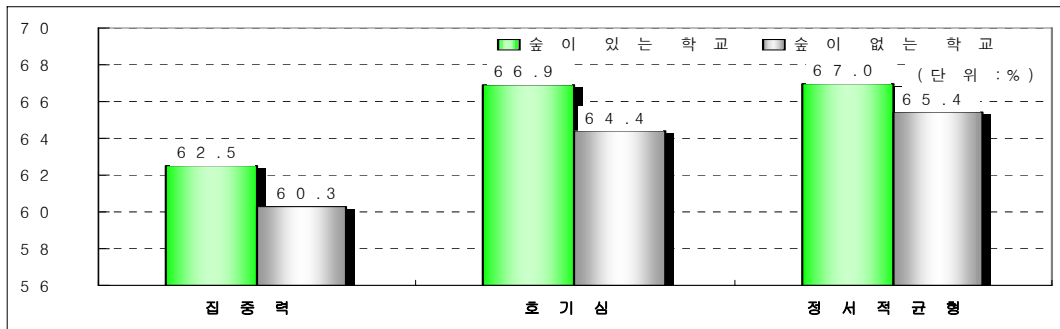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 조병창

▣ 시행배경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주변에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량을 확충하고 학교옥외 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환경친화적인 태도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별도의 토지매입비 없이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4-67〉 학교숲이 미치는 영향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시행내용 및 성과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사)생명의숲에서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산림청에서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957개교를 조성하였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사)생명의숲, 2009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였고, 2010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8〉 학교숲 조성실적

(단위 : 개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규학교	10	20	24	15	127	105	79	116	120	85	109	59	88
누적학교	10	30	54	69	196	301	380	496	616	701	810	869	957

자료 : 산림청 산림보호국, 2012년

2010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지자체간 학교숲 조성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고 있다.

▣ 향후계획

2012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145개교(8,700백만원, 국고 50%)의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5.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가. WTO · DDA 협상에 적극 대응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서기관 이치명

▣ 시행배경

WTO(세계무역기구)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제9차 다자간 통상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통상협상이다.

▣ 시행내용 및 성과

DDA 농업협상은 UR 협상 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환경, 지적권, 규범, 무역 원활화, 개발, 분쟁해결 등 9개 분야에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 한동안 협상이 공전되기도 하였으나 2004년 8월 자유화 세부원칙 기본골격(Framework Agreement)이 합의되면서 협상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12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홍콩에서 개최하여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y)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수출·수입국간의 대립, 비농산물(NAMA)협상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 간 입장차로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2006년 7월에는 국내보조 감축에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세부원칙 도출이 불가능해지자 라미 사무총장은 ‘모든 분야에서 DDA협상 중단(suspend)’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DDA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재개되었다. 4월에는 농업, 비농산물(NAMA), 규범 의장들이 자유화 세부원칙 초안을 제출하여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이러

한 진전을 기초로 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12월 4차례에 걸쳐 의장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특히 2008년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몇몇 쟁점에 대해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 간의 의견 대립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인도 총선 등으로 인해 DDA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G8 정상회의(7.8~10) 및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9.24~25)에서 2010년 DDA협상 타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OECD, APEC 등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가속화를 위한 모멘텀(Momentum)이 형성되었다. 이어 11월 30일~12월 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DDA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2010년 3월에 DDA 현황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하고,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DD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1년 4월 WTO 사무총장은 협상분야별 진행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1년 5월부터는 제8차 WTO 각료회의(12.15~18, 제네바)시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DDA 협상 의제를 중심으로 WTO 사무총장 등을 주축으로 소규모 패키지(December Package) 논의 등 분야별 협상은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므로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 향후계획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이, 비농산물(NAMA) 협상에서는 관세감축 공식, 미양허 품목(합관, 섬유관, PB 등) 처리문제, 분야별 무세화(Sectoral Liberalization) 논의(임산물 Sectoral 협상), 신속 해결 메커니즘(HM), 투명성 등 비관세 장벽(NTBs) 해소가 주요 협상 쟁점이다.

산림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업인, 학계, 협회,

생산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며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서기관 이치명

▣ 시행배경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 특정 국가 간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 FTA를 확대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02년 10월 한-칠레,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2005년 7월 한-EFTA, 2006년 4월 한-아세안 FTA를 타결한 후, 2007년 4월 한-미, 2009년 7월 한-EU FTA, 2009년 8월 한-인도 CEPA, 2010년 8월 한-페루 FTA를 타결하였다. 2011년까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등 7개 국가와 FTA가 발효 중이며, 한-미 FTA는 2011년 12월 국회비준안이 통과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호주, 뉴질랜드, 터키, GCC,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향후계획

임산물 협상 대응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생산자, 전문가, 학계, 단체 등 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산

물 FTA 협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개시 예정인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등에서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상품, 원산지, 해외조림 등 투자 활성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분과, 임산업 글로벌화 및 원목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협력분과 등에 참가하며 협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 해외조림 확대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사무관 차준희

▣ 시행배경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천연림의 별채규제 강화로 목재 수요의 85%(’11년 목재 자급률 15.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목 등 목재 소요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목재의 단순수입 의존은 국민경제의 기본적 수요가 외국 자원에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림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목재 수요의 장기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 산림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해외조림 실적은 254천ha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우루과이 등 12개국에 24개 기업이 진출하여 해외조림사업을 실시중이다. 이 기간 동안 해외조림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조림 및 육림과 가공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1,130억원을 융자지원 하였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44백만원이던 해외조림 사전 투자환경 조사비를 2008년부터 250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해외조림 등 열대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예비전문가 양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외조림 진출기업

의 해외 조림목에 대한 국내 반입은 2000년부터 속성수인 아카시아를 위주로 시작되어 2011년까지 펄프용 칩 412천BDT과 원목 2천m³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식재된 조림목이 벌기령에 도달함으로써 해외 조림목의 국내 반입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조림 투자 촉진을 위해 산림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2006년 8월 1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입업협력 강화를 통해 50만ha의 조림 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6일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MOU’ 체결로 조림 대상지 20만ha를 확보하였고, 2009년 10월 22일 ‘한-캄보디아 산림투자 MOU’ 체결로 20만ha를 확보하는 등 목재자원 선점을 위한 조림 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조림 사전 투자환경 조사비 지원, 융자금리 인하(3%→1.5%)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 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확대(‘11년말 기준 12개국), ODA 프로젝트사업 실시를 통한 산림녹화 기술 전수 등과 연계하여 해외조림 투자기반 구축 및 투자 여건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표 4-69〉 해외조림 추진실적

(단위 : ha)

구 분	연 도					
	계	'93년~'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개국 24개 업체	253,507	141,130	38,523	27,796	20,602	25,456

자료 : 산림청, 2012년

▣ 향후계획

해외조림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산림자원 개발 기본계획(‘08년~’17년)’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정책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의 기반구축을 통하여 2017년까지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림사업을 기존의 목재 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해외 산림자원 확보 사업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인 산림 바이오매스의 새로운 수요처인 해외조림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6절 수산업



1. 연근해어업

■ 어업정책과 사무관 임동규·류민석,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항

▣ 시행배경

1980년대 이후 과잉 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 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서·남해가 해양환경 특성이 상이하고, 어구어법도 지역별, 해역별로 다양하여 동일 수역에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른 지역간, 업종간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UN해양법 발효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9년 수산자원관리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



을적으로 추진하여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약 17천척을 감축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어선세력은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어선은 약 5,400억원을 투입하여 약 15천척을 감축하였고, 근해어선은 약 1조 200억원을 투입하여 약 2,600여척을 감축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해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연근해어선 척수 : ('01년) 67,990척 → ('06년) 63,518척 → ('11년) 49,488척

● 어획량(만톤) : ('01년)125 → ('06년)111 → ('11년)124

척당 생산량은 2001년에는 18.4M/T이었으나 2011년에는 25.0M/T으로 35.9% 증가하였으며, 척당 어로수입은 2001년 3,630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8,980만원으로 147.4% 증가하였다.

●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사업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9,583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213천ha를 시설하였고,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11년까지 1,328억원을 투자하여 1,437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또한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배양장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를 시작으로 2011년 현재 11개 어종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 조사·평가를 토대로 어업인 등과 협의를 통해 이들 어종에 적합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2011년에는 468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3.1천ha

를 시설하고,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 특산 종묘를 생산·방류하였으며, 188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종묘 약 135백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에 방류하였다.

●● 연근해어업 총조사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감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5년마다 어업자원과 어업경영 실태 등에 대해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어선규모·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조업 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 조성, 생식소 숙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 어업 전반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어구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물고기가 얽혀 죽거나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 및 산란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업에서 발생된 폐어구나 폐어망에 의한 어업자원 감소와 해양환경 오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재질의 친환경 어구(PBS : Polybutylene succinate)를 개발하여 2007년부터 자망 및 통발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43억원을 지원하여 대게·꽃게·조기자망어업 약 350척에 대하여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였다.

〈표 4-7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척)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 요 예 산	20	43	39	40	43
지 원 척 수	112	204	128	213	347

▣ 향후계획

앞으로 국내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어업 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률 저감방안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연구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어 및 혼획률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원관리방식으로 전환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어구의 성능과 품질 및 생산단가를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친환경 어구의 사용에 따른 경제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자원관리 증대효과 등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해면양식어업

▣ 양식산업과 사무관 장모인

▣ 시행배경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 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하는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 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양식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 외해양식 활성화

내만 위주의 양식으로 상습적인 적조피해 발생, 어장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교적 어장환경이 양호한 외해양식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06년), 전라남도('07년), 강원도('08년), 경상북도('09), 전라남도('10년) 등 총 6개소에서 시험어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전라남도 및 제주도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외해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외해양식어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까지 외해양식어업 5개소(참다랑어 3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였으며, 외해양식 주요 대상 어종인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였다.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급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8년부터 배합사료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배합사료 사용 비율이 18.2%였던 것이 2011년 21.4%로 상승하였다.

●●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어장에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60개 해역에 대한 등급 설정을 위한 위생조사·평가가 마무리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3개 품목 14개소에서 등록이 이루어졌다.

〈표 4-71〉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연도 \ 품목	합계	2008	2009	2010	2011
소 계	14	3	2	2	7
넙 치	5	3	1	1	-
뱀장어	1	-	-	-	1
송 어	8	-	1	1	6

자료 : 농림수산물부 양식산업과, 2012년

또한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전 품목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16개 품목(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에 대해 1,3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4-72〉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 현황(2011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참여업체	1,321	179	99	19	1,024

자료 : 농림수산물부 양식산업과, 2012년

▣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종합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양식 인프라를 개선하고, 과도한 양식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내수면어업

▣ 시행배경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양식수산물의 양식 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 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 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낚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 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표 4-73〉 낚시어업권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허 가	498	500	502
신 고	211	237	281
합 계	709	737	7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2012년

▣ 시행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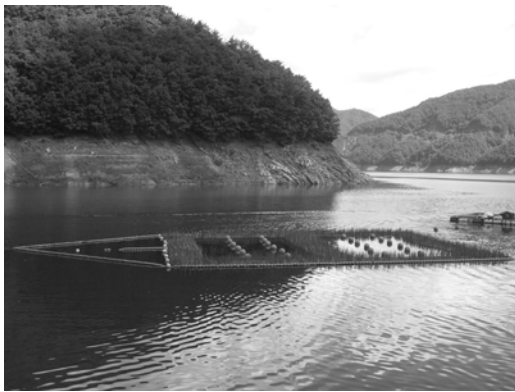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 종묘 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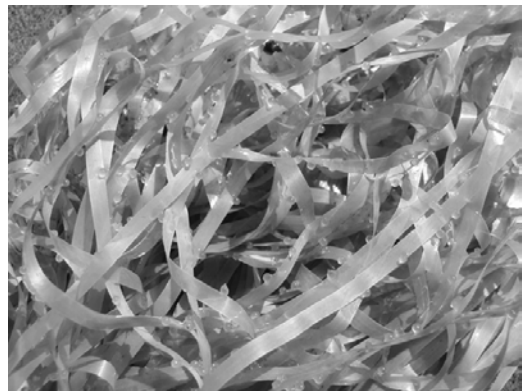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 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 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하고자 2011년에 3개도 15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17〉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 청정 자원생태장 조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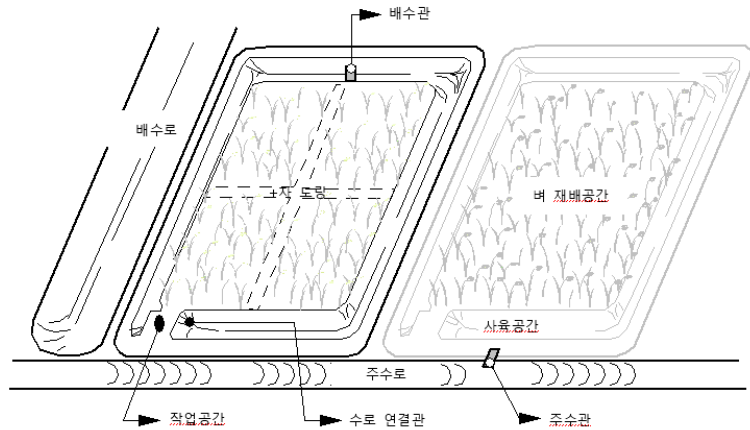
민물고기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태교육이 가능한 전시·체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에 토속어 및 관상어를 이용한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여 수산자원의 중요성 제고와 자연학습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토종종묘 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 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민물고기를 점하고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 보급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09년부터 미꾸라지 중요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으로 참계,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 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18〉 논 생태 양식 개념도



2007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하천의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고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 향후계획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 위기까지 초래하였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의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원양어업

▮ 원양정책과 사무관 구도형

□ 시행배경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주변 국가와의 자원 선점 경쟁 심화 및 국제 규제강화로 원양어업에 관련된 대외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어선과 같은 생산 인프라의 노후화는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생산 인프라의 현대화와 더불어 단순 어업에서 탈피하여 양식, 유통, 가공 등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 수산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2011년에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노후한 참치 선망어선 4척에 대한 대체 건조사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트롤 어선 1척의 선상 설비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원양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양어업이 태동한 이후 최초로 원양산업 전반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산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통계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받았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원을 보유한 연안국과의 상생 발전과 해외에서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을 용자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2개 기업의 해외 수산업 직접 투자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연안국들의 원양산업 관련 정책, 법령, 산업동향, 경제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신규로 20개국의 수산업 투자 진출 정보를 DB화하여 어업인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9년부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어업 등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 교민 8명을 명예수산관으로 임명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점 해결, 투자 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향후계획

2009년부터 시작한 해외 수산투자 기업 지원사업은 중요성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작은 실정이며, 용자 조건이 광물, 농업 등 타 해외자원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용자 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2년에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제옵서버 육성에 적극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제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국제옵서버를 확보하여 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원양 생산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1년 착수한 참치 선망어선 4척과 트롤어선 1척에 대한 선상 설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제2절 교육여건 개선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제1절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1. 일반농산어촌개발

▮ 지역개발과 사무관 안원기

▣ 시행배경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 위한 신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정책방향

- 광역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추진
-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지역발전 노력 및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 강화
- 지자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강화



신(新)지역발전정책 주요내용

〈기본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추진전략〉

- 기초생활권 개발 : 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광역경제권 추진 : 5+2광역경제권 설정
- 초광역권 개발 : 대외 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시행내용 및 성과

초광역권은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내륙벨트 등 5개 권역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은 16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개발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금으로 지원)은 기초생활권 163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28개 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접경도서지역 15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표 5-1〉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경기	평택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합천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첫째, 소도읍 육성을 포함하는 읍·면 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둘째,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 어촌종합개발을 포함하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셋째,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 넷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업농촌 생활용수, 기계화경작로, 지표수 보강, 소규모 용수, 개발촉진지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신활력 지역을 포함하는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내용 측면으로는 기초 생활기반 확충, 주민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표 5-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유형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비고(기존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지원가능 ○ 100억원 범위에서 사업성에 따라 차등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제외한 소득사업은 가급적 지양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기존에 소도읍육성사업,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로 통합하여 시행
권역단위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지역 역량강화 중심 - 지역소득증대 지원가능 ○ 사업기간 : 사업규모에 따라 3년~5년 · 30억미만(3년간), 30억이상~50억미만(4년간), 50억이상(5년간) - 지원규모 : 권역규모에 따라 25억원~70억원 	·권역단위종합정비는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통합 시행 (복합형=농촌형+어촌형+산촌형)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신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부지 100% 확보, 마을정비조합 구성, 입주예정자 80%이상 확보한 지역에 한함 	·신규마을조성사업은 기존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형태임
	기존마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시설 중심 ○ 실비기준지원(한도액 초과시 지방비 부담) 	·기존마을정비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형태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농촌생활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기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이 해당
	농업생산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시설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계화경작로확장,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의 농업기반 지원시설이 해당

〈표 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 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도 로 · 교 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 하 수 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 해 대 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헨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 을 정 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 지 시 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 화 시 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 동 휴 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소득증대	농 업 기 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
	소 득 기 반	농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저온 저장고 등
	체 험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지역경관개선	마 을 경 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 태 · 환 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 시 경 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 육 · 훈 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 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 을 흥 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 대 비 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군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행정지원(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1차 계획 : '10년~'14년)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120개 시·군 971개 내역사업에 9,312억원을 지원하여 22,617인의 신규 인구유입 효과 등을 얻었다.

〈표 5-4〉 201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0	2011
계	973,649	931,198
경기	35,761	44,751
강원	61,878	53,428
충북	86,716	83,090
충남	116,632	119,739
전북	122,185	114,211
전남	215,892	196,664
경북	173,740	115,397
경남	144,314	142,820
제주	16,531	21,09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예산설명서

▣ 향후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각 시·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대상 선정 및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시적인 사업효과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 및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 참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에는 지자체의 사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원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지역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시행배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욕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 촉진 등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에는 총 8,000동(사업비 4,000억원)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표 5-5〉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1
지원물량(세대)	5,600	6,000	7,000	8,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40	40	40	50
융자재원	224,000	240,000	280,000	400,000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8종을 개발하였다.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의 잠재적인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농어촌 생활형 주택으로 개발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감축을 위해 주택 개량사업 물량 중 30%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에게 특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 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한 농어촌 생활형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3.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 환경부 생활하수와 사무관 조석훈

▣ 시행배경

최근 들어 경제 성장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가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의 하수도 서비스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그간 대도시 중심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미흡하여 도·농간 하수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6〉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구 분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국 평 균	85.5	87.1	88.6	88.6	90.1
농어촌 지역	42.9	45.7	49.2	49.2	55.2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계획 중에서 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하거나 소하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2007~2011년 5년간 1,762개 시설에 국고 1조 643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마을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천 수질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표 5-7〉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예산 반영현황

(단위 : 억원, 개소)

구 분 \ 연 도	합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 업 비	10,643	1,949	1,825	2,428	2,106	2,335
개 소 수	1,762	336	415	361	285	365

▣ 향후계획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2012년 314개 시설에 국고 2,543억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09.12)에 따라 2020년까지 2조6,268억원을 투자, 소규모 하수도 시설 3,707개소(신설, 개량 포함)를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4. 하수처리 등 환경 개선사업

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 사무관 김 영

▣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에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국고 70%)하여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57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에는 80억원을 지원하여 11개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각 및 재활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각열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회수로 지역사회의 에너지 자급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5-8〉 2011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	2011년 예산(A)	2011년 집행내역				집행율 (B/A)
		예산현액	집행액(B)	차년이월	불용액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8,392	8,392	8,392	0	0	100

자료 : 환경부, 2012년

▣ 향후계획

2014년까지 251억원을 추가로 투자(신규 19개소, 계속 17개소)하여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를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무관 손중훈

▣ 시행배경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하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1998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88년부터 2010년까지 1,421억원(원인자 부담액(30%) 포함)을 투자하여 134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2011년에는 372억원을 투자하여 67개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 향후계획

2012년에는 684억원을 투자하여 39개소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2013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신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38개소(계속사업 24개소, 신규사업 14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 시행배경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 배출하거나 무단방류로 인한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환경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시 사업비를 국비 지원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8,658억원(국비 기준)을 투자하여 전국에 78개소(9,860m³/일)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33개소(3,596m³/일)의 시설을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아울러 퇴·액비화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파주 등 13개 자원화 시설을 운영 중이고, 추가로 영주 등 13개 시설을 설치 중이다. 이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체계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향후계획

가축분뇨 선진화 종합대책을 토대로 2020년까지 100개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율 50% 달성)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13년 10개 시범사업:지역단위 통합센터 7개소,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3개소)하여 자원화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 기반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표 5-9〉 가족분뇨 처리현황(2010년)

(단위 : 천톤/일)

구분	계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계	퇴비	액비	계	공공	농가	
전체	134.1 (100)	117.4 (87.6)	107.3 (80.0)	10.1 (7.6)	13.7 (10.2)	9.8 (7.3)	3.9 (2.9)	3 (2.2)
돼지	57.1 (100)	40.4 (70.8)	30.3 (53.1)	10.1 (17.7)	13.7 (24.0)	9.8 (17.2)	3.9 (6.8)	3 (5.3)

자료 : 환경부, 2011년

5.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유혁란

▣ 시행배경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독거가구 증가로 인한 노인 부양 및 농촌가족 문제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의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 농어촌 고령화율 : 14.7%('00년) → 20.6%('10년) → 27.8% ('20년)
- 전국 노인독거가구의 41.3%가 농어촌에 거주
-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 건강>경제>소외감>소일거리 없음('11년 통계청)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노인(65세 이상)과 예비노인(60~65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개선, 소득경제 활동 등 4개 영역을 노인의 체력과 능력에 알맞게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촌마을 활력화에 기여하고, 마을주민이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다. 또한 교육, 사업연찬회,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우수실천마을 경진, 평가회 등 다양한 사업을 마을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확대 지원

건강한 노년생활 모델인 농촌건강장수마을은 20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58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2016년까지 1,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한 노인보호 체계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우수 추진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5-10〉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사 업 량	연간 추진마을	100	300	350	334	141	150	148	
	연차별 지원개소	1년차 100	1년차 200	1년차 50	1년차 84	1년차 7	1년차 59	1년차 82	582
			2년차 100	2년차 200	2년차 50	2년차 50	2년차 84	2년차 7	2년차 59
			3년차 100	3년차 200	3년차 50	3년차 84	3년차 7	441	
사업비		42	150	160	167	71	75	74	739

* 개소당 50백만원씩 3년간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 노인체조 DVD 및 농촌형 노인돌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농업인 건강체조인 비타민 체조를 개발하여 DVD로 제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건강장수마을에 1,200개를 배부하였고, 각 도별로 장수마을 중간지도자 양성 체조교육을 2011년 10월 31일~11월 28일 기간 동안 582마을 834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을 활용한 노인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형 노인돌봄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3종, 600부를 사업대상 마을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하였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고 전년도 사업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기반을 구축, 중장기적 사업방향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2011년 사업성과 분석 결과, 2005년 55.4%에서 72.1%로 대상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인근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63.4%보다 8.7%가 높게 조사되었다.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횟수는 2006년 6.1회에서 2011년 8.4회로 평균 2.3회 향상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의 변화의지, 협동심, 자부심, 소속감, 친밀도등도 81.7%로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활력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 생활만족도 결과〉

(’05년) 55.4 → (’06년) 57.6 → (’07년) 64.2 → (’08년) 65.2 → (’09년) 69.5 → (’10년) 71.5 → (’11년) 72.1%

▣ 향후계획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참여자의 자질 개발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학습,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지역 노인의 맞춤형 건강생활체조인 비타민 체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역량 개발 및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돌봄 공동체 운영을 통해 농촌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농촌노인 문화를 지역사회 중심 문화로 복원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교육여건 개선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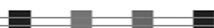
▮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와 사무관 최윤정

▣ 시행배경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1996학년도 도입 시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 가능하였으나, 1997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의 3%, 2006학년도부터는 입학정원의 4%로 확대하였으며, 학생선발 여부 및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표 5-1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학생선발 현황

연 도	대학수	모집인원	선발인원
2007학년도	193개교	13,303명	11,857명
2008학년도	186개교	13,270명	11,363명
2009학년도	190개교	12,580명	10,859명
2010학년도	192개교	12,793명	11,449명
2011학년도	192개교	12,839명	11,625명
2012학년도	193개교	12,742명	11,695명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 향후계획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우리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촌 학생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특히 우수한 학생의 유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이 실질적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시행배경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사업은 UR 타결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된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자금 용자 지원사업은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용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용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하고 용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후 부터('11년부터 거치기간 연장 1년→2년) 1학기 분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용자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 동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정부가 605억원을 출연하여 33,273명을 대상으로 1,103억원(상환금 채용자액 포 함)을 용자 지원하였다.

〈표 5-1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 도	구 분	출연금	용자현황	
			인원수	금액(채용자액 포함)
'94		8,000	1,724	1,712
'95		22,000	19,177	19,089
'96		20,000	19,301	19,252
'97		12,400	19,936	19,849
'98		15,100	19,563	19,396
'99		17,300	20,123	19,579
'00		30,550	20,650	20,476
'01		18,000	18,017	25,023
'02		15,000	15,911	23,764
'03		4,000	19,649	36,698
'04		2,100	26,424	60,652
'05		12,733	25,206	63,702
'06		48,288	24,964	67,664
'07		44,097	26,333	76,942
'08		41,260	26,721	83,843
'09		47,500	28,962	92,916
'10		50,521	31,093	101,216
'11		60,482	33,273	110,295

자료: 한국장학재단, 2012년

▣ 향후계획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등 원격 대학을 학자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수혜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진흥과 사무관 이성덕

▣ 시행배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농림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농어촌특별회계,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포괄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총 건립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지원된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13개관에 9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15개관 건립에 11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식정보 서비스,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들의 문화향수권 및 지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전국 읍면 지역에 268개관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표 5-13〉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관수)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	45	45	40	21	25	20	20	20	35	104	99	99	56	97	114	146	110
도서관수	9	9	8	6	5	4	4	4	7	13	17	13	11	14	17	19	15

▣ 향후계획

2012년에는 11개관 건립에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3절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시행배경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율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 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5-1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 천세대, 억원)

구 분 \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 고 지원율	8%	18%	28%	28%	28%	28%	28%	28%
월 평 균 지원세대	606	603	521	504	484	457	435	413
지원예산	340	666)	1,340	1,431	1,559	1,559	1,516	1,71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 향후계획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무관 신재귀

▣ 시행배경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노령 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 교통사고 및 기계 사고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농어촌지역의 의료 수요는 매우 높는데 반해 민간 의료기관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의 대부분은 공공 보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은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625억원을 확보하여 196개소, 2010년에는 625억원으로 217개소, 2011년에는 589억원으로 235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율이 63.5%에 이르고 있다.

〈표 5-15〉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율 ('94년~'11년)

구 분	대상기관 수 (개소)	지원현황 (개소)	개선율 (%)
보건소	150	121	80.7
보건지소	1,257	965	76.8
보건진료소	1,871	997	53.3
전 체	3,278	2,083	63.5

▣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미개선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 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중점을 기울일 것이다.

나. 의료취약지역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무관 신재귀

▣ 시행배경

의료시설 및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도서, 오·벽지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균점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리’ 단위에 본격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1,871여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향후계획

농어촌지역 노인인구의 증가, 다문화 가정,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와 보건진료원 선발 및 교육, 배치기준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현숙

▣ 시행배경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무의촌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 균형을 통한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되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1차 책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1년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4,545명(의과 2,903명, 치과 613명, 한의과 1,029명)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429명(75.4%), 국공립병원에 439명(9.6%)이 근무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및 응급처치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표 5-16〉 2011년도 공중보건 의사 신규배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1년			
	합계	의과	치과	한 의과
합 계	1,318	809	189	320
보건소	425	205	94	126
보건지소	667	416	76	175
병원선	17	7	5	5
이동진료반	2	1	0	1
국.공립병원	87	78	2	7
응급의료센터 및 지정병원	18	18	0	0
취약지병원	7	7	0	0
정부지원민간병원	4	4	0	0
복지시설	11	10	0	1
교정시설 등	40	30	10	0
보건단체	2	2	0	0
응급의료정보센터	11	11	0	0
국가보건기관	27	20	2	5

▣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농어촌지역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취약성 및 보건 의료 수요 분석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4절 농어업인 연금 지원 및 여성·취약농가 인력지원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시행배경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시행내용 및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2011년 현재 월 평균 256천명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 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 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 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표 5-17〉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단위 : 천원, 원)

연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790천원
지원금액 (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9,900~ 35,550

주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12년

〈표 5-1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실적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861	98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향후계획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 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기여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최승묵

▣ 시행배경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층의 농어업인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도입되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시설 미이용(자가 보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28천명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다. 시설 이용 아동 14천명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의 경우는 14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단가의 45%를 지원하였다.

〈표 5-19〉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천명, %)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액(국비)	146	192	316	430	494	419	31	24
지원인원	27	30	56	57	66	53	41	28
·시설			33	35	40	29	22	14
·시설미이용			23	22	26	24	19	14
지원율								
·시설	50%	50%	50%	70%	70%	70%	70%	70%
·시설미이용			25%	35%	35%	35%	35%	45%

주 : 지원액은 국고(50%)기준이며, 지방비 부담도 50%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 향후계획

농어촌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자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주관)이 무상보육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보육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어촌의 경우 보육 수요는 있으나 적정 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의 보육시설 진입이 제한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놀이차량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돌봄센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농어촌사회과 사무관 김병준

▣ 시행배경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농어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어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어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 실시 후 2006년부터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시행내용 및 성과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69세, 5ha 미만,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 부터는 5일 이상 입원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11년도에는 14천 농가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 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어가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2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경로당까지 확대하였으며, 14천 농가에 11억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5-20〉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원)

구 분 연 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08	29	5,792	13	4,732	16	1,060
'09	31	5,992	12	4,732	19	1,260
'10	28	6,520	13	5,460	15	1,060
'11	28	6,300	14	5,460	14	1,060

자료 : 농협중앙회, 2012년

▣ 향후계획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일수 증가, 지원단가 상향조정, 지원대상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농림수산업 구조조성사업시행내용보고서

2012년 월 일 인쇄

2012년 월 일 발행

발행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01-1718

디자인 및 인쇄 거성커뮤니케이션 (031)421-6063
